

정치와 법 기출 문제 (2106~2606)

- (1)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2p
- (2) 법치주의 6p
- (3)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10p
- (4) 기본권 14p
- (5) 정부 형태 18p
- (6) 우리나라 헌법 기관 24p
- (7) 법원과 헌법재판소 29p
- (8) 지방 자치 33p
- (9) 정치 과정과 정치 참여 37p
- (10) 정치 참여 집단 39p
- (11) 민법 vs 형법 43p
- (12) 민법의 기본 원칙 44p
- (13) 계약 48p
- (14) 손해 배상(채무 불이행, 불법 행위) 52p
- (15) 가족 관계와 법 56p
- (16) 죄형 법정주의 60p
- (17) 범죄의 성립 요건 62p
- (18) 형사 절차 + 인권 보장 제도 65p
- (19) 미성년자의 근로 + 근로자의 권리 구제 70p
- (20)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74p
- (21) 국제법의 법원(法源) 78p
- (22)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79p

- [선거구] 82p

(1)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1.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는 무엇보다도 행위 주체에 대한 상이한 구분에서 비롯된다. A는 정치권력의 획득·유지·행사와 관련된 국가만의 고유한 활동을 정치로 본다. 반면, B는 국가를 포함한 모든 사회 집단 내에서 구성원 간의 이해 충돌을 조정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을 정치로 본다.

- ① A는 시민 단체의 의사 결정 과정과 국회의 의사 결정 과정을 모두 정치로 본다.
- ② A는 격화되는 무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각 부처의 외교적 노력을 정치로 보지 않는다.
- ③ B는 연금 제도 개혁을 둘러싼 세대 간의 갈등을 해결하려는 정부의 정책 수립 과정을 정치로 보지 않는다.
- ④ A에 비해 B는 정치의 행위 주체가 다양하다고 본다.
- ⑤ B에 비해 A는 복잡하고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용이하다.

[260601]

1.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에는 A, B가 있습니다. A는 모든 사회 집단 내에서 구성원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을 정치라고 보지만, B는 정치권력의 획득·유지·행사와 관련된 국가의 고유한 활동만을 정치라고 봅니다. A, B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볼까요?

A와 B는 모두 (가) 을/를 정치로 보고 있지만, A는 (나) 을/를 정치로 본다는 점에서 B와 구별됩니다.

- ① A는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 ② B는 행정부의 정책 수립과 집행을 정치로 보지 않는다.
- ③ A에 비해 B는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 ④ (가)에는 '대통령이 조약을 체결·비준하는 것'이 들어갈 수 있다.
- ⑤ (나)에는 '축구 동호회에서 신입 회원 가입 조건을 둘러싼 의견 대립을 조율해 나가는 것'이 들어갈 수 없다.

[251101]

1. 정치를 바라보는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는 모든 과정이 정치라고 생각해요. 학교 동아리에서 명칭 변경을 둘러싼 회원들 간 대립을 자율적인 토론으로 해결한 것도 정치로 볼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행정부의 정책 집행, 입법부의 법률 제정과 같이 국가 차원의 권력 행위만을 정치로 볼 수 있어요.

- ① 갑의 관점은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강제력이 수반되는 활동만을 정치로 본다.
- ② 을의 관점은 지방 자치 단체장 선출 과정을 정치로 보지 않는다.
- ③ 갑과 달리 을의 관점은 시민 단체의 환경 운동을 정치로 본다.
- ④ 을에 비해 갑의 관점은 현대 사회의 다양한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 ⑤ 갑과 을의 관점 모두 국가 원수의 외교 활동을 정치로 보지 않는다.

[250901]

1. 정치를 바라보는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산악회에서 회비 인상을 둘러싼 회원 간의 갈등을 의견 수렴을 통해 해결하는 과정을 정치로 볼 수 있을까요?

정치로 볼 수 없습니다. 정치는 정치권력을 획득, 유지, 행사 하는 국가의 고유한 활동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정치로 볼 수 있습니다. 정치는 모든 사회 집단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 ① 갑의 관점은 학급의 의사 결정 활동과 국회의 의사 결정 활동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본다.
- ② 을의 관점은 국가 예산안에 대한 국무 회의의 심의 과정을 정치라고 본다.
- ③ 갑과 달리 을의 관점은 정치가 사회 통합과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고 본다.
- ④ 을에 비해 갑의 관점은 정치의 주체가 다양하다고 본다.
- ⑤ 갑과 을의 관점 모두 국가 성립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250601]

1. 정치를 바라보는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미술 협회에서 AI 기술을 활용한 작품에 대한 시상 여부를 둘러싼 갈등을 회원들 간 자율적 협의를 통해 해결한 사례는 정치로 볼 수 있어. 정치란 다양한 집단이나 개인 간 발생한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활동이기 때문이야.



내 생각은 달라. 정치란 정치권력의 획득·유지·행사와 관련된 국가의 고유한 활동만을 의미하므로 그 사례는 정치로 볼 수 없어.

- ① 갑의 관점은 국회가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것을 정치로 보지 않는다.
- ② 을의 관점은 다른 사회 집단의 활동과 구별되는 국가 활동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 ③ 갑과 달리 을의 관점은 다원화된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갈등 해결 과정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 ④ 을과 달리 갑의 관점은 행사 준비 과정에서 초대 가수 선정을 둘러싼 의견 대립을 조율하기 위한 학생회 회의를 정치로 본다.
- ⑤ 갑과 을의 관점 모두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용이하다.

[241101]

1. 정치를 바라보는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반려견 동호회 회원들이 그동안 의견 대립이 있었던 회장 선출 방식을 투표로 결정한 사례를 정치로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다양한 사회 집단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모든 활동을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례를 정치로 볼 수 있습니다.

제 생각은 다릅니다. 정치는 정치권력을 획득, 유지, 행사하는 국가 고유의 활동만을 의미하므로 해당 사례를 정치로 볼 수 없습니다.



- ① 갑의 관점은 '음주 운전자 처벌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국회의 ○○법 개정안 의결 과정'을 정치로 보지 않는다.
- ② 을의 관점은 '학급 회의를 통해 수학여행 장소를 결정하는 과정'을 정치로 본다.
- ③ 갑과 달리 을의 관점은 정치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 ④ 을과 달리 갑의 관점은 다른 사회 집단과 구분되는 국가만의 고유한 특수성이 존재한다고 본다.
- ⑤ 을에 비해 갑의 관점은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240601]

1. 정치를 바라보는 갑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치를 정치권력의 획득과 유지를 위한 국가의 고유한 활동만으로 한정하여 생각한다면 정치의 본질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정치는 서로 대립적인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적절한 수준의 타협점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국가를 포함한 모든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 ① 국가라는 정치 주체에 국한하여 정치의 의미를 규정한다.
- ②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 ③ 국회가 국가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과정을 정치로 보지 않는다.
- ④ 국가가 형성되기 이전의 정치 현상에 대해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 ⑤ 국가와 국가 이외의 다양한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정치 현상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본다.

[240901]

1. 정치를 바라보는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등학교 학생회가 학교 축제 운영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는 합리적 방안 모색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는 활동을 정치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정치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정치란 국가 수준에서 나타나는 특유의 현상으로 국가의 권력적 행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정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는 모든 사회 집단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 나가는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 ① 갑의 관점은 국가의 의사 결정 활동과 국가 이외 사회 집단의 의사 결정 활동을 모두 정치라고 본다.
- ② 을의 관점은 사회 집단 내에서 권력이 형성·분배되는 과정을 정치라고 보지 않는다.
- ③ 갑의 관점과 달리 을의 관점은 국가의 공권력 행사를 통한 사회 질서 유지와 갈등 해결 과정을 정치라고 본다.
- ④ 을의 관점에 비해 갑의 관점은 한정된 자원 배분과 관련된 갈등 해결 과정에 참여하는 정치 주체가 더 다양하다고 본다.
- ⑤ 갑의 관점과 을의 관점 모두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활동을 정치라고 본다.

[231101]

1.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는 국가를 포함한 모든 사회 집단 내에서 구성원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을 정치라고 본다. 한편, B는 물리적 강제력에 의해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국가의 고유한 활동만을 정치라고 본다.

- ① A는 학생회 회의에서 급식 잔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정치라고 보지 않는다.
- ② B는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 ③ A에 비해 B는 사회적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가 다양하다고 본다.
- ④ B와 달리 A는 복잡하고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 ⑤ A, B 모두 국회가 국회 의원 지역구를 확정하는 것을 정치라고 본다.

[230901]

1.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교사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에는 A, B가 있습니다. A는 정치권력의 획득·유지·행사 과정과 관련된 국가 고유의 활동만을 정치라고 봅니다. B는 국가를 포함한 모든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 나가는 활동을 정치라고 봅니다.

A에서는 정치로 보지 않는데 B에서는 정치로 보는 사례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학생

(가) 을/를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교사

- ① A는 시민 단체 내의 의사 결정 과정을 정치로 본다.
- ② B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정치로 보지 않는다.
- ③ A에 비해 B는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용이하다.
- ④ B에 비해 A는 국가 성립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용이하다.
- ⑤ (가)에는 '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급 회의 과정'이 들어갈 수 없다.

[230601]

1.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는 정치권력의 획득과 유지 및 행사 과정에서 공동체의 목표를 추구하고 정책을 결정하며 사회 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국가의 고유한 활동만을 정치라고 보았다. 그러나 시민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정치 행위자가 다양해졌고, 이러한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여 정치가 국가 차원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이외의 사회 집단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라는 한정된 영역을 넘어 공동의 의사를 실현하기 위해 개인이나 집단 간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정치라고 보는 B가 등장하였다.

- ① A는 층간 소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 주민 회의에서 자치 규약을 만드는 과정을 정치라고 본다.
- ② B는 국회가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정치라고 보지 않는다.
- ③ A는 B에 비해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 ④ B는 A와 달리 다른 사회 집단과 구분되는 국가만의 특수성이 존재한다고 본다.
- ⑤ A, B는 모두 물리적 강제력을 독점한 통치 기구가 희소한 자원을 배분하는 과정을 정치라고 본다.

[221101]

1. 정치를 바라보는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치와 법 E-class

○○신문

△△아파트 주민 자치회
주차 문제 해결 모범 사례

△△아파트 주민 자치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차 문제 관련 규약을 만들어 주차 관리 위원회를 신설하고, 이를 통해 주차 문제로 발생하는 주민 간 갈등을 해결하고 있다.

교사

기사에서 소개하는 주민 자치회 활동을 정치라고 볼 수 있을까요?

갑

정치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정치는 국가 차원에서 나타나는 고유한 현상이며 정치권력의 획득과 유지를 위한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을

정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는 모든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며 집단의 공동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으로 누구나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① 갑의 관점은 이익 집단 내 구성원들 간의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정치로 본다.
- ② 을의 관점은 국회 의원의 입법 활동을 정치로 보지 않는다.
- ③ 갑의 관점은 을의 관점에 비해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 ④ 갑, 을의 관점 모두 이해관계의 조정과 갈등의 해결을 정치의 기능으로 본다.
- ⑤ 갑, 을의 관점 모두 국가 형성 이전에 나타난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220901]

1.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A는 정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행사하는 과정과 관련된 국가 고유의 활동만을 정치로 본다. 한편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국가를 포함한 모든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해결하는 일체의 과정을 정치로 본다.
- ①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정치로 본다.
 - ② 임금 인상에 대한 노사 간 협상 과정을 정치로 본다.
 - ③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 ④ 다른 사회 집단의 활동과 구별되는 국가 활동의 특수성을 부정한다.
 - ⑤ 다양한 사회 집단이 내부 이해관계의 대립을 자체적으로 조정 해가는 과정을 정치로 본다.

[220601]

1.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A, B에 대한 질문에 모두 옳게 응답한 학생은?

A는 국가 공동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국가 고유의 활동만을 정치라고 봅니다. 반면 B는 국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집단 내에서 구성원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활동도 정치라고 봅니다.

교사

(○ : 예, × : 아니요)

질문	학생	갑	을	병	정	무
A는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한가?		×	×	×	○	×
B는 국가의 정치 현상과 국가 이외 사회 집단의 정치 현상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는가?		×	○	×	×	×
A에 비해 B는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한가?		○	×	○	×	×
B와 달리 A는 정치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행사 하는 활동을 정치라고 보는가?		×	×	○	○	×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211101]

1. 정치를 바라보는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복장 규정을 둘러싼 학교 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 구성원이 모여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여 교칙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정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치는 국가 권력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국가 고유의 활동입니다. 따라서 학교 내에서 교칙을 개정하는 과정은 정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정치는 다양한 사회 집단 내에서 구성원의 서로 다른 의견을 조정하여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교칙을 개정하는 과정 역시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사

- ① 갑의 관점은 국가 형성 이전에 나타나는 정치 현상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
- ② 을의 관점은 국가의 정치 현상과 사회 집단의 정치 현상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본다.
- ③ 갑의 관점은 을에 비해 정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가 다양하다고 본다.
- ④ 을의 관점은 갑에 비해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갈등 해결 양상을 설명하기에 용이하다.
- ⑤ 갑, 을의 관점 모두 시민 단체가 정부 정책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고 본다.

[210901]

1. 정치를 바라보는 갑~병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교복의 디자인을 변경하기 위해 학생, 학부모, 교사의 대표가 우리 학교에 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를 하는 것도 정치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는 모든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며 이해관계의 대립을 조정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정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정치는 정치 권력을 획득, 유지, 행사 하는 국가 고유의 활동만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교사 갑 병 을

(가)

- ① 갑의 관점은 국가 형성 이전에 나타난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 ② 을의 관점은 복잡하고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 ③ (가)에 '갑의 관점에 동의합니다.'가 들어간다면 병은 소수 통치 엘리트에 의해서만 정치가 이루어진다고 볼 것이다.
- ④ (가)에 '을의 관점에 동의합니다.'가 들어간다면 병은 노동조합이 새로운 규정을 정하기 위해 회사 내에서 회의를 하는 것을 정치로 볼 것이다.
- ⑤ 갑, 을의 관점은 모두 국회 의원의 입법 활동과 대통령의 국무 회의의 주재를 정치라고 본다.

[210601]

(2) 법치주의

2. 법치주의의 유형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우리 헌법에 규정된 조세 법률주의는 단순히 조세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보는 A를 넘어, 조세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내용도 정의에 부합해야 한다고 보는 B를 지향한다. 따라서 조세 법률주의는 세금을 부과하는 요건을 법률로 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법률이 헌법적 가치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① A는 통치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실질적 정당성도 중시한다.
 ② B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정된 법률이라도 위헌 법률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③ A와 달리 B는 통치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법에 구속되어야 한다고 본다.
 ④ B와 달리 A는 법률에 근거해서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본다.
 ⑤ A와 B 모두 행정 작용과 달리 입법 작용과 사법 작용은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고 본다.

[260602]

2. 법치주의의 유형 A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형벌은 범죄에 대한 법률 효과로 국가가 범죄인에게 책임을 기초로 부과하는 법익의 박탈을 의미한다. 형벌권의 주체는 국가이지만 입법자가 범죄의 유형 및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미리 성문의 법률로 규정해야, 이에 근거한 국가의 형벌권 행사는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입법자가 선택한 형벌이 구성 요건에 기술된 불법의 내용에 상응하지 않거나 행위자의 책임에 상응하지 않을 정도로 과도한 경우에, 이는 법률의 내용이 정의에 합치될 것을 요구하는 A에 따라 용인될 수 없다. 이러한 형벌 규정은 법률의 외관을 띠고 있으나 '법률적 불법'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보 기>
 ㄱ. 죄형 법정주의의 내용인 적정성의 원칙을 강조하는 근거가 된다.
 ㄴ. 입법자의 자의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청한다.
 ㄷ. 정의에 부합하는 경우라면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국가 권력 행사도 정당화된다고 본다.
 ㄹ. 합법적 절차를 거쳐 제정된 법률이 국가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51102]

2. 법치주의의 유형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국가 작용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기초 하기만 하면 된다고 보는 A는 법 그 자체의 목적과 내용이 정당 한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 반면, 법률의 정당성이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이념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보는 B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되고 정의에도 합치되는 법률에 따라 국가 작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 ① A에 따르면 범죄와 형벌 간에는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 B는 합법적 독재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③ A와 달리 B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로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본다.
 ④ B와 달리 A는 위헌 법률 심사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⑤ A와 B 모두 행정 작용과 사법 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고 본다.

[250902]

2.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A와 B 모두 (가) 는 점에서 법치주의의 일반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법치주의의 유형으로 볼 수 있지만, A는 (나) 는 점에서 B와 구별된다. 극도로 부정의한 법률은 법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는 입장이 등장 하게 된 것은 B만으로는 법치주의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던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된다. B는 의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된 법률이면 법으로서 효력을 인정하지만, A는 법률의 내용이 정의에 합치될 것까지도 요청한다.
- <보 기>
 ㄱ. A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에 대해 헌법상 과잉 금지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근거가 된다.
 ㄴ. B는 입법자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간과한다.
 ㄷ. (가)에는 '법률로 금지되는 행위와 이를 위반할 경우의 법적 효과를 미리 규정하도록 하여 법적 안정성을 보장한다'가 들어갈 수 있다.
 ㄹ. (나)에는 '국가 권력에 의한 기본권 제한 시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두도록 요청한다'가 들어갈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250602]

2. 법치주의의 유형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A에 따르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 그 자체에 의한 통치가 강조되어, 정당하지 않은 법률에 의한 통치도 가능하였다. 반면 B는 법률의 내용도 정의에 부합할 것을 요구하여, 입법자도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이념에 구속되도록 한다.

- ① A는 행정 작용이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고 본다.
- ② B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보다 통치의 합법성을 중시한다.
- ③ A와 달리 B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된 법률이라면 국민을 구속할 수 있다고 본다.
- ④ B와 달리 A는 위헌 법률 심사제의 도입을 옹호한다.
- ⑤ A와 B 모두 명목상 법률에 의해 통치 질서가 확보되는 것만으로도 기본권 보장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241102]

2. 법치주의 유형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죄형 법치주의는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라는 종래의 의미에서 “적정한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라는 현대적 의미로 발전하였다. 이는 법에 의한 통치뿐만 아니라 법률의 목적과 내용도 정의에 부합해야 함을 강조하는 A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역사적으로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제정된 법률만 있으면 법률의 목적이나 내용과 관계없이 그에 따른 국가 권력 행사가 정당화된다고 보는 B로 인해 형법의 보장적 기능이 충분히 수행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에 기인한다.

- ① A는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유지되어야 함을 요구한다.
- ② B는 법익 보호라는 형법의 보호적 기능을 인정하지 않는다.
- ③ A와 달리 B는 입법자의 자의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
- ④ B와 달리 A는 위헌 법률 심사제의 필요성을 간과한다.
- ⑤ A와 B 모두 법률에 근거해서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본다.

[240902]

2. 법치주의의 유형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류는 명목상 법률에 의하기만 하면 법치주의를 준수한 것으로 보는 A로 인해 독재가 합법화되고 기본권을 유린당한 역사적 경험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국가 작용이 법률에 근거해야 할 뿐만 아니라 법률의 목적과 내용도 정의에 부합해야 한다는 B가 등장하게 되었다.

- ① A는 국가 권력 행사 시 법률에 근거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② B는 헌법보다 법률이 우위에 있음을 강조한다.
- ③ 우리나라에서 기본권을 제한할 때 준수해야 하는 과잉 금지의 원칙은 B의 실현에 기여한다.
- ④ A와 달리 B는 통치의 형식적 합법성을 확보해야 함을 강조한다.
- ⑤ B와 달리 A는 국가 권력으로부터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40602]

3. 법치주의를 바라보는 관점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는 국가 권력 작용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합법적 절차에 따라 제정되었다면 그 내용과 관계없이 정당하다고 본다. 반면 B는 법률이 절차적 합법성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 정의에도 부합해야 한다고 본다.

- ① A는 합법적 절차를 거쳐 제정된 법률일지라도 시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다.
- ② B는 법률이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다.
- ③ A와 달리 B는 국가 기관의 구성과 운영이 의회가 미리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고 본다.
- ④ B와 달리 A는 국가 권력으로부터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⑤ A와 B 모두 행정 작용과 달리 입법 작용과 사법 작용은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고 본다.

[231103]

2. 법치주의의 유형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통치자의 자의에 의해 권력이 행사되었던 ‘인치(人治)’를 대신하여 국가 권력이 법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는 ‘법치(法治)’가 나타났다. 그러나 의회에서 제정된 법률이 시민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건들을 겪은 뒤 A만으로는 민주주의나 시민의 자유를 지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각성이 있었다. 단순히 ‘사람이 아닌 법’만으로는 법치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없음을 알게 되었고, 정의에 합치되지 않은 법률은 법으로서의 본질을 결여한 것임을 뒤늦게나마 깨달았다. 이러한 깨달음으로 인해 절차적 합법성뿐만 아니라 실질적 정당성도 갖는 B를 요구하게 되었다.

- ① A는 입법자에 의해서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음을 간과한다.
- ② B는 국가 권력 행사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존재만을 요구할 뿐 그 내용은 문제 삼지 않는다.
- ③ A와 달리 B는 합법적 독재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 ④ B와 달리 A는 국가 권력으로부터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⑤ B와 달리 A는 법률의 목적과 내용이 헌법에 부합할 것을 요구하므로 위헌 법률 심사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230902]

4. 법치주의를 바라보는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된 법률이라도 그 내용이 인간의 존엄성과 실질적 정의에 합치되지 않는다면 그 법률에 따른 국가 권력 행사는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입법에 필요한 모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제정된 법률이라면 그 법률에 의한 국가 권력 행사는 정당화된다고 생각합니다.

- ① 갑의 관점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법치주의의 목적을 간과한다.
- ② 을의 관점은 통치의 형식적 합법성뿐만 아니라 실질적 정당성까지 확보해야 함을 강조한다.
- ③ 을의 관점과 달리 갑의 관점은 법률의 내용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판할 수 있는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다.
- ④ 갑의 관점, 을의 관점 모두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통치자가 법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
- ⑤ 법치주의는 역사적으로 갑의 관점에서 을의 관점으로 변천해 왔다.

[230604]

3. 다음 자료는 서술형 평가 문항 및 답안에 대한 채점 결과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와 B는 각각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중 하나이다.) [3점]

【문항】 A와 구별되는 B의 특징을 3가지만 쓰시오. [옳은 서술 하나당 1점씩, 총 3점] 【답안】 ○ 법률에 근거한 합법적 독재가 가능하다. ○ 법률을 통해 국가 권력을 제한하고자 한다. ○ (가)	
채점 결과	2 점

- ① A는 법률의 제정 과정에서 형식과 절차만을 강조한다.
- ② A는 통치의 형식적 합법성과 함께 실질적 정당성도 강조한다.
- ③ B는 통치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법에 구속되어야 한다고 본다.
- ④ B는 A와 달리 위헌 법률 심사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 ⑤ (가)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때 법적 근거를 강조한다.’가 들어갈 수 있다.

[221103]

2. 다음 주장에 부합하는 법치주의 유형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법치에 입각해 국가 권력이 분립되고 국가 활동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확보된다면, 법이라는 형식에 의한 통치 질서로 인해 최소한의 기본권 보장은 가능해진다. 하지만 입법자가 어떠한 내용의 법률을 제정해도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법이 독재적 통치 구조와 결합되어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따라서 입법자가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그 목적과 내용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이념에 부합하도록 해야 인류가 오랫동안 꿈꾸어 왔던 법치의 이념이 성취될 수 있다.

—<보 기>—	
ㄱ. 법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본다.	
ㄴ. 법의 목적과 내용이 정의에 부합할 때 법의 권위가 발생한다는 점을 간과한다.	
ㄷ. 형식적 합법성을 갖춘 법이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본다.	
ㄹ. 법에 근거하여 국가 권력의 행사가 이루어지기만 하면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된다고 본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20902]

2.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역사적으로 법치주의의 의미는 A에서 B로 확장되었다. A는 군주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 시민의 대표인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국가 권력이 행사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등장하였다. 그러나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제정된 법률에 의해서도 시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법률의 목적과 내용도 헌법의 가치 체계에 합치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B가 등장하였다. 이러한 B의 정신은 법과 제도에 투영되어 있다. 가령 죄형 법정주의의 파생 원칙 중 하나인 (가) 은/는 B가 형법에 구현된 것으로 범죄와 이에 대한 형벌은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헌법의 이념에 부합해야 함을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날 죄형 법정주의는 B의 요청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 ① A는 법적 안정성보다 실질적 평등과 같은 정의의 실현을 강조한다.
- ② B는 법률에 대한 헌법의 우위를 보장하기 위해 헌법 재판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 ③ B는 A와 달리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 ④ (가)가 강조될수록 형법의 보장적 기능은 약화되고, 보호적 기능은 강화된다.
- ⑤ (가)는 사안에 적용할 법률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220602]

6. 법치주의의 유형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적법 절차의 원칙은 원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제한 시 법률이 정한 절차의 준수만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통치의 합법성만을 강조하는 A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적법 절차의 원칙은 입법, 행정, 사법의 모든 국가 작용을 구속할 뿐만 아니라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실체적 내용도 정당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는 B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① A와 달리 B는 국가 권력으로부터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② A와 달리 B는 법률로 금지되는 행위와 그 법적 제재를 미리 규정하도록 하여 법적 안정성을 보장한다.
- ③ B와 달리 A는 공권력에 의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본다.
- ④ B와 달리 A는 공권력 행사가 법률에 따를 것만을 강조하여 입법자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간과한다.
- ⑤ B와 달리 A는 정의에 부합하는 법률에 따라 국가 권력이 행사되어야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이 가능해진다고 본다.

[211106]

2. 법치주의의 유형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민주주의에서 국가 권력은 주권자의 의사가 집약된 법률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 주권자인 국민이 스스로 만든 법에 의해 구속되는, 국민의 자기 지배가 곧 법치주의이다. 그러나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나치의 행태가 보여 주었듯이 당시 나치 독일은 법률의 형식과 절차만을 강조하는 A를 통해 비민주적인 체제로 이행하였다. 이후 법치의 본래 의미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법치주의는 국가 권력을 단순히 형식적인 합법성에 구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에서 요청되는 인간의 존엄성 존중,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목적과 내용으로 하는 B로 확대되었다.

- ① A는 의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률이 제정되었다면 국가 기관과 국민을 구속할 수 있다고 본다.
- ② B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과잉 금지 원칙을 적용하여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
- ③ A는 B와 달리 국가 권력의 자의적인 통치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 ④ B는 A와 달리 법의 목적과 내용이 정의에 부합해야 국가 권력이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 ⑤ A, B 모두 위헌 법률 심사제의 도입을 반대할 것이다.

[210902]

3. 법치주의를 이해하는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은 가혹한 법이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되었다면 그 목적이나 내용에 상관없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은 법의 형식뿐만 아니라 목적과 내용 역시 강조하며 적법한 절차를 거쳤더라도 법은 정의에 합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 기>

ㄱ. 갑의 관점은 통치의 형식적 합법성뿐만 아니라 실질적 정당성도 중시한다.

ㄴ. 갑의 관점은 을의 관점과 달리 독재 정치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ㄷ. 을의 관점은 갑의 관점과 달리 위헌 법률 심사제가 필요 없다고 본다.

ㄹ. 갑, 을의 관점은 모두 국가 권력 행사의 법적 근거를 중시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10603]

(3)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4.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법이 개정됨에 따라 고용 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의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기자

이번 ○○법 개정으로 쉼 서비스 기사와 대리 운전 기사에게도 고용 보험이 적용됩니다. 고용 보험 적용 대상의 확대는 고용 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예기치 못한 실업의 위험에서 보호하여, A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공단은 일하는 사람 누구나 사회 안전망의 보호 아래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공단
홍보 실장

- ①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이다.
- ② 국가가 국제 질서를 존중하고 세계 평화와 인류의 번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 ③ 국가가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근거가 되는 원리이다.
- ④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야 하며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바탕으로 국가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 ⑤ 국가가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기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원리이다.

[260604]

4.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는 국가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의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라는 점에서 민주주의로 귀결된다. 이러한 민주주의가 자유주의와 결합되면서 우리 헌법의 또 다른 기본 원리로 자리 잡고 있다. 한편, 자유방임적 시장 경제 질서가 초래한 불평등 문제를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통하여 해결하려는 노력으로 등장한 B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지원과 배려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

- ① A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하는 근거가 된다.
- ② 국민 투표를 통해 국민이 직접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A의 실현 방안이다.
- ③ B는 남북 분단의 상황을 반영한 우리나라 헌법 특유의 원리이다.
- ④ A와 달리 B는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부터 강조되기 시작한 원리이다.
- ⑤ 국가가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기 위해 경제 질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하는 것은 B가 아닌 A의 실현 방안이다.

[251104]

6.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A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는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소극적으로 존중하고 보장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생존과 안정을 배려하는 데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을 요청하는 원리이다.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정의로운 경제 질서 형성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 조치들을 통해 A가 구현된다.

- ① 대통령 선거에서 재외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한다.
- ② 복수 정당제 기반의 자유로운 정당 활동을 보장한다.
- ③ 평화 통일을 위해서 남북 간 문화 교류와 협력을 지원한다.
- ④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한다.
- ⑤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 거주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한다.

[250906]

3.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대의 기관이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민주적 정당성은 선거를 통해 인기 동안 일괄적으로 부여받는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인기 중에도 끊임없이 획득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자유 민주주의하에서 국민은 자유롭게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명할 수 있어야 하고, 대의 기관은 표출된 국민의 의사에 지속적으로 반응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인 A를 실질화할 수 있습니다.

- ① 헌법 개정 시 필수적으로 국민 투표를 거쳐야 하는 근거가 된다.
- ②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근거가 된다.
- ③ 분단국가라는 상황을 전제로 한 우리나라의 특유한 헌법 원리이다.
- ④ 국가가 문화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문화생활을 위한 조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 ⑤ 국가가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기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250603]

3.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는 국제 평화주의와 관련됩니다. 대한민국은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규정한 헌법 조항은 우리나라가 A를 추구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한편,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 헌법 조항은 A를 직접적으로 나타냅니다.

- ①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이다.
- ② 국가 권력의 창설이 국민의 합의에 기초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 ③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근거가 된다.
- ④ 국가가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 ⑤ 학문과 예술 및 문화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가가 문화 발전을 지향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241103]

4.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재외 국민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가 실현된 사례를 들고 그 이유를 말해 볼까요?

대통령 선거에서 재외 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 의사를 최종 결정하는 최고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인 A를 실현하는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 사고에 처한 재외 국민이 자력으로 이를 수습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에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원리인 B를 실현하는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 ① A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하는 근거가 된다.
- ② B는 적정한 소득 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경제 규제와 조정의 근거가 된다.
- ③ A와 달리 B의 실현 방안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위한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을 들 수 있다.
- ④ B와 달리 A는 헌법의 이념적 기초로서 법률 제정과 정책 결정의 방향을 제시한다.
- ⑤ A와 B 모두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부터 강조되기 시작한 원리이다.

[240904]

4. 다음 법률 제·개정 이유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법률 제정 이유: 저소득 국민, 영세 도시 빈민, 실업자 등을 지원하여 빈곤 문제에 대한 사회 안전망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한편, 빈곤 가구별로 자활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맞는 자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빈곤의 장기화를 방지하려는 것임.
- △△법률 개정 이유: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여성 근로자에게는 출산 전후 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고, 그 중 유급 휴가 부분을 60일에서 75일로 확대 하려는 것임.

- ①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부터 강조된 원리이다.
- ② 남북 분단의 상황을 반영한 우리나라 헌법 특유의 원리이다.
- ③ 실현 방안으로 침략적 전쟁의 부인 및 국제 평화 유지 활동 참여를 들 수 있다.
- ④ 국가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최고 권력인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이다.
- ⑤ 관련된 헌법 조항으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를 들 수 있다.

[240604]

4.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우리 헌법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며 국제법을 존중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A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은 당사국으로 하여금 모든 사람이 적당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를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협약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은 헌법상 국제법 존중주의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을 위해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B의 실현에 필요한 국내법 체계를 보완하는 데에도 기여한다.

- ① A를 실현하기 위해 법률로써 재외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다.
- ② A에 따르면 대통령이 국회 비준을 거쳐 체결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③ B는 적정한 소득 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경제 규제와 조정을 인정하지 않는다.
- ④ B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 보장·사회 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고 있다.
- ⑤ B와 달리 A는 전통 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 문화의 창달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강조한다.

[231104]

4.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우리나라는 제헌 헌법 이래 A를 헌법의 기본 원리로 채택하고 있다. 헌법은 전문(前文)에서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할 것을 선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제9조에서 국가에게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 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 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하는 근거가 된다.
- ② 여성 및 연소자의 근로에 대해 특별한 보호를 하는 근거가 된다.
- ③ 대통령에게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는 근거가 된다.
- ④ 국가가 국민의 자율적인 문화 활동을 보장하고 문화를 보호·지원하는 근거가 된다.
- ⑤ 국가가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을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230904]

6.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우리 헌법은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남북 분단이라는 현실을 반영한 우리나라 헌법 특유의 원리인 A를 나타낸 것이다. 한편 우리 헌법은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 투표에 붙일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통일과 관련된 중요 정책을 국민적 합의를 통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국가 의사를 최종 결정하는 최고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B가 나타난 것이다.

- ① A는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배제하고 대의제에 따른 국가 의사 결정을 강조한다.
- ② B의 실현 방안으로 '보통 선거 실시를 통한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들 수 있다.
- ③ A와 달리 B는 헌법의 이념적 기초로서 법률 제정과 정책 결정의 방향을 제시한다.
- ④ B와 달리 A는 적절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기 위한 경제 규제 정책의 근거가 된다.
- ⑤ B와 달리 A는 문화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것을 국가의 의무라고 본다.

[230606]

2.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교사: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A의 실현 방안에 대해 각자 2개씩 발표해 볼까요?
갑: 복수 정당제를 기반으로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을: 공정한 재판을 위해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고, 적정한 소득 분배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사: 한 학생은 2개 모두 적절한 대답을 하였는데, 다른 학생은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A, B의 실현 방안을 각각 1개씩 대답했네요.

- ① A는 국가가 국민의 자율적인 문화 활동을 보장하고 문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 ② B는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부터 강조되었다.
- ③ B가 구체화되는 헌법 조항으로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를 들 수 있다.
- ④ A는 B와 달리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 방지를 위한 국가의 경제 정책을 통해 실현된다.
- ⑤ B는 A와 달리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221102]

A의 장(長)은 갑을 B의 재판관으로 지명하고, C에게 현직 법관인 을을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 제청하였다. 이후 D는 을에 대한 임명 동의안과 국무 위원 임명 제청권자인 E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하였다. 한편 민주적 정당성을 직접 확보할 수 없는 A의 장(長)이 헌법 기관을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 자유 민주주의의 법적 기초로서 모든 국가 권력의 정당성의 근거가 국민에게 있다는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인 (가)에 위반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헌법에 근거하여 A의 장(長)의 임명 과정에 C와 D가 권한을 행사하므로, 민주적 정당성 확보에 문제가 없다는 반론도 있다.

5.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국가가 경제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 ② 근대 자유방임적 시장 경제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결함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 ③ 국가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을 국민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④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하는 근거가 된다.
- ⑤ 국가로부터 문화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고 국가에 의하여 문화 활동이 보호·지원되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220905]

3. 표는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A, B를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구분	관련 헌법 조항	실현 방안
A	(가)	• 최저 임금제 실시 • 사회 보장 제도 실시
B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 (나) • 학문·예술의 자유 보장

- ① (가)에는 ‘대한민국은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가 들어갈 수 있다.
- ② (나)에는 ‘평생 교육 진흥’이 들어갈 수 있다.
- ③ A는 개인의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 ④ A는 B와 달리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부터 강조된 원리이다.
- ⑤ B는 A와 달리 여성 및 연소 근로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강조한다.

[220603]

7.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교사

청소년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가 실현된 사례를 찾아볼까요?

○○시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교통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삶의 질 보장을 중시하는 A의 실현에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법 개정으로 18세 청소년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국가 권력의 정당성이 국민에게 있다는 B의 실현에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 ① A에 따라 국가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 ② B에 따라 국민 투표를 통해 국민이 직접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③ A와 달리 B는 국민의 사회권 보장을 통한 실질적 평등의 실현을 강조한다.
- ④ B와 달리 A는 법률 제정과 정책 결정의 방향을 제시한다.
- ⑤ A, B 모두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부터 강조되었다.

[211107]

3.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방 자치 제도는 지방의 공동 관심을 자율적으로 해결하고, 주민의 자치 역량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국가 권력이 본래 국민의 것이라는 (가)에서 출발하여 국가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역적 주체로서의 주민에 의한 자기 통치의 실현인 것이다. 한편 현대 사회에서 국가는 국민의 생활 능력을 강화하고 적절한 생활 수준을 유지할 의무를 진다. (나)의 실현과 관련된 국민 생활의 안정, 실질적 평등 실현의 필요성으로 인해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 간에는 상호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 ① (가)는 균형 있는 지역 경제 육성 정책의 근거가 된다.
- ② (가)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 투표제를 들 수 있다.
- ③ (나)는 개인의 자유 존중을 근본으로 하여 국가 권력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원리이다.
- ④ (나)의 실현을 위해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국가 기관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⑤ (가), (나) 모두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부터 강조되었다.

[210903]

6. 다음 법률 조항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기초연금법 제1조

이 법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아동수당법 제1조

이 법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① 국가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최고 권력인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이다.
- ② 국가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 ③ 국가가 국제 질서를 존중하고 세계 평화와 인류의 번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 ④ 국가가 문화를 보호하고 문화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여 문화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원리이다.
- ⑤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야 하며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바탕으로 국가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210606]

(4) 기본권

3. 기본권 유형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A는 개인의 생활에 대한 국가 권력의 간섭이나 침해 배제하는 방어적 권리로서,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 규정된 소극적 기본권이다. 따라서 헌법상 A의 보장은 국가에 의한 A의 설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의한 A의 확인과 선언을 의미한다.

- ①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이다.
- ②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 ③ 헌법에 열거되지 않더라도 보장되는 포괄적 권리이다.
- ④ 국민이 국가 기관의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 ⑤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권리이다.

[260603]

3. 기본권 유형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A는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아니라 국민으로서의 권리이므로 국가 내적 권리이다. 주권적 의사 표시로서, 대표를 선출하고 공무를 담임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는 A는 민주주의의 실현 과정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민주주의의 전제인 A는 국민 주권의 원리를 실현하는 필수적인 권리이다.

- ① 국가 기관의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능동적 권리이다.
- ② 인간다운 생활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이다.
- ③ 국가 권력에 의한 부당한 침해를 배제하는 방어적 권리이다.
- ④ 기본권 구제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이다.
- ⑤ 헌법에 열거하지 않아도 보장받을 수 있는 포괄적 권리이다.

[250903]

3. 기본권 유형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A의 침해 여부는 권리를 주장하는 주체, 국가, 그리고 비교의 대상이 되는 또 다른 주체와의 관계에서 판단된다. A를 침해당한 주체가 주장하는 국가 작용의 위헌성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하는지 여부에 있다. 한편, 기본권 침해 시 국가에 대하여 구제를 요구할 수 있는 수단적 권리인 B는 국가의 행위나 조력을 필요로 하기에 입법자에 의해 법률로 행사 절차가 구체화될 것이 요구된다.

- ① A는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권리이다.
- ② B는 국가로부터의 간섭이나 침해를 배제하는 방어적 권리이다.
- ③ A와 달리 B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보장되는 권리로 포괄성을 가진다.
- ④ B와 달리 A는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으로 절차적 권리이다.
- ⑤ A와 B 모두 의회가 제정한 법률로도 제한할 수 없는 권리이다.

[251103]

6. 기본권 유형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적 영역에 나타난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장이 공허한 것에 불과해지면서, 개인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A가 보장되기 시작하였다. '빈곤으로부터의 자유'에서 출발한 A는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을 국가에 의해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이며, 경제적 생존의 문제를 넘어 비경제적인 영역에까지 그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 ① 국가 권력에 의한 침해를 배제할 수 있는 방어적 권리이다.
- ② 기본권 침해 시 구제를 요구할 수 있는 수단적·절차적 권리이다.
- ③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를 도출할 수 있는 포괄적 성격의 권리이다.
- ④ 국가에 대해 적극적 급부를 요구하는 권리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포함된다.
- ⑤ 인간의 존엄 실현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부터 보장되기 시작한 권리이다.

[250606]

4. 밑줄 친 ‘A 원칙’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본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공익이나 타인의 기본권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부득이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특정 기본권 주체에게 일방적인 희생이 강요되어서는 안 되며, 가능한 한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제한에 그쳐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헌법은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A 원칙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권 제한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기본권 제한은 공익이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 적합하고 필요하며 법익의 균형이 유지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보 기>

ㄱ. 기본권 제한의 목적과 수단 사이에 적절한 비례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ㄴ. 소극적·방어적 성격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ㄷ. A 원칙에서 ‘목적의 정당성’은 기본권 제한의 수단이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에 그쳤는지를 심사하는 것이다.

-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 [241104]

3. 기본권 유형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는 국가 권력에 의해 침해되지 않으므로써 보장되는 소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 개입의 배제가 요구된다. 이에 반해 실질적 평등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B는 국가의 적극적 급부와 배려를 통해 비로소 보장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가의 개입을 필요로 한다.

- ① A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더라도 보장되는 포괄적 권리이다.
② B는 국민이 국가 기관의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③ A와 달리 B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권리이다.
④ B와 달리 A는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권리이다.
⑤ A와 B 모두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이다.

[240903]

3. 기본권 유형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기본권 침해 시 구제 가능성이 없다면 기본권 보장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기본권이 침해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을 경우 국가에 필요한 조치나 구제 절차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A가 보장되어야 한다. 헌법에 근거해 보장되는 A는 법률에 의해 행사 절차가 구체화되어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 ①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으로 수단적 성격의 권리이다.
② 국가 권력의 간섭이나 침해를 배제하는 소극적 권리이다.
③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보장되는 권리로 포괄성을 가진다.
④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으로서 법률로 제한할 수 없는 권리이다.
⑤ 국민이 국가 기관 구성에 참여하거나 국가 기관의 구성원으로 선임될 수 있는 권리이다.

[240603]

12. 기본권 유형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침해를 배제함으로써 보장되는 A와 달리 B는 국가가 인간 존엄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조건을 형성함으로써 보장된다. 자본주의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생성·발전되어 온 B가 확대될수록 A가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A와 B는 인간의 존엄과 자유로운 인격 발현이라는 헌법 이념 아래에서 조화된다.

- ① A는 침해된 기본권을 구제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이다.
② B는 실질적 평등의 실현을 위해 등장한 적극적 권리이다.
③ B에는 ‘외부로부터의 강제 없이 개인의 양심을 형성할 권리’가 포함된다.
④ A와 달리 B는 국가 기관의 형성과 국가의 정치적인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권리이다.
⑤ A와 B 모두 과잉 금지 원칙을 준수하더라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없는 권리이다.

[231112]

3. (가)~(다)는 기본권에 관한 우리나라 헌법 조항 중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나)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 부담권을 가진다.
(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① (가)에 규정된 기본권은 국가 권력에 의한 침해로부터 배제하는 소극적 권리이다.
② (나)에 규정된 기본권은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이다.
③ (다)에 규정된 기본권은 법률로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권리이다.
④ (나)와 달리 (다)에 규정된 기본권은 국민 주권주의를 실현하는 능동적 권리이다.
⑤ (다)와 달리 (가)에 규정된 기본권은 실질적 평등 실현을 위해 등장한 현대적 권리이다.

[2309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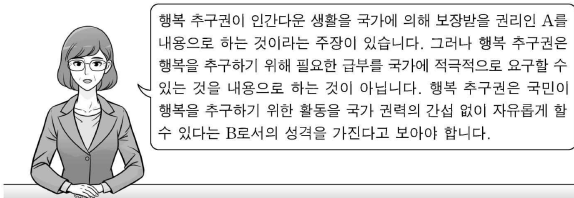
4. 다음 사례에서 갑~병이 공통적으로 침해받은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공직자였던 갑은 법원, 검찰, 경찰 공무원 등 다른 공직자와는 달리, □□위원회법 규정으로 인해 퇴직 후 일정 기간 공직 선거법상의 선거에 출마할 수 없었다.
○ 자신의 자전거로 출근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근로자 을은 회사가 제공하는 통근 버스로 출근하다 다친 다른 근로자와는 달리,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요양 급여를 받지 못하였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영유아 중에서 재외 국민인 영유아를 보육료·양육 수당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정부 지침 등으로 인해 국내에서 재외 국민인 영유아를 양육하는 병은 자녀의 보육료·양육 수당을 지원받지 못하였다.

- ①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이다.
②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이다.
③ 국가의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방어적 권리이다.
④ 국가의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동적 권리이다.
⑤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221104]

3. 기본권 유형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와 B는 각각 자유권과 사회권 중 하나임.) [3점]



- ① B는 국가에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이다.
② A와 달리 B는 실질적 평등 실현에 기여하는 권리이다.
③ A와 달리 B는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이다.
④ B와 달리 A는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부터 보장된 권리이다.
⑤ A, B 모두 기본권 제한의 요건과 한계가 준수될 경우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는 권리이다.

[230603]

3. 다음 사례에서 갑, 을이 공통적으로 침해받은 기본권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뇌물죄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갑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변호인과의 접견을 요청하였으나, 수사 기관은 법률의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이를 거부하였다.
○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한 을은 영화관에서 이를 상영하고자 하였으나, 정부 기관은 헌법에서 금지하는 사전 검열을 통해 정당한 이유 없이 영화 상영을 불허하였다.

- ①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이다.
② 실질적 평등 실현을 위해 등장한 현대적 권리이다.
③ 국가의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동적 권리이다.
④ 인간다운 생활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이다.
⑤ 국가 권력의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방어적 권리이다.

[220903]

6. (가)~(다)는 기본권에 관한 우리나라의 헌법 조항 중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나)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① (가)에 규정된 기본권은 다른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이다.
- ② (가)에 규정된 기본권은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 ③ (나)에 따르면 합리적 이유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차별이 허용되지 않는다.
- ④ (다)는 국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⑤ (다)에 따르면 기본권을 제한하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면 수단의 적합성은 고려될 필요가 없다.

[220606]

4. 기본권 유형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 B에 대한 침해는 국가와 기본권 주체인 개인의 관계에서 주로 발생할 수 있다. A는 국가의 간섭과 침해를 배제함으로써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기본권 제한이 헌법상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경우 위헌 판단이 가능하다. B는 권리 구제를 위한 기본권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면 위헌 여부를 다룰 수 있다. 이에 비하여 C는 국가, 개인, 그 개인과 비교 대상이 되는 제3자의 관계를 통하여 위헌 여부를 판단될 수 있다. 국가가 본질적으로 같은 사안에서 두 기본권 주체에게 자의적으로 서로 다른 처우를 하면 C의 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

- ① A와 달리 B는 국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다른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 ② B와 달리 A는 입법자가 법률을 통해 기본권을 구체화할 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 ③ B와 달리 C는 수단적 성격의 권리로서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 ④ C는 A를 행사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현대 복지 국가 헌법에서부터 보장되기 시작하였다.
- ⑤ B와 달리 A, C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준수하는 경우에도 제한될 수 없는 본질적 권리이다.

[211104]

4. 기본권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거나,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는 △△법률의 해당 조항은 국민이 재판과 관련된 집단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불가능하게 하여 A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 형사 소송에서 즉시항고의 제기 기간을 3일로 정한 ○○법률의 해당 조항은 국민이 재판에 대해 불복할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게 하여 B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 ① A는 내국인에게만 보장되는 권리이다.
- ② B는 다른 기본권 실현의 전제 조건이 되는 본질적 권리이다.
- ③ A는 B와 달리 헌법에 열거되어야 보장되는 권리이다.
- ④ B는 A와 달리 국가에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이다.
- ⑤ A, B 모두 국가 성립 이전부터 인정받아 온 권리이다.

[210904]

7. 기본권 유형 A~C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자유권, 청구권, 사회권 중 하나이다.) [3점]

- 갑은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 앞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일조량이 감소되었고, 더 이상 쾌적한 환경에서 살지 못하게 되어 A를 침해당했다.
- 을은 자신을 원고로 하여 소장을 제출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재판을 받을 수 없게 되어 B를 침해당했다.
- 병은 수사 기관에 의해 불법 체포되어 C를 침해당했다.

- ① A의 예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들 수 있다.
- ② B는 모든 개별적인 기본권의 내용을 담은 포괄적인 권리이다.
- ③ C는 기본권 중 가장 최근에 등장한 현대적 권리이다.
- ④ A는 C와 달리 소극적·방어적 성격의 권리이다.
- ⑤ C는 B와 달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성격의 권리이다.

[210607]

(5) 정부 형태

5.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국의 시기별 정부 형태는 전형적인 대통령제 또는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t~t+3 시기 중 정부 형태가 두 번 변경되었으며 연립 내각은 2회 구성되었다. 표는 각 시기의 선거 결과에 따른 정당별 의회 의석률을 나타낸다. 단, t 시기의 정부 형태는 직전 시기의 정부 형태와 동일하고, t+3 시기의 정부 형태는 직후 시기의 정부 형태와 동일하다.

시기	정당별 의회 의석률(%)			
	A당	B당	C당	D당
t	32	43	20	5
t+1	23	26	22	29
t+2	32	44	15	9
t+3	67	23	8	2

* 의원 내각제인 경우, 각 시기에 최초 구성된 내각은 해당 시기 동안 변경 없이 지속되며, 단독 내각 성립이 가능하다면 연립 내각은 구성되지 않음.
** 각 시기의 정부 형태는 해당 시기 내에서 동일하며, 각 시기 내 정당별 의회 의석률 변화와 행정부 수반의 당적 변화는 없음.

<보 기>

ㄱ. t+3 시기에 내각이 의회 해산권을 갖는다면, t 시기에 의회 의원은 각료를 겸직할 수 있다.

ㄴ. t+3 시기에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이 B당이면, t+1 시기에 행정부 수반은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ㄷ. t+2 시기와 t+3 시기의 정부 형태가 동일하다면, t+1 시기에는 의회가 행정부 수반을 선출한다.

ㄹ. t+1 시기와 t+2 시기의 정부 형태가 동일하고 t+3 시기에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이 A당이면, t+3 시기 행정부 수반이 제출한 법률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260605]

5.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다음은 □□국의 정치 상황을 정리한 것이다. 정부 형태 변경 전후 □□국의 정부 형태는 전형적인 대통령제 또는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의회의 총의석수는 100석으로 변동이 없다.

- t대 의회 의원 선거 결과, 직전 의회에 비해 A당은 10석 증가, B당과 C당은 각각 8석, 2석씩 감소하여 행정부 수반 감이 소속된 정당은 원내 과반 의석을 유지할 수 없게 됨. t대 의회 의원의 임기는 행정부 수반 감의 임기 중 3년 차가 시작되는 날 동시에 시작됨.
- t+1대 의회 의원 선거 결과, 행정부 수반 을이 소속된 정당은 원내 과반 의석을 유지할 수 없게 됨.
- t+1대 의회 의원과 행정부 수반 을의 임기가 동시에 종료되면서 □□국은 처음으로 정부 형태가 변경됨. t+2대 의회 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 행정부 수반으로 병을 선출함.
- 의회 의원의 임기는 4년이고, 행정부 수반 감, 을의 임기는 5년임.

<t ~ t+2대 의회의 정당별 의석수>

구분	정당별 의석수(석)		
	A당	B당	C당
t대	51	43	6
t+1대	44	51	5
t+2대	47	46	7

* 정당별 의석수는 해당 의회 의원의 임기 내에서 변동이 없고, 행정부 수반의 당적은 임기 내에서 변동이 없음.

- ① 감의 임기 중 1년 차에 감의 소속 정당은 의회 내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다.

② 병은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에서 의회 해산권을 가진다.

③ t대 의회 의원의 임기 내내 A당은 야당으로서 행정부 수반을 견제한다.

④ t+1대 의회에서는 행정부 수반 을이 제출한 법률안이 과반 의석을 확보한 야당의 견제로 통과될 가능성이 낮다.

⑤ t대와 달리 t+2대 의회 의원은 각료를 겸직할 수 없다.

[251105]

4. 갑국과 을국의 정부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갑국과 을국의 정부 형태는 각각 전형적인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중 하나임.)

△△신문

○○○○년 ○○월 ○○일

갑국의 총선 결과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은 과반 의석 획득에 실패하였다. 이에 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할 권한이 없는 갑국 행정부는 행정부 수반의 온실가스 감축 공약 사항을 이행하는 데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을국에서는 행정부 수반의 핵심 공약이었던 온실가스 감축 관련 법률안이 통과되었다. 의회에서 이에 대한 찬반이 대립되던 가운데 □□부 장관도 법률안 가결을 위해 한 표를 행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① 갑국의 행정부 수반은 의회가 의결한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② 을국의 국민은 행정부 수반과 의회 의원을 별도의 선거로 선출한다.
 ③ 갑국과 달리 을국의 행정부 수반은 헌법에 규정된 임기를 보장받는다.
 ④ 을국과 달리 갑국의 행정부 수반은 국가 원수의 지위도 가진다.
 ⑤ 갑국과 을국 모두 행정부 수반은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250904]

갑국과 을국의 시기별 정부 형태는 전형적인 대통령제 또는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t시기 갑국과 을국의 정부 형태는 동일하지만, 을국이 정부 형태를 변경하여 t+1시기에는 갑국과 을국의 정부 형태가 동일하지 않다. 표는 갑국과 을국의 t시기와 t+1시기의 의회 의원 선거 결과와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을 나타낸다.

<갑국의 의회 의원 선거 결과와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

시기	구분	A 당	B 당	C 당	전체 의석수(석)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
t	지역구 의석수(석)	96	101	3	200	A 당
t+1	지역구 의석수(석)	88	107	5	200	A 당

<을국의 의회 의원 선거 결과와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

시기	구분	a 당	b 당	c 당	전체 의석수(석)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
t	지역구 의석수(석)	47	45	8	100	b 당
t+1	지역구 의석수(석)	52	37	11	200	a 당
	정당 투표 득표율(%)	48.8	33.7	17.5		

* 갑국과 을국 모두 각 시기의 정부 형태와 선거 제도는 해당 시기 내에서 동일하며, 각 시기 내 정당별 의회 의석수 변화와 행정부 수반의 당적 변화는 없음.

** t시기와 t+1시기 모두 갑국에는 A~C 당만, 을국에는 a~c 당만 존재하고, 갑국과 을국 모두 무소속 의원은 없음.

9. 위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 ① 갑국은 t시기와 t+1시기 모두 행정부 수반이 임명한 각료가 의회 의원을 겸직할 수 있다.
 ② 을국은 t+1시기와 달리 t시기에 행정부 수반이 국가 원수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
 ③ t시기에 갑국과 을국 모두 행정부가 법률안 제출권을 가진다.
 ④ t+1시기에 갑국과 달리 을국은 행정부 수반과 의회 의원을 별도의 선거를 통해 국민이 선출한다.
 ⑤ t+1시기에 을국과 달리 갑국은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 거부권을 가진다.

[250609]

5.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갑국의 시기별 정부 형태는 전형적인 대통령제 또는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t 시기의 정부 형태는 직전 시기의 정부 형태와 동일하고, t~t+2 시기 중 정부 형태는 1회 변경되었다. 갑국의 t 시기 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는 국민이 직접 행정부 수반을 선출하는 선거와 동시에 각각 실시되었다. 표는 갑국에서 각 시기의 정당별 의회 의석률과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을 나타낸다.

시기	정당별 의회 의석률(%)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
	A당	B당	C당	D당	
t	32	58	7	3	㉠
t+1	63	27	8	2	㉡
t+2	38	54	6	2	㉢

* 각 시기의 정부 형태는 해당 시기 내에서 동일하며, 각 시기 내 정당별 의회 의석률 변화와 행정부 수반의 당적 변화는 없음.

- ① t 시기에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의회 의원이 각료를 겸직할 수 있다.
- ② t+2 시기에 행정부 수반은 법률안 거부권을 통해 입법 과정에 관여한다.
- ③ ㉠이 'B당'이라면, t 시기에 행정부 수반이 제출한 법률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 ④ ㉡과 ㉢이 동일하다면, t+1 시기에 행정부 수반은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도 가진다.
- ⑤ ㉠, ㉡, ㉢이 모두 동일하다면, t 시기와 달리 t+1 시기에는 행정부와 입법부 간 대립 시 잦은 불신임 결의로 국정 불안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

[241105]

5. 갑국과 을국의 정부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갑국과 을국의 정부 형태는 각각 전형적인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중 하나임.) [3점]

○ 갑국에서는 지난 몇 차례 의회 의원 선거에서 의회 내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이 나타나지 않았고, 의회 내 정치 세력들은 국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이합집산을 거듭하였다. 이 과정에서 빈번한 의회 해산과 행정부 수반의 교체로 국민들의 정치적 불신감이 높아지고 있다.

○ 을국에서는 최근 의회 의원 선거 결과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과 의회 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불일치하게 되었다. 의회가 법률안 제출권을 독점하고 있고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 거부권을 가진 상황에서 행정부와 의회 간 정치적 대립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졌다.

- ① 갑국의 정부 형태에서는 행정부가 입법부에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② 을국의 정부 형태에서는 행정부 수반과 국가 원수가 동일인이다.
- ③ 갑국과 달리 을국의 정부 형태에서는 의회 의원이 각료를 겸직할 수 있다.
- ④ 을국과 달리 갑국의 정부 형태에서는 행정부와 입법부 간 엄격한 권력 분립이 이루어진다.
- ⑤ 갑국과 을국의 정부 형태 모두에서 국민이 직접 행정부 수반을 선출한다.

[240905]

5.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갑국과 을국의 정부 형태는 각각 전형적인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중 하나임.) [3점]

갑국은 행정부가 법률안 제출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A 당이 t대와 t+1대 모두 원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을국에서는 B 당이 t대와 달리 t+1대에서 원내 과반 의석을 차지하여, B 당의 대표가 의회에서 행정부 수반으로 선출되었다. 표는 갑국 A 당과 을국 B 당의 t대와 t+1대 의석수를 나타낸다.

(단위: 석)

구분	t대	t+1대
갑국 A 당	100	130
을국 B 당	90	130

* 갑국과 을국의 정부 형태, 의회 총의석수는 변동이 없음.

<보 기>

ㄱ. 갑국에서 의회는 내각에 대한 불신임권을 가진다.
 ㄴ. 을국에서 행정부 수반은 국가 원수의 지위를 동시에 가진다.
 ㄷ. 갑국과 달리 을국에서는 의회 의원이 각료를 겸직할 수 있다.
 ㄹ. 갑국과 을국의 의회 총의석수를 각각 최대로 가정했을 때, 갑국보다 을국의 총의석수가 더 많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40605]

10.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갑국의 시기별 정부 형태는 전형적인 대통령제 또는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t~t+3시기 중 정부 형태는 1회 변경되었고, t시기의 정부 형태는 직전 시기의 정부 형태와 동일하며, 각 시기의 정부 형태는 해당 시기 내에서 동일하다.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은 t+1시기를 제외한 나머지 시기에서 모두 원내 제1당이다. 갑국 의회의 t시기 정당별 의석수는 A 당 160석, B 당 120석, C 당 20석이며, 표는 시기별 각 정당의 직전 시기 대비 의석수 증감률을 나타낸다.

구분	A 당	B 당	C 당
t+1시기	- 40%	+ 50%	+ 20%
t+2시기	+ 25%	- 20%	+ 50%
t+3시기	- 15%	+ 25%	- 50%

* t~t+3시기에 총의석수는 300석으로 동일하고, 각 시기 내의 정당별 의회 의석수, 행정부 수반의 당적 변화는 없음.

- ① t+1시기에 과반 의석을 차지한 다수당의 내각 불신임 결의로 국정 불안이 초래될 수 있다.
- ② t시기에 내각의 존립이 의회의 신임에 의존한다면, t+2시기 의회는 여대야소 상황이므로 행정부 수반이 제출한 법률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 ③ t+3시기에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동일인이라면, t시기에 의회 의원이 각료를 겸직할 수 없다.
- ④ t+2시기에 내각이 의회 해산권을 가진다면, t+3시기 행정부 수반과 달리 t시기 행정부 수반은 법률안 거부권을 가진다.
- ⑤ t+1시기와 t+3시기에 정부 형태가 서로 같다면, t+2시기와 달리 t시기에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엄격하게 보장된다.

[231110]

5.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전형적인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중 하나임.)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동일인이고, 행정부 수반을 국민이 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만 보면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는 A로 보이지만, A와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가) 등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이 융합된 정부 형태의 요소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 형태에서는 의회가 내각을 불신임할 수 없기 때문에 B와도 구분됩니다.

- A에서는 행정부에 법률안 제출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 B에서는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을 가진다.
- A와 달리 B에서는 행정부 수반이 헌법에 규정된 임기를 보장 받는다.
- B와 달리 A에서는 의회 의원이 그 직을 유지한 채 내각의 각료가 될 수 있다.
- (가)에 ‘국회의 탄핵 소추권’이 들어갈 수 있다.

[230905]

2.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단, 갑국과 을국의 정부 형태는 각각 전형적인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중 하나임.)

갑국의 정부 형태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이 융합된 형태이며, 을국의 정부 형태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이 분리된 형태이다. 갑국에서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은 t 시기에 B 당, t+1 시기에 A 당이며, 을국에서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은 t 시기, t+1 시기에 모두 b 당이다. 갑국과 을국의 시기에 따른 정당별 의회 의석률은 다음 표와 같다.

시기	갑국의 정당별 의회 의석률(%)			을국의 정당별 의회 의석률(%)		
	A 당	B 당	C 당	a 당	b 당	c 당
t	45	30	25	15	65	20
t+1	55	25	20	55	30	15

- 갑국에서는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일치한다.
- 갑국과 달리 을국에서는 의회 의원이 각료를 겸직할 수 있다.
- t+1 시기에 비해 t 시기에 갑국에서는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다.
- t 시기에 비해 t+1 시기에 을국에서는 의회가 내각을 불신임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 t+1 시기에 비해 t 시기에 을국에서는 행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이 용이했을 것이다.

[230602]

6.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와 (나)는 각각 전형적인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중 하나이다.) [3점]

의원 정부제에는 (가)와 (나)의 특성이 모두 나타난다. 의원 정부제는 (가)와 달리 행정부 수반과 내각이 의회의 신임에 의존하고, (나)와 달리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가 원수가 실질적이고 강력한 권한을 갖는다. 하지만 국가 원수 소속 정당이 아닌 다른 정당이 의회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면, 국가 원수는 여당에 속한 인물을 행정부 수반으로 임명하지 못해 위상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표는 의원 정부제를 채택하고 있는 갑국에서 각 시기의 정당별 의회 의석률과 국가 원수 소속 정당을 나타낸다.

시기	정당별 의회 의석률(%)				국가 원수 소속 정당
	A 당	B 당	C 당	D 당	
t	55	30	13	2	A 당
t+1	35	53	8	4	A 당

- (가)에서는 행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 (나)에서는 행정부가 의회 해산권을 통해 의회를 견제할 수 있다.
- (가)에서는 (나)와 달리 의회 의원이 각료를 겸직할 수 있다.
- t 시기와 t+1 시기 모두 갑국에서는 국가 원수 소속 정당과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이 동일할 것이다.
- t 시기에는 t+1 시기에 비해 갑국 행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이 어려울 것이다.

[221106]

9.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서술형 평가] A 국과 B 국은 각각 전형적인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중 하나를 채택하고 있다. 제시된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 A 국의 의회 의원 선거에서 아당인 ◇◇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서 원내 제1당이 되었다. 이에 따라 여당인 □□당이 의회 내 소수당으로 전락하면서 행정부 수반의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 B 국의 의회 의원 선거에서 ○○당이 전체 의석의 42%를 획득하여 원내 제1당이 되었다. ○○당의 대표는 의회에서 행정부 수반으로 선출된 후 새로운 내각 구성원을 발표했다.

<서술형 1> B 국과 구분되는 A 국 정부 형태만의 특징을 3가지만 쓰시오. (각 1점, 총 3점)

<서술형 2> 의회 의원 선거 결과로 인해 B 국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치 상황을 2가지만 쓰시오. (각 1점, 총 2점)

[학생 답안 및 채점 결과]

문항	답안	채점 결과
<서술형 1>	의회 의원이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⑦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보장된다.	
	(가)	
<서술형 2>	(나)	1점
	연립 내각이 구성되었을 것이다.	

* 각 답안 내용별로 채점하고, 답안 하나당 맞으면 1점, 틀리면 0점을 부여함.

- (가)에 ‘의회 의원이 각료를 겸직할 수 있다.’가 들어가면 ⑦은 ‘1점’이다.
- (나)에는 ‘행정부 수반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가 빈번해질 것이다.’가 들어갈 수 없다.
- A 국은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이 융합된 정부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 B 국에서는 A 국과 달리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동일인이다.
- A 국에서는 내각 불신임권, B 국에서는 탄핵 소추권을 통해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한다.

[220909]

4.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국과 을국은 각각 전형적인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중 하나를 채택하고 있다. 표는 각국에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상호 견제하는 수단을 나타낸 것이다.

구분	갑국	을국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	내각 불신임권	(가)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수단	(나)	법률안 거부권

- ① (가)에는 ‘의회 해산권’이 들어갈 수 있다.
- ② (나)에는 ‘탄핵 소추권’이 들어갈 수 있다.
- ③ 갑국에서는 의회 의원이 각료를 겸할 수 있다.
- ④ 갑국에서는 을국과 달리 행정부 수반과 국가 원수가 동일인이다.
- ⑤ 을국에서는 갑국과 달리 의회 의원이 국민에 의해 선출된다.

[220604]

5.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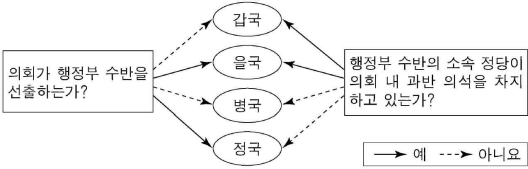
갑국과 을국의 정부 형태는 각각 전형적인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중 하나이다. 행정부 수반이 소속된 정당의 의회 의석률은 갑국 35%, 을국 65%이며, 양국 모두 무소속 의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표는 질문에 따라 갑국과 을국을 비교한 것이다.

질문	국가	갑국	을국
(가)		예	아니오
(나)		예	예

- ① (가)에 ‘행정부 수반이 국가 원수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는가?’가 들어가면, 갑국의 행정부 수반은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다.
- ② (가)에 ‘의회가 내각을 불신임할 수 있는가?’가 들어가면, 갑국과 달리 을국의 의회 의원은 각료를 겸직할 수 있다.
- ③ (나)에 ‘국민이 선거를 통해 행정부 수반을 직접 선출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 ④ (나)에 ‘의회 내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존재하는가?’가 들어가면, 을국과 달리 갑국의 행정부 수반은 법률안 거부권을 가진다.
- ⑤ (나)에 ‘의회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2개만 존재하는가?’가 들어가면, (가)에 ‘행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211105]

18. 그림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단, 갑국~정국의 정부 형태는 각각 전형적인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중 하나이다.)



- ① 갑국과 달리 을국은 행정부 수반이 국가 원수의 지위를 가진다.
- ② 을국과 달리 병국은 행정 권력이 의회의 신임을 받는 동안에만 유지된다.
- ③ 병국과 달리 정국은 의회 의원이 각료를 겸직할 수 있다.
- ④ 갑국에 비해 병국은 행정부 정책 추진을 위한 법률 제·개정이 용이할 것이다.
- ⑤ 을국과 달리 병국, 정국은 연립 내각이 구성된다.

[210918]

2.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와 B는 각각 전형적인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중 하나이다.)

○ 학습 주제: 헌법에 나타난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특징

A의 요소가 나타난 우리나라 헌법 조항	B의 요소가 나타난 우리나라 헌법 조항
• 제52조 국회 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 제53조 제2항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후략)...
• _____ (가)	• _____ (나)

- ① A에서 의회 의원은 각료를 겸직할 수 없다.
- ② B에서 행정부 수반은 의회 해산권을 가진다.
- ③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는 것은 B의 요소에 해당한다.
- ④ ‘제67조 제1항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는 (가)에 들어갈 수 있다.
- ⑤ ‘제63조 제1항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는 (나)에 들어갈 수 있다.

[210602]

(6) 우리나라 헌법 기관

6. 우리나라 헌법 기관 A~E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 헌법은 A의 신중한 권한 행사를 위해 다양한 견제 장치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이 정한 조약을 A가 체결·비준하기 위해서는 B의 심의를 거쳐 C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A는 국정(國政)의 기본 계획이나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 등 헌법 제89조에 나열된 사항에 대해 반드시 B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것이 중대한 위헌·위법한 행위라고 판단된 경우 C는 탄핵 소추를 의결하여 D에 탄핵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A의 국무 위원 임명에 대한 E의 제청권은 행정부 내부의 권한 분산을 통해 A의 행정부 구성권을 견제하는 기능을 한다.

- ① B는 A에 소속된 행정부 내 최고 감사 기관이다.
- ② B는 국정을 감시·통제하는 국정 조사권을 통해 E를 견제한다.
- ③ C는 국무 위원에 대한 해임을 A에게 건의할 수 있다.
- ④ D는 A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선거 소송 사건을 관할한다.
- ⑤ C의 장(長)과 E 모두 D가 담당하는 탄핵 심판의 대상에 포함된다.

[260606]

7. 우리나라 헌법 기관 A~E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현행 헌법에서는 A에 대한 B의 통제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A의 비상 조치권을 폐지하고, 긴급 명령권을 A에게 부여하면서 B가 A의 긴급 명령에 대한 승인권을 갖도록 하였다. 하지만 행정 각부를 통괄하는 C에 대한 해임 의결권이 해임 건의권으로 변경되어 B의 권한이 약화된 측면도 있다. 사법과 관련된 큰 변화는 D가 최초로 구성된 것이다. 그러나 E가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여부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가진다는 헌법 조항을 존치시킨 채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권을 D에 부여하여 위헌 심사권을 이원화하였다.

- ① B는 국무 위원과 행정 각부의 장에 대한 임명 제청권을 가진다.
- ② C는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 투표에 부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③ E는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D에 제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④ A는 D의 장(長), E의 장(長)의 임명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 ⑤ D는 E의 장(長), A, C에 대한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250907]

8. 우리나라 헌법 기관 A~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헌법상 민주적 정당성을 직접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A는 임기 중 원칙적으로 B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지만, B는 해임 건의권을 통해 C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A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는데 관계 국무 위원과 C는 A의 보좌 기관으로서 이 문서에 부서할 권한을 가집니다. A가 관계 국무 위원이나 C의 부서 없이 국법상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는 헌법에 위반되며, 이는 A가 직무 집행에 있어서 위헌·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B는 A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결하여 D가 탄핵 심판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 ① A는 C의 제청을 받아 행정 각 부의 장(長) 중에서 국무 위원을 임명한다.
- ② B는 C에 대하여 B에 출석하여 질문에 답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는 B의 제소가 있으면 D는 그 정당의 해산 여부를 심판한다.
- ④ D는 A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선거 소송을 관할한다.
- ⑤ A는 B의 동의를 얻어 D의 재판관 9인을 임명한다.

[251108]

4. 우리나라 헌법 기관 A~E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A는 B의 동의를 얻어 C의 장(長)과 D의 장(長)을 임명한다.
- 기본권 보장 및 헌법 질서 수호를 위한 헌법 재판을 담당하는 D의 구성에는 C의 장(長), A, B가 모두 관여하며, C의 장(長)은 대법관 임명 제청권을 가진다.
- E는 조직상 A에 소속되지만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된 지위를 가진 헌법 기관으로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 검사를 담당하고, E의 장(長)은 B의 동의를 얻어 A가 임명한다.

- ① B는 A가 체결한 조약에 대한 비준권을 가진다.
- ② C는 A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선거 소송을 관할한다.
- ③ C와 달리 D는 명령·규칙의 위헌성·위법성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가진다.
- ④ D는 탄핵 소추권을 통해 A를 견제한다.
- ⑤ E는 B에 대한 국정 감사권을 가진다.

[250604]

6. 우리나라 헌법 기관 A~F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헌법 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을 가지는 A는 B의 임명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이는 C의 행정부 구성권에 대한 견제 기능을 수행하는데, C가 행정부 최고 심의 기관인 D를 구성하는 국무 위원을 임명할 때 B의 제청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한편, A는 E의 장(長)과 F의 장(長)의 임명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이는 사법 기관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F의 장(長)에게 E의 재판관을 지명할 권한을 부여하면서 A의 동의권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 ① F는 항소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 사건을 심판한다.
- ② C가 긴급 명령을 발한 경우 D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E의 재판관은 A의 탄핵 소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E는 F의 제청 신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관장한다.
- ⑤ B와 달리 A는 국무 위원에 대한 해임을 C에게 건의할 수 없다.

[241106]

8. 우리나라 헌법 기관 A~F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A는 헌법에 규정된 주요 국가 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 행사 시 B의 동의, C의 장(長)의 제청, D의 제청 등의 견제를 받는다. A는 E를 임명할 때 C의 장(長)의 제청을, 국무 위원 임명 시 D의 제청을 받아야 한다. 또한 헌법은 C의 장(長), F의 장(長), D, E 임명에 대한 동의권을 B에게 부여하여 A의 권한 행사를 견제하면서 각 기관에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한편, A와 B, 그리고 C의 장(長)이 F의 구성에 참여하도록 하여 헌법 재판을 담당하는 F가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 ① A는 B에게 임시회 집회를 요구하여 국정 감사를 실시한다.
- ② B는 A의 발의로 제안된 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결권을 가진다.
- ③ C는 A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선거 소송 사건에 대한 상고심을 관할한다.
- ④ D는 국무 회의의 부의장으로 국무 위원을 겸직할 수 있다.
- ⑤ E는 F의 탄핵 결정 이외에는 파면되지 않는다.

[240908]

13. 우리나라 헌법 기관 A~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는 대통령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선거 소송을 관할한다. B는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 C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 및 국가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검사를 담당하며, C의 장(長)은 D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① A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 ② 대통령은 법률안을 D의 본회의에 직권 상정할 수 있다.
- ③ A는 국정 감사를 통해 C를 견제한다.
- ④ C는 D 소속의 헌법 기관이지만 업무상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 ⑤ D는 B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240613]

19. 우리나라 헌법 기관 A~E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우리 헌법에는 국가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나타나고 있다. A가 B의 장(長), C의 장(長), D, 감사원장, 대법관을 임명할 때 E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국무 위원 임명 시 D의 제청을 요건으로 하며, A뿐 아니라 B의 장(長)과 E도 C의 구성에 관한 권한을 나누어 갖도록 규정한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 ① A에 대한 E의 견제 수단으로 '법률안 거부권'을 들 수 있다.
- ② B의 구성원은 D의 제청을 받아 A가 임명한다.
- ③ C에 대한 B의 견제 수단으로 '권한 쟁의 심판권'을 들 수 있다.
- ④ D에 대한 C의 견제 수단으로 '탄핵 심판권'을 들 수 있다.
- ⑤ A와 E 모두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 투표에 부칠 수 있다.

[231119]

9. 우리나라 헌법 기관 A~E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A는 정부가 편성하여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확정한 후, B의 장(長)과 C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하였다. 이후 D에 의해 임명된 B의 장(長)은 갑을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하고, 을을 정당 해산 심판을 담당하는 E의 재판관으로 지명하였다. 한편, D를 보좌하며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C는 D에게 ○○부 장관에 대한 해임을 건의하였다.

- ① A는 E의 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권을 가진다.
- ② B의 장(長)은 일반 사면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 ③ C는 특정한 사안에 대한 국정 조사권을 가진다.
- ④ 국무 위원은 C의 제청으로 A의 동의를 얻어 임명된다.
- ⑤ D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C는 이 문서에 부서한다.

[230909]

8. 우리나라 헌법 기관 A~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는 B의 후보자로 지명된 갑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실시한 후 갑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C가 갑을 B로 임명하면 갑은 C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게 됩니다. 한편 갑은 국가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 검사를 담당하는 D의 장(長)을 지낸 바 있습니다.



- ① B는 긴급 재정·경제 명령 및 처분권을 가진다.
- ② D는 국가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 ③ A는 C가 체결한 조약에 대한 비준권을 가진다.
- ④ D는 B의 소속하에 있지만 업무의 독립성이 보장된다.
- ⑤ A는 B의 해임을 C에게 건의할 수 있다.

[230608]

5. 표는 질문을 통해 우리나라 국가 기관 A~D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D는 각각 국회 의장, 대통령, 국무총리, 감사원장 중 하나이다.) [3점]

(○: 예, ×: 아니오)				
구분	A	B	C	D
탄핵 소추의 대상인가?	×	○	○	○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가?	×	×	○	×
법률안을 직권 상정할 수 있는가?	○	×	×	×
국무 위원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가?	×	○	×	×

- ① A, C는 모두 법률안 재의 요구권을 갖는다.
- ② B는 C가 참석한 국무 회의에서 의장이 된다.
- ③ D는 B와 달리 국민으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직접 부여받는다.
- ④ B, D는 모두 국회의 동의를 얻어 C가 임명한다.
- ⑤ A, C는 B, D와 달리 국가 긴급권을 행사할 수 있다.

[221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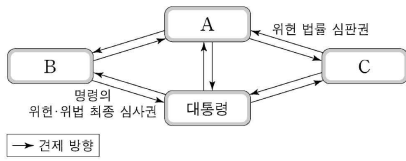
A의 장(長)은 갑을 B의 재판관으로 지명하고, C에게 헌직 법관인 을을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 제청하였다. 이후 D는 을에 대한 임명 동의안과 국무 위원 임명 제청권자인 E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하였다. 한편 민주적 정당성을 직접 확보할 수 없는 A의 장(長)이 헌법 기관을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 자유 민주주의의 법적 기초로서 모든 국가 권력의 정당성의 근거가 국민에게 있다는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인 (가)에 위반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헌법에 근거하여 A의 장(長)의 임명 과정에 C와 D가 권한을 행사하므로, 민주적 정당성 확보에 문제가 없다는 반론도 있다.

4. 우리나라 헌법 기관 A~E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A는 하급 법원의 판결에 대한 재항고 사건을 심판한다.
- ② B는 C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의 효력을 다루는 소송을 관할한다.
- ③ C는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D의 본회의에 직권 상정할 수 있다.
- ④ D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 ⑤ E는 D와 달리 국무 위원의 해임을 C에게 건의할 수 있다.

[2209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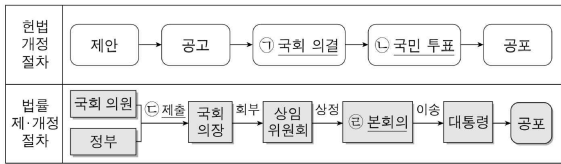
7. 그림은 우리나라 헌법 기관 간 견제 관계를 나타낸다.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 하나이다.) [3점]



- ① A의 장(長)은 국무 회의의 부의장이 된다.
- ② B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 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 ③ C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는 정부의 제소가 있을 때 그 정당의 해산 심판을 담당한다.
- ④ C가 위헌 법률 심판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A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이 전제되어야 한다.
- ⑤ B의 장(長)과 달리 C의 장(長)을 대통령이 임명할 때에는 A의 동의가 필요하다.

[220607]

12.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 ㉠. ㉠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 국회 의원 선거권자는 ㉡에 참여하여 투표할 수 있다.
- ㉢. 정부의 ㉢은 국회 의원 10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 ㉣. 교섭 단체는 제출된 법률안을 ㉣에 직권 상정할 수 있다.

- ① ㉠, ㉡ ② ㉠, ㉢ ③ ㉡, ㉢
- ④ ㉠, ㉡, ㉢ ⑤ ㉡, ㉢, ㉣

[2206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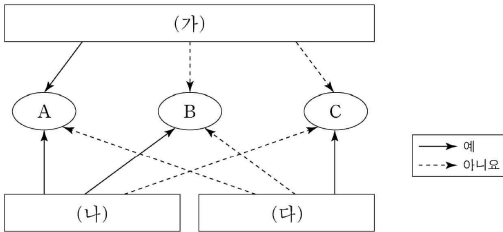
2. 우리나라 헌법 기관 A~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A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 B는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C와 차년도 A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예산안·결산은 C가 의장이 되는 D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① A는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을 체결·비준한다.
- ② B는 D의 소속하에 있지만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 ③ C가 일반 사면을 명하려면 A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④ C의 긴급 재정·경제 처분은 B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⑤ D의 모든 구성원은 A의 동의를 받아 C가 임명한다.

[211102]

6. 그림은 (가)~(다) 질문에 따라 우리나라 국가 기관 A~C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C는 각각 감사원, 국회, 대통령 중 하나이다.) [3점]



<보 기>

- ㉠. (가)에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고 있습니까?'가 들어가면, (나)에 '헌법 재판소 재판관의 구성 권한이 있습니까?'가 들어갈 수 없다.
- ㉡. (나)에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았습니까?'가 들어가면, (다)에 '국가 세입·세출의 결산 감사의 권한을 가집니까?'가 들어갈 수 있다.
- ㉢. (가)에 '법률안 제의 요구권이 있습니까?'가 들어가고 (나)에 '헌법 개정에 관한 권한이 있습니까?'가 들어가면, B의 장(長)은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된다.
- ㉣. (가)에 '국정 감사권을 가지고 있습니까?'가 들어가고 (다)에 '행정 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합니까?'가 들어가면, C의 장(長)은 A의 동의를 얻어 B가 임명한다.

- ① ㉠, ㉡ ② ㉡, ㉢ ③ ㉡, ㉣
- ④ ㉠, ㉡, ㉢ ⑤ ㉠, ㉢, ㉣

[210906]

8. 다음 자료는 우리나라 국회의 활동을 나타낸 것이다.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무총리 후보자 □□□의 ㉠임명 동의안 의결
 - ◇◇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 조사 실시
 -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법 ㉣개정안 재의결

- ① ㉠은 감사원장 임명 시에도 실시된다.
- ② ㉡은 입법부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행정부 견제 수단이다.
- ③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 ㉢을 할 수 있다.
- ④ △△법 개정안은 ㉣ 이후 국민 투표로 확정된다.
- ⑤ ㉢은 ㉣과 달리 국회의 입법 권한에 해당한다.

[210608]

9. 우리나라 국가 기관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절도죄 혐의로 공소 제기되어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갑은 항소하였고, 항소 법원인 A는 갑에게 형 감경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징역 8월을 선고하였다. 이후 상고한 갑은 상고심 계속 중 사건에 적용된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B는 이를 기각하였다. 이에 갑은 해당 법률 조항에 대해 C에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 ① A가 ‘지방 법원 합의부’라면 B는 ‘고등 법원’이다.
- ② B는 국회 의원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의 재판권을 가진다.
- ③ B의 장(長)은 C의 재판관 3인을 임명한다.
- ④ B는 직권으로 C에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C는 A의 법관을 탄핵 소추할 수 있다.

[210609]

(7) 법원과 헌법재판소

7.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은 선거 기간 동안 특정 후보와 정당을 지지하는 모임을 개최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상고심 계속 중, 갑은 선거 기간 동안 모든 집회를 제한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A에 (가) 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B에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하는 (나) 을/를 청구하였다. 이에 B는 ○○법 조항의 입법 목적은 정당하나,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이 명백하지 않은 집회나 모임의 개최, 정치적 표현까지 금지·처벌하는 것은 입법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았다.

<보 기>

ㄱ. A는 항소 법원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을 심판한다.
 ㄴ. B는 ○○법 조항이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ㄷ. A는 직권으로 B에 (가)를 제청 신청할 수 있다.
 ㄹ. 갑이 청구한 (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심판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260607]

9. 다음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죄로 기소된 갑은 벌금형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A가 이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법 조항에 따른 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다. 이에 다른 구제 절차를 거칠 수 없었던 갑은 □□법 조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B에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B는 해당 조항이 갑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죄로 기소된 을은 징역형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어 □□법 조항에 따라 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 및 ◇◇법 조항에 따라 디엔에이(DNA) 감식 시료 채취 대상자가 되었다. 이에 검사는 을의 디엔에이(DNA) 감식 시료를 채취하도록 하는 처분을 하였다. 을은 이에 불복하여 C에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고,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 조항에 대하여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해 줄 것을 C에 신청하였다. C가 을의 제청 신청을 기각 하자 을은 ◇◇법 조항이 자신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B에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B는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① A의 기각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C에 상소하여 재판을 받을 수 있다.
 ② 갑은 A의 기각 결정에 대하여 B에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③ C는 □□법 조항이 을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④ 갑과 달리 을은 □□법 조항에 따른 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지 않았다.
 ⑤ 을이 청구한 헌법 소원 심판과 달리 갑이 청구한 헌법 소원 심판은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이다.

[251109]

5.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HOME > 연재 > ◇◇의 헌법 교실
형사 보상 청구권 관련 헌법 재판소 결정 분석

헌법 재판소는 갑이 항소심 계속 중 청구한 헌법 소원 심판에서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판단하고, 해당 조항이 형벌 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판결 확정 후 형의 집행이 종료된 을은 ○○법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였다. 재심 절차에서 을은 ○○법 조항보다 법정형이 가벼운 형법 조항이 적용되어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후 을은 무죄 이외에 '재심 절차에서 감형된 경우'를 형사 보상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형사 보상법 □□조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 한다며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 재판소는 □□조항은 '무죄 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조항이므로, 무죄 재판을 받지 않은 을에게는 □□조항이 아닌 형사 보상법 △△조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하고 심판 대상을 변경하였다. 그리고 헌법 재판소는 '재심 판결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하여 집행된 구금'에 대하여 보상 요건을 규정하지 않은 △△조항이 을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재심 판결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하여 집행된 구금에 대해서도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보 기>

ㄱ. 갑이 청구한 헌법 소원 심판에서는 위헌 법률 심판 제청 결정을 구하는 갑의 신청에 대한 항소 법원의 기각 결정을 심판 대상으로 하였다.
 ㄴ. 을은 공권력 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 되었음을 이유로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ㄷ. 헌법 재판소는 을이 청구한 헌법 소원 심판에서 형사 보상법 △△조항이 헌법상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50905]

7.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HOME > 연재 > □□의 헌법 교실
헌법 소원 심판 알아보기

헌법 소원 심판은 공권력으로부터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 구제 제도라는 본질을 가진다. 본래적 의미의 헌법 소원 심판인 A는 공권력 작용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다른 법률상 구제 절차를 모두 거친 후 헌법 재판소에 그 구제를 청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 재판소법에는 당해 사건의 당사자가 B를 제청 신청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된 경우에 청구하는 C도 헌법 소원 심판으로 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A와 별도로 C를 헌법 소원 심판으로 규정한 이유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A의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어 B의 제청 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C는 형식적으로는 헌법 소원 심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헌법 재판소의 관장 사항 중 하나인 B에 해당한다.

<보 기>

ㄱ. 소송 당사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B의 제청 결정을 구하는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C를 청구할 수 없다.
 ㄴ. B와 달리 C는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ㄷ. A와 C 모두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공권력 작용에 대해서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50607]

9.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HOME > 연재 > □□□의 헌법 교실

수형자 관련 주요 헌법 재판소 결정 분석

헌법 재판소는 수형자 감이 민사 소송의 항소심 계속 중 청구한 헌법 소원 심판에서 수형자와 소송 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 시간 및 횟수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일반 접견에 포함시켜 접견 시간 및 횟수를 제한한 ○○법 시행령 조항이 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하였다. 이후 개정된 ○○법 시행령 조항에 따라 소송 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수용자를 접견하는 '변호사 접견'의 경우 별도의 접견 시간 및 횟수를 보장받게 되었다. 그러나 '변호사 접견'을 위해서는 ○○법 시행 규칙 조항에 따라 '소송 계속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이 요구되어 소 제기 전에는 사실상 일반 접견만이 가능하였다. 한편, 수형자 을의 재산 청구를 위해 변호인으로 선임된 병이 청구한 헌법 소원 심판에서 '변호사 접견'의 경우 '소송 계속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법 시행 규칙 조항이 병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결정이 있었다. 추후 소송 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아직 소를 제기하지 않은 단계에서도 수형자와의 충분한 접견 시간을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 기>

ㄱ. 감이 청구한 헌법 소원 심판은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법령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청구할 수 있다.
 ㄴ. 병이 청구한 헌법 소원 심판은 을에 대한 일반 접견의 근거인 ○○법 시행령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판 대상으로 한다.
 ㄷ. 감이 청구한 헌법 소원 심판과 병이 청구한 헌법 소원 심판 모두 권리 구체형 헌법 소원 심판이다.

-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 [241109]

9.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시장은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시설 설치에 금지된 지역에 배출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갑에게 배출 시설에 대한 폐쇄 명령을 내렸다. 이에 갑은 폐쇄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 항소하였다. 이후 갑은 항소심 계속 중 폐쇄 명령의 근거가 되는 해당 법률 조항이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A에 (가) 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A가 갑의 신청을 기각하자, 갑은 B에 (나) 을/를 청구하였다. 이에 B는 해당 법률 조항이 국민 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려는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고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해당 법률 조항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배출 시설 설치·사용자가 입게 되는 손해에 비해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① A는 1심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사건을 심판한다.
 ② B의 결정으로 갑의 배출 시설에 대한 폐쇄 명령은 취소된다.
 ③ B와 달리 A는 명령·규칙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가진다.
 ④ A는 직권으로 B에 (나)를 청구할 수 없다.
 ⑤ (가)와 달리 (나)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이루어진다.

[240909]

9.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은 을과 법률혼을 하고 3개월 후 자신이 을과 6촌 사이임을 이유로 혼인 무효의 소를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갑과 을의 혼인 신고가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 신고이므로 혼인이 무효임을 확인하였다. 을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계속 중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한 ○○ 조항과 ○○ 조항을 위반한 혼인을 무효로 하는 △△ 조항에 대하여 A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결정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다. A가 을의 항소 및 신청을 모두 기각하자 을은 해당 조항이 자신의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B에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B는 ○○ 조항과 △△ 조항 모두 정당한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지만, ○○ 조항과 달리 △△ 조항은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하였다.

- ① B는 정당 해산 심판을 관장한다.
 ② A의 장(長)은 B의 재판관 중 3인에 대한 지명권을 가진다.
 ③ A와 달리 B는 명령·규칙의 위법성에 대한 심사권을 가진다.
 ④ A는 을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 조항과 △△ 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B에 제청하였다.
 ⑤ B는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한 ○○ 조항이 입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결정하였다.

[240609]

8. 다음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죄로 기소된 갑은 기한을 넘겨 국민 참여 재판 의사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 지방 법원 합의부는 갑의 사건을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불복한 갑이 상소하였다. A는 이유가 없다며 이를 기각하였고 검사가 상소하였으나 B는 이를 기각하였다. 한편 을은 □□죄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자 상고하였다. 을은 ◇◇법 조항이 자신의 사건을 합의부 심판 대상에서 제외하여 국민 참여 재판을 받지 못하였다고 상고심 계속 중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심판을 제청해 줄 것을 B에 신청하였다. B가 이를 기각하자 을은 C에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고, C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① A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에 불복한 검사는 상고하였다.
 ② B는 갑과 을의 사건 모두 국민 참여 재판 대상이라고 판단하였다.
 ③ A와 달리 B는 대통령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선거 소송을 관할한다.
 ④ 명령이나 규칙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A는 직권으로 이에 대한 심사를 C에 신청할 수 있다.
 ⑤ 을은 C에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B에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하였다.

[231108]

7.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시장이 경유차 소유자인 갑에게 □□법에 따라 환경 개선 부담금 부과 처분을 하자, 갑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갑은 소송 계속 중 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A에 (가) 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B에 해당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하는 (나) 을/를 청구하였다. 이에 B는 해당 법률 조항이 국가에게 부여된 환경 보전이라는 헌법적 과제 실현을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 개선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입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보았다. 또한 이보다 덜 제한적인 방법은 없으며, 쾌적한 환경 조성이라는 공익은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결코 작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 ① A는 갑의 제청 신청 없이도 B에 (가)를 제청할 수 없다.
- ② 갑이 청구한 (나)는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심판이다.
- ③ (가)와 달리 (나)는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견제 수단이 된다.
- ④ B는 해당 법률 조항이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⑤ B의 장(長)은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230907]

9.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은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제출하였다는 범죄 사실로 공소 제기 되었고, 1심 법원으로부터 ‘벌금 20억 원에 처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4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갑의 항소는 기각 되었고, 이에 갑은 상고하였다. 갑은 상고심 계속 중 ‘노역장 유치 기간의 하한을 정하도록 한 형법 ○○조항을 시행일 이후 최초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한 형법 부칙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A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A는 이를 기각하였고 갑은 B에 (가) 을/를 청구하였다. B는 형법 ○○조항을 시행일 이후 최초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한 형법 부칙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 ① (가)는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이다.
- ② A는 명령·규칙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가진다.
- ③ B는 노역장 유치 기간의 하한을 정하도록 한 형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 ④ A와 달리 B는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관할한다.
- ⑤ B가 정당의 해산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A의 제소가 필요하다.

[230609]

8.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법원은 A에 (가) 을/를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 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A에 (나) 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 ① 재판 당사자의 (가) 제청 신청을 법원이 기각할 수 없다.
- ② 재판 당사자의 제청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은 A에 (가)를 제청할 수 있다.
- ③ (나)의 청구를 통해 법원은 국회의 자의적인 입법을 견제할 수 있다.
- ④ (나)의 청구인은 A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 ⑤ A의 장(長)은 국무총리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221108]

8.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 지방 법원에서 명예 훼손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A에 상고한 갑은 상고심 계속 중 사건에 적용된 법률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A에 (가) 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 당하여, B에 재판의 전제가 된 해당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하는 (나) 을/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B는 해당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 ① 갑이 청구한 (나)는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이다.
- ② (나)는 (가)와 달리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견제 수단이 된다.
- ③ A는 ㉠과 달리 위헌·위법 명령에 대한 심사권을 가진다.
- ④ A의 법관은 B가 담당하는 탄핵 심판의 대상에 포함된다.
- ⑤ A는 갑의 제청 신청이 없으면 B에 직권으로 (가)를 제청할 수 없다.

[2209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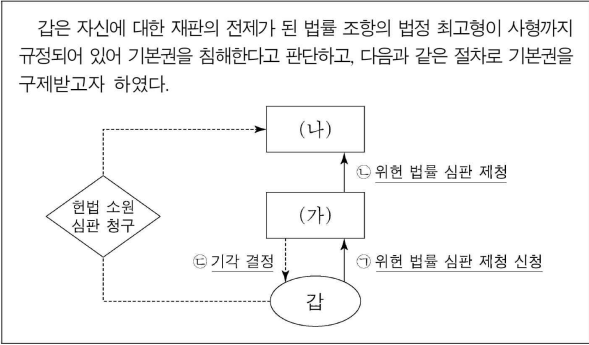
9. 다음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갑은 △△법 위반죄로 징역 3년에 집행 유예 5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해당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 달 후 □□법을 위반한 갑은 기소되었고, 1심 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지만 기각되었다. 이에 갑은 상고하였으나 A가 이를 기각하여 징역 6월의 형이 확정되었고, 그 결과 형법 조항에 따라 갑에 대한 위의 집행 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었다. 이에 다른 구제 절차를 거칠 수 없었던 갑은 해당 형법 조항이 이중 처벌 금지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는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심판인 (가)을/를 B에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B는 범죄자에 대한 재사회화와 사회 방위를 도모하려는 공익의 중대성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형법 조항에 따라 집행되는 형은 이미 선고된 형이므로 신체의 자유가 추가로 제한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해당 형법 조항으로 제한되는 갑의 기본권이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중하지 않다고 보아 갑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 ① A는 해당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도 B에 (가)를 청구할 수 없다.
- ② 갑은 A의 판결이 자신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B에 그 판결을 대상으로 (가)를 청구하였다.
- ③ B는 해당 형법 조항을 통한 기본권 제한이 목적은 정당하지만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 ④ B의 결정으로 법원은 갑의 △△법 위반죄 사건에 대하여 다시 재판을 하여 새로운 형을 부과하였을 것이다.
- ⑤ A의 장(長), B의 장(長) 모두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도 탄핵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11109]

7.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와 (나)는 우리나라의 국가 기관이다.) [3점]



- ① (가)가 ㉟을 받아들이면 해당 법률 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
- ② (가)는 갑의 신청 없이 ㉞을 할 수 없다.
- ③ (나)는 ㉞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는 권한으로 국회를 견제할 수 있다.
- ④ 갑이 ㉞에 불복하는 경우 항고할 수 있다.
- ⑤ (가), (나) 모두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 심급 제도를 두고 있다.

[210907]

(8) 지방 자치

8. 우리나라 지방 자치 단체의 기관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지방 의회, 지방 자치 단체의 장 중 하나임.)

최근 ○○시에서는 반려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지방 자치 단체를 대표하는 A는 반려견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운동 부족으로 인한 공격성 증가를 예방하기 위하여 '반려견 산책 의무화 조례안'을 마련해 B에 제출하였다. 조례안은 일정 크기 이상의 반려견을 하루 한 번 이상 산책시키도록 규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B는 '개별 가정의 상황과 생활 방식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라며 조례안 심의를 보류하였다.

- ① A는 지방 자치 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집행 기관이다.
- ② A가 제정하는 규칙은 B의 의결을 거쳐 효력이 발생한다.
- ③ A는 B가 편성한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권한을 가진다.
- ④ A와 달리 B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민 소환 제도가 있다.
- ⑤ A와 B 모두 중앙 정부와 수평적 권력 분립 관계에 있다.

[260608]

15. 우리나라 지방 자치 단체의 기관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지방 자치 단체의 장, 지방 의회 중 하나임.) [3점]

지방 자치법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 자치 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을 주민 투표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종전에는 지방 자치 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 중 A의 의결로 제정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주민 투표의 대상으로 하였지만, 주민 투표법 개정 후 따라 조례로 정하지 않아도 지방 자치법에 규정된 사항에 해당하면 주민 투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지방 자치 단체를 대표하는 B가 권한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을 주민 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하여 지방 자치 행정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 ① A는 주민 투표법 개정 및 폐지에 대한 의결권을 가진다.
- ② B는 법령 위반을 이유로는 주민 소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③ B는 해당 지방 자치 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따라 B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한다.
- ④ B는 A가 편성한 지방 자치 단체의 예산안에 대해 심의·확정한다.
- ⑤ 지방 자치 단체의 행정 사무 감사권은 A에 대한 B의 견제 수단으로 해당한다.

[251115]

9.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지난 시간에 배운 주민 참여 제도 (가), (나), (다)의 사례에 대해 조사해 온 것을 발표해 볼까요?

(가)의 사례로는 직권을 남용한 ㉠○○도의회 지역구 의원 A가 주민 투표를 통해 임기 중 그 직을 상실한 것을 들 수 있어요.

(나)의 사례로는 ○○군수가 □□

(다)의 사례로는 ○○군 주민들이 적법한 시설 유지 여부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주민 투표를 실시한 것을 들 수 있어요.

(다)의 사례로는 ○○군 주민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군의회에 주차 시설 관리에 대한 '△△조례안' 제정을 청구한 것을 들 수 있어요.

<보 기>

- ㉠. ㉠의 지역구 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에서는 동일 선거구 내 당선자 간 득표율 차이로 표의 등가성 문제가 발생한다.
- ㉡. ㉡은 ○○군의 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
- ㉢. (다)를 통해 주민은 지방 자치법의 제·개정 및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 ㉣. (가)와 (나) 모두 지방 자치 행정의 민주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250909]

5. 우리나라 지방 자치 단체의 기관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지방 자치 단체의 장, 지방 의회 중 하나임.)

A는 지방 자치법에서 정하여 위임한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B에 인사 청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B는 인사 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인사 권한을 가진 A의 요청 없이는 B가 인사 청문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집행 기관인 A에 대한 B의 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 ① A는 주민 소환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B는 A가 편성한 지방 자치 단체의 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
- ③ A와 달리 B는 지방 자치 단체의 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 ④ B와 달리 A는 지방 자치 단체의 행정 사무를 감사하는 권한을 가진다.
- ⑤ A와 B 모두 중앙 정부와 수평적 권력 분립 관계에 있다.

[250605]

7.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지방 자치 단체의 장, 지방 의회 중 하나임.)

현법은 A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B의 선임 방법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는 주민의 대의 기관인 A뿐만 아니라 지방 자치 단체를 대표하는 B도 주민이 직접 선출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된 지방 자치법에 의하면 따로 법률로 정하는 경우 주민 투표를 거쳐 B의 선임 방법을 포함한 지방 자치 단체의 기관 구성 형태를 다르게 할 수 있어 지방 자치 단체별로 기관 구성 형태가 다양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① A는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를 의결한다.
- ② 주민 참여 예산 제도는 A의 예산안 편성권에 대한 통제 수단이다.
- ③ B의 선임 방법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은 주민 투표를 통해 확정된다.
- ④ B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의 대표 결정 방식은 다수 대표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A의 구성원과 달리 B는 주민 소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41107]

6. 주민 참여 제도 (가)~(다)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제도	해당 사례
(가)	○○군 하수 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주민 생활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군 주민들은 하수 처리장 악취 방지를 위한 조례 제정을 청구하기 위해 주민들의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나)	△△시장은 쓰레기 소각장 건설이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쓰레기 소각장 건설 여부를 주민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다. 주민 투표에서 주민들의 과반수가 반대하여 쓰레기 소각장 건설은 무산되었다.
(다)	□□도 의회 지역구 의원 A는 대규모 산업 단지 유치 과정에서 비리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주민 투표를 통해 임기 중에 해임되었다.

<보 기>

ㄱ. (가)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주민이 조례안을 청구하면 지방 자치 단체장이 해당 조례안을 심의·의결한다.
 ㄴ. (다)의 대상에는 지방 자치 단체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는 지방 자치 단체의 기관이 포함된다.
 ㄷ. (다)와 달리 (나)는 주민이 지방 자치 단체장의 권한 행사를 견제하는 제도이다.
 ㄹ. (가)와 (나) 모두 지방 자치 단체의 정책 결정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40906]

6.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지방 자치 단체의 장, 지방 의회 중 하나임.)

조례로 정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반드시 주민 투표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조례안이 의결되자 A는 재의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B는 ○○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하였고, A는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며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법원은 A의 재량으로 주민 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 지방 자치법에 반하는 ○○조례안의 일부 규정은 지방 자치 단체의 사무를 총괄하는 A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이며, ○○조례안에 대한 B의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 ① A는 주민 소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② B는 ㉠을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③ A와 달리 B는 지방 자치 단체의 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④ B와 달리 A는 지방 자치 단체의 행정 사무를 감사하는 권한을 가진다.
- ⑤ B는 A가 편성한 지방 자치 단체의 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

[240606]

6.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지방 의회, 지방 자치 단체의 장 중 하나임.)

교사: 우리나라 지방 자치 단체의 기관 A, B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갑: A는 지방 자치 단체의 사무에 관한 감사·조사권이 있습니다.
 을: B는 지역구 의원과 비례 대표 의원으로 구성됩니다.
 병: A와 달리 B는 지방 자치 단체의 집행 기관으로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교사: 두 사람의 설명은 옳고, 나머지 한 사람의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① A는 지방 자치 단체를 대표하고 지방 행정 사무를 총괄한다.
- ② B는 지방 자치 단체의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한다.
- ③ B는 지방 자치 단체의 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④ B와 달리 A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민 소환 제도가 있다.
- ⑤ A와 B 모두 중앙 정부와 수평적 권력 분립 관계에 있다.

[231106]

5.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와 B는 우리나라 지방 자치 단체 기관임.)

- A는 지방 자치 단체를 대표하고, 지방 자치 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따라 A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한다.
- B는 ㉠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등을 의결한다. 조례안이 B에서 의결되면 B의 의장은 의결된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A에게 이를 이송해야 한다.

- ① 주민에게는 ㉠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② A와 달리 B의 의원은 주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 ③ B의 의장과 달리 A는 주민 소환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B는 A가 편성한 지방 자치 단체의 예산안에 대한 의결권을 가진다.
- ⑤ A와 B는 수직적 권력 분립 관계에 있다.

[230605]

7.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주민 참여 예산 제도

- 의의 :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포함함으로써 지방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증대하고 참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 기대 효과 : (가)
- 추진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 ㉠ 〇〇시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 참여 방법 : 공청회 또는 간담회, 인터넷 설문 조사 등
- 절차

주민 의견
수렴

➡

의견 검토
및 심사

➡

예산 편성안
조정

➡

㉠ 예산의
심의·확정

- ① ㉠은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 간 수평적 권력 분립에 기여한다.
- ② ㉡에 대한 개정 및 폐지 권한은 지방 자치 단체장이 가진다.
- ③ ㉢시 주민은 적법한 요건을 갖추 ㉣의 개정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은 ㉢시 주민 투표로 결정된다.
- ⑤ (가)에는 '주민의 의견 반영을 통한 국가 예산 편성 과정의 신속성 확보'가 들어갈 수 있다.

[220907]

7.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와 B는 우리나라 지방 자치 단체의 기관이다.)

<지방 자치법, 이렇게 달라집니다>

- ㉠ 주민 조례 발안 제도 개선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결권을 가진 A에 주인이 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를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 규칙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권 신설
 지방 자치 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는 B에 일정 조건을 갖춘 주민이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에 한하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① ㉠은 ㉡과 달리 주민 자치를 강화하여 국민 주권주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
- ② A는 조례안을 주민 투표에 부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 ③ A와 B 간에 수직적 권력 분립이 나타난다.
- ④ A는 B가 편성한 지방 자치 단체의 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
- ⑤ B는 A의 장(長)과 달리 주민 소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21107]

11.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지방 자치 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각 지방 자치 단체의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주민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면 관련 부서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지방 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A가 ㉡예산안을 편성한다. 편성 후 제출된 예산안은 B가 심의·의결하고, 의결된 사항은 주민의 선거로 선출된 A가 집행한다.

- ① 주민은 ㉠의 폐지를 청구할 수 없다.
- ② ㉡은 주민 투표를 통해야만 최종 확정된다.
- ③ A는 중앙 정부에서 위임한 사무를 담당하지 않는다.
- ④ B의 의원은 지역구 의원과 비례 대표 의원으로 구분된다.
- ⑤ A는 B와 달리 담당 사무에 관하여 ㉠을 제정할 수 있다.

[220611]

19. 우리나라 지방 자치 단체의 기관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군 주민들은 노인 복지를 증진하는 내용을 담은 ‘○○ 조례안’을 적법한 요건을 갖춰 A에게 제출함으로써 조례 제정을 청구하였다. A는 주민이 청구한 조례안을 B에 부의하였다. B는 조례안을 심의·의결하였고, 의결된 조례안은 A에게 이송되었다.

- ① A는 지방 자치 단체 예산의 심의·확정권을 갖는다.
- ② B는 집행 기관으로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한 조례를 집행한다.
- ③ B의 장(長)은 지방 자치 단체를 대표하고 행정 사무를 총괄한다.
- ④ A와 B 간에 수직적 권력 분립이 나타난다.
- ⑤ B는 지방 자치 단체의 사무에 관한 감사·조사권으로 A를 견제할 수 있다.

[211119]

5.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군 주민들은 재개발 과정에서 인허가와 관련된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군수를 임기 중에 주민의 투표에 의해 해임할 수 있는 절차를 밟고 있다.
- □□시 의회는 △△당 의원이 발의한 시내버스 탑승 시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는 ㉡조례 제정을 하였다.

- ① ㉠은 주민 소환 제도에 해당한다.
- ② ㉠은 주민의 직접 참여를 제한한다.
- ③ ㉡은 주민 투표로 확정된다.
- ④ ㉡의 권한은 집행 기관이 독점적으로 가진다.
- ⑤ ㉠, ㉡은 모두 중앙 정부와의 수평적 권력 분립에 기여한다.

[210605]

(9) 정치 과정과 정치 참여

7.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사건의 피해자 단체는 ○○ 사건 발생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며
㉡거리에 모여 시위를 진행하였다. 선거를 앞두고 국회는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을 제정하였다. △△법 시행 후,
이 단체는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국민 참여 입법 센터 홈페이지에
㉣△△법 개정을 위한 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하였다.

<보 기>

- ㄱ. ㉠은 정책 결정 기구이다.
- ㄴ. ㉡은 정치 과정에서 투입에 해당한다.
- ㄷ. ㉢에 비해 ㉣은 정치 참여의 시·공간적 제약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 ㄹ. ㉢과 달리 ㉣은 정치 과정에서 산출에 해당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40607]

6.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국에서는 플라스틱 용기 사용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이에 ㉠○○○ 시민 단체는 정부에 환경 관련 ㉡정책안을
제안하였다. 정부는 제안된 정책안을 반영하여 수립된 ㉢□□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시행된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평가가 나타났다.
이후 ○○ 시민 단체는 시민들의 평가를 반영하여 ㉤보완된 정책안을
정부에 제안하였다. 정부가 이를 수용하여 □□ 정책이 수정·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 ① ㉠은 정책 결정 기구에 해당한다.
- ② ㉢과 달리 ㉣은 정치 과정에서 산출에 해당한다.
- ③ ㉢과 달리 ㉣은 경제, 사회, 문화 등 정치 외적 요소의 영향을 받는다.
- ④ 언론은 정치 과정에서 ㉣에 참여할 수 없다.
- ⑤ ㉢과 달리 ㉤은 시민의 정치적 효능감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230906]

11.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신문

○○○○년 ○○월 ○○일

㉠ 선거를 앞두고 □□ 복지 정책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 학회에서는 포럼을 개최하여 □□ 복지 정책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그러나
효과적인 정책 안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더욱 다양한 ㉢ 정보 제공을 통한 여론 형성
과정이 요구된다. 그리고 관계 부처에서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여 □□ 복지 정책을
결정·시행하면, ㉣ 그 결정·시행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후
그 평가를 반영하여 □□ 복지 정책에 대한 수정·보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 기>

- ㄱ. ㉠에서 투표에 참여하는 것은 정치 과정에서 산출에 해당한다.
- ㄴ. ㉡은 정치 과정에서 정책 결정 기구에 해당한다.
- ㄷ. 언론은 정치 과정에서 ㉢의 역할을 할 수 있다.
- ㄹ. ㉣은 정치 과정에서 환류에 해당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30611]

10.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교사

동물 보호를 위해 정치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경험을 발표해 보세요.

국회 의원 선거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 후보자에게 투표했어요.

국민 참여 입법 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동물 확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했어요.

동물 보호 단체에 가입하여 ㉢회원들과 함께 거리 홍보 활동을 했어요.
그 후에 국회 전자 청원 시스템에 ㉣○○법 개정 청원서를 작성했고,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원이 제출된 것을 확인했어요.

<보 기>

- ㄱ. ㉠은 ㉢과 달리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다.
- ㄴ. ㉡은 ㉣에 비해 정치 참여에서 시·공간적 제약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 ㄷ. ㉡은 ㉣과 달리 정치적 효능감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다.
- ㄹ. ㉣은 ㉠과 달리 집단적 정치 참여 방법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21110]

11.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의원 소개 청원’은 현실적으로 국민이 국회 의원의 소개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청원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 ‘국민 동의 청원’이라는 제도가 추가로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자신의 요구를 전자 청원 시스템에 등록하여 일정 수 이상 국민의 동의를 얻으면 자동으로 국회에 청원이 되는 방식이다. 청원된 의견은 검토를 거쳐 정책에 반영되기도 한다.
- □□시는 청소년들의 요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 ‘청소년 참여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 위원회에는 공개 모집을 거쳐 선발된 20여 명의 청소년 위원이 활동 중이다. 이들은 지역 청소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 청소년들의 요구를 □□시에 제안한다. 지난해 □□시는 청소년 참여 위원회가 제출한 제안서를 검토하여 그중 일부를 정책에 반영하였다.

<보 기>

- ㄱ. ㉠의 도입은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정치 참여의 수단이 다양해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ㄴ. 정치 과정에서 ㉠은 ‘투입’, ㉣은 ‘산출’에 해당된다.
 ㄷ. ㉡, ㉣ 모두 참여자의 정치적 효능감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ㄹ. ㉢은 ㉣과 달리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20911]

5.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신문 △△△△년 △△월 △△일

○○법 개정, 국민의 청원권 대폭 강화

그동안 ㉠ 청원을 하려면 해당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대한 ㉡ 국민의 개선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 온라인 제출도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또한 청원인이 원하는 경우 온라인 청원 시스템에 청원 내용을 공개하여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 공개 청원 제도도 함께 도입되었다.

- ① ㉠이 활성화될수록 정치권력에 대한 국민의 감시 기능은 약화된다.
 ② ㉡은 정치 과정 중 산출에 해당한다.
 ③ ㉢을 통해 정치 참여의 공간적 제약을 완화할 수 있다.
 ④ ㉣은 국민의 의견 제시 기회를 축소시킨다.
 ⑤ ㉣은 ㉢과 달리 국민의 정치적 효능감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2206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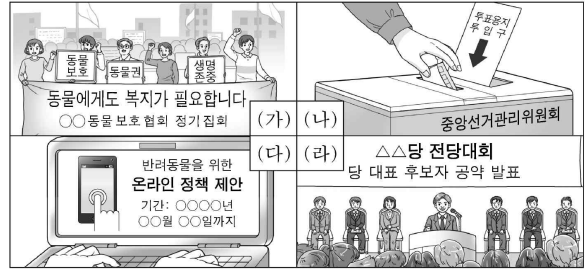
3.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국민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 온라인 국민 참여 플랫폼을 통해 정책을 제안할 수 있으며, 해당 제안이 일정 수 이상 국민의 추천을 받으면 정책에 반영되기도 한다.
- 국회 의원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운영되는 사전 투표소에 가서 ㉡ 사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 국민은 자신의 정책 아이디어를 ㉢ 정책 선거 관련 홈페이지에 희망 공약으로 제안할 수 있고, 이를 반영하여 공약으로 제시한 후보자가 선거에서 당선되면 해당 제안은 정책으로 실현되기도 한다.

- ① ㉡은 전체 유권자의 수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
 ② ㉡과 달리 ㉢은 정치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
 ③ ㉢과 달리 ㉠은 국민의 정치적 효능감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④ ㉠, ㉡ 모두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법이다.
 ⑤ ㉠, ㉢ 모두 정치 참여의 시·공간적 제약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211103]

9. 그림은 정치 참여 방법 (가)~(라)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 ㄱ. (가)는 (나)와 달리 집단적인 정치 참여 방법이다.
 ㄴ. (나)는 (라)와 달리 정치 과정에서 투입 기능을 담당한다.
 ㄷ. (다)는 (가), (나), (라)에 비해 시·공간의 제약이 적어 시민의 정치 참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ㄹ. (라)는 (가), (나), (다)와 달리 정치권력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가진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10909]

4.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치 과정은 사회 구성원의 요구와 지지가 ㉠ 정책 결정 기구에 ㉡ 투입되어 정책으로 형성·조정·집행되는 ㉢ 산출의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모두가 만족하는 정책의 산출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 환류 과정을 통해 기존의 정책이 수정·보완되거나 국민의 요구가 재투입되기도 한다.

- ① 입법부는 ㉠에 해당한다.
 ② 집단과 달리 개인은 ㉡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시민의 입법 청원 활동은 ㉢의 사례에 해당한다.
 ④ 언론은 ㉣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은 모두 정치 외적 요소인 경제, 사회,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210604]

(10) 정치 참여 집단

9. 정치 참여 집단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중 하나임.) [3점]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조직된 환경 단체인 A는 정부가 제시한 온실 가스 감축 목표가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미래 세대의 기본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제조업체 종사자들의 특수한 이익 실현을 위해 결성된 B는 탄소 감축량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막대한 생산 비용을 초래해 기업의 설비 투자 중단과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편, C는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 변화를 국민 삶과 직결된 핵심 의제로 판단하고, 대중교통 무상화 등 기후 관련 공약을 제시하며 환경에 관심이 많은 유권자 공약에 공을 들이고 있다.

- ① A는 정치적 충원 기능을 담당하며 정치적 책임을 진다.
- ② B는 정치 과정에서 산출을 담당하는 정책 결정 기구이다.
- ③ B와 달리 C는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며 공익을 추구한다.
- ④ C와 달리 A는 정부 정책을 감시, 비판하는 기능을 한다.
- ⑤ A, B, C 모두 정치 과정에서 투입 기능을 수행한다.

[260609]

6.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중 하나임.) [3점]

A, B, C는 모두 (가)는 점에서 정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로 볼 수 있지만, A는 (나)는 점에서 B, C와 구별되는 특징을 갖는다. 소속 집단의 특수한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해 정치 활동을 하는 B와 공익 추구를 목적으로 공공의 이해관계가 결린 쟁점을 제기하고 해결을 요구하는 C는 모두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해당 집단의 요구가 관철되기를 원하지만, B와 C는 모두 정치권력을 목표로 하는 집단은 아니다. 하지만 A는 단순히 요구의 전달에 그치지 않고 그 구성원이 공유하는 공통의 정치적 가치에 기반하여 정치권력을 획득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함으로써 유권자를 설득해야 한다.

- ① A는 정치적 현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치 사회화 기능을 한다.
- ② B는 행정부와 의회를 매개하기 위해 교섭 단체를 구성한다.
- ③ C는 국가 수준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결정 기구이다.
- ④ (가)에는 ‘공직 선거를 통해 정치적 책임을 진다’가 들어갈 수 있다.
- ⑤ (나)에는 ‘사회적 쟁점에 대한 여론을 형성한다’가 들어갈 수 있다.

[251106]

16. 정치 참여 집단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중 하나임.)

A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의원의 공약인 ○○역 완공이 다시 연기됨에 따라 ○○역 주변 지하 공간 복합 개발 사업도 미루어졌다. 이에 ○○지역 상인들의 개발 이익을 위해 모인 B는 해당 사업의 빠른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공익 추구를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C는 ○○지역에서 총선용 개발 공약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 ① A는 국정 전반을 감사할 수 있는 국정 감사권을 가진다.
- ② B는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 ③ C는 정치 과정에서 산출을 담당하는 정책 결정 기구이다.
- ④ C와 달리 B는 정치 사회화 기능을 담당하지 않는다.
- ⑤ A와 B 모두 자신들의 활동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진다.

[250916]

8. 정치 참여 집단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중 하나임.) [3점]

△△신문 ○○○○년 ○○월 ○○일
A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갑은 지난 총선에서 □□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지난달 □□법 개정안을 갑이 대표발의 하였다. 이에 관련 사업자들의 특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조직된 B는 □□법 개정으로 자신들의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국민 주거 생활 안정이라는 공익 추구를 목적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C는 환경의 의사를 밝히고 A에게 빠른 입법을 촉구하면서 이와 관련한 공익적 사회 운동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겠다고 발표하였다.

- ① A는 정치적 중립을 추구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② B는 정치 과정에서 산출을 담당하는 정책 결정 기구이다.
- ③ C는 당정 협의회를 통해 행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 ④ B와 달리 A는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조직된 집단이다.
- ⑤ B와 달리 C는 A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250608]

13. 정치 참여 집단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중 하나임.)

관광 개발 사업이 예정된 ○○ 지역의 상가 이익 증대를 위해 조직된 A는 상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며 해당 사업의 빠른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공익 추구를 목적으로 결성되어 환경 보호 활동에 앞장서 온 B는 생태계 파괴 우려가 있다며 해당 사업에 반대하고 있다. 한편, C는 A와 B의 의견을 수렴한 후 친환경 개발 분야 전문가를 이번 공직 선거에 후보자로 공천하였다.

- ① A는 의회와 행정부를 매개하기 위해 정당 협의회를 구성한다.
- ② B는 국정 감사권을 행사하여 행정부를 견제·감시한다.
- ③ B는 정치 과정에서 산출을 담당하는 정책 결정 기구이다.
- ④ C는 공익보다 사익을 우선시하며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⑤ C는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며 정치적 충원 기능을 담당한다.

[241113]

16. A~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D는 각각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언론 중 하나임.)



우리 ○○단체는 여행업계 종사자들의 특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조직된 A입니다. 소속 회원들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공직 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하는 B의 공약에 대해 적극적으로 우리의 의견을 표명해야 합니다.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C와 연대하여 우리의 이익 추구가 공익과 충돌한다는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 현상에 대해 취재 등의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D가 우리 단체에 대해 보도한 기사를 비판적 시각으로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 ① A와 달리 B는 정치 과정에서 투입 기능을 한다.
- ② B와 달리 C는 행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 ③ C와 달리 A는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
- ④ A, B와 달리 D는 사회 구성원에게 정치적 지식을 습득하게 한다.
- ⑤ A, C, D와 달리 B는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조직된 집단이다.

[240916]

16. 정치 참여 집단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중 하나임.) [3점]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조직된 A는 아동 보육 수당 확대를 위한 서명 운동을 실시하였으며, 학원 업계 종사자들의 특수한 이익 실현을 위해 결성된 B는 학원 영업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한편,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C는 간담회를 통해 A와 B의 의견을 수렴하고 선거에 활용할 교육 분야 정책 공약집을 발간하였습니다.



- ① B는 정당 협의회를 통해 의회와 행정부를 매개한다.
- ② C는 정치적 충원 기능을 담당하며 정치적 책임을 진다.
- ③ A와 달리 B는 정부의 의사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 ④ B와 달리 C는 지나친 특수 이익 추구로 공익과 충돌한다.
- ⑤ C와 달리 A는 정치 사회화 기능을 수행한다.

[240616]

2. 정치 참여 집단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중 하나임.) [3점]

공익 추구를 목적으로 결성된 A는 시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정책을 제안함으로써 B의 공약 수립에 영향을 줄 수 있다. B는 공직 선거에서 시민의 선택을 받아 공약을 정책으로 실현하고자 하며, C는 자신의 특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공익과 충돌하는 공약을 B에게 요구하기도 한다.

- ① A는 정권 획득을 위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
- ② B는 정치 과정에서 정책 집행의 주체인 국가 기관이다.
- ③ A와 달리 B는 사회적 쟁점에 대한 여론을 형성한다.
- ④ B와 달리 C는 자신의 활동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진다.
- ⑤ A와 C 모두 정부 정책에 대한 감시와 비판의 기능을 수행한다.

[231102]

8. 정치 참여 집단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A와 B는 모두 대의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본질적인 제도인 공직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집단의 특수 이익 실현을 목적으로 결성된 A는 공직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로 하여금 구성원에게 유리한 정책안을 공약으로 제시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공직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B와 구분된다. B는 공직 선거에서 보다 많은 표를 얻고자 일반적으로 국민의 다양한 요구와 이해가 집약된 정책안을 공약으로 제시하지만, A는 공공의 이익보다 구성원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공약을 지지한다.

- ① A는 당정 협의회를 구성하여 행정부와 의회를 매개한다.
- ② B는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조직된 집단으로 정치적 책임을 진다.
- ③ A와 달리 B는 국정 전반을 감사할 수 있는 국정 감사권을 가진다.
- ④ B와 달리 A는 공직 선거에서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⑤ A, B 모두 정치적 충원 기능을 담당하는 국가 기관이다.

[230908]

19. 정치 참여 집단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중 하나임.)

A는 B, C와 달리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A는 특수한 이익을 추구하는 B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시민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C는 공공의 이익 실현을 위해 집단 행동에 나서기도 한다.

- ① A는 행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② B는 정치적 중립을 본질적 특성으로 가진다.
- ③ A와 달리 C는 정치적 책임을 진다.
- ④ B와 달리 A는 정치 사회화 기능을 한다.
- ⑤ A와 달리 B, C는 정치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한다.

[230619]

9. A~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D는 각각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언론 중 하나이다.) [3점]

역사적으로 A는 정치적 충원 기능을 수행하며 대의 민주주의의 한 축을 담당했지만,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A만으로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정치 과정에 모두 반영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시민은 자신들의 특수한 이익을 실현하고자 B를 조직하기도 하고, 공익 추구를 목표로 자발적으로 조직한 단체인 C에 가입하여 활동하며 정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또한 시민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사회 현상에 대한 보도와 해설로 정보를 제공하는 D를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통로로도 활용하며 정치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 ① A는 B와 달리 정치적 중립을 추구한다.
- ② B는 특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A를 통해 정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 ③ C는 A와 달리 정치적 책임을 진다.
- ④ C는 B, D와 달리 사회 구성원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 ⑤ D는 A, C와 달리 여론을 형성하여 의회와 행정부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221109]

6. 정치 참여 집단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집단이다.)



본인의 정치 참여 경험에 대해 얘기해 주세요.



저는 지난 총선에서 우리 지역구 의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A의 국민 경선에 참여하여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저는 환경 보호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자발적으로 B를 조직하여 평소에는 '일회용품 줄이기' 공익 캠페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기간에는 A의 환경 보호 공약을 평가하여 유권자들의 선택을 도왔습니다.



저는 ○○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데, 같은 업종의 종사자들로 구성된 C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기간에는 C의 일원으로 A에 방문하여 ○○ 업종에 대한 지원 제도를 공약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① A는 국정 감사 및 조사권을 가진다.
- ② B는 C와 달리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정치권력을 견제한다.
- ③ C는 B와 달리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④ A는 B, C와 달리 정치권력의 획득과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 ⑤ B는 A, C와 달리 정치에 대한 국민의 지식과 관심을 증진시킨다.

[220906]

8. 정치 참여 집단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집단이다.) [3점]

○○국립공원 주변 관광업 종사자들로 구성된 A는 B를 찾아가 관광 업계의 숙원 사업인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하루 빨리 시작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마련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전달하였다. 한편 100여 개국의 시민들이 연대한 환경 보호 운동 단체인 C는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반대 시위를 벌였다. 이와 관련하여 B는 더 많은 유권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거 공약을 수립하고자 공청회를 열었다.

- ① A는 정권을 획득하여 정당을 실현하고자 한다.
- ② B는 공직 선거에서 후보자를 공천한다.
- ③ A는 B와 달리 정치 사회화 기능을 수행한다.
- ④ C는 A와 달리 소속 구성원의 이익을 공익보다 우선시한다.
- ⑤ C는 B와 달리 자신들의 활동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진다.

[220608]

8.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집단이다.) [3점]

학교에서 ‘고카페인 함유’ 표시가 있는 모든 음료의 판매를 금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학부모들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식품 업계 종사자들로 구성된 A는 해당 정책이 소속 회원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식품 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다. 반면, 청소년의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위한 공익 캠페인을 추진해 온 B는 해당 정책이 청소년의 건강권 보호에 필요하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에 C는 A와 B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가오는 총선을 위해 공약을 개발하고 관련 전문가를 후보자로 공천하였다.

- ① A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며 국민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진다.
- ② B의 활동은 정치 과정에서 산출에 해당한다.
- ③ C는 여론을 반영하여 의회와 정부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 ④ A와 달리 B는 대의 정치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 ⑤ C와 달리 A, B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치 사회화 기능을 수행한다.

[211108]

5.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시민 단체, 이익 집단, 정당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집단이다.)

A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B의 보건 의료 정책에 관련된 공약의 평가를 발표하였다. 발표 자료에서 A는 신종 감염병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B의 정책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소상공인들로 조직된 C는 B를 방문하여 신종 감염병 유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조합원들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B는 정부가 특별 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 ① A는 구성원의 이익을 공익보다 우선시한다.
- ② B는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법률안을 발의한다.
- ③ C는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선거에서 후보자를 공천한다.
- ④ A는 B, C와 달리 대의 정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 ⑤ B는 A, C와 달리 행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며 정치적 책임을 진다.

[210905]

10. 정치 참여 집단 A~C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C는 각각 시민 단체, 이익 집단, 정당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집단이다.)

최근 A와 B는 C가 주최한 방송 관련 공청회에 참석하여 각자의 주장을 내세웠다. 먼저 A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공익적 보도의 강화를 주장하며 방송의 공공성을 옹호했다. 이에 대해 방송 업계 소속 회원들로 구성된 B는 방송 업계 수익 증대를 위해 보도 시간 축소와 광고 시간 확대를 역설했다. C는 이들의 대립적 주장을 검토하여 다가올 선거에서 유권자의 지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공약을 수립하기 위해 고심 중이다.

—<보 기>—

- ㄱ. A는 B와 달리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ㄴ. C는 A와 달리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한다.
- ㄷ. A, B는 모두 대의 정치의 한계를 보완한다.
- ㄹ. C는 A, B와 달리 정치 사회화 기능을 수행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10610]

(11) 민법 vs 형법

13. A, B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 B는 각각 민법, 형법 중 하나임.)

갑은 길을 건다가 을과 시비가 붙어 다툼 끝에 을을 때렸고, 이로 인해 을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을은 갑의 구타 행위가 A에 규정된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갑을 수사 기관에 고소하였다. 또한 을은 갑에게 B에 규정된 불법 행위 책임을 주장하면서 치료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 <보 기>—
- ㄱ. A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기능을 하지만,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은 하지 않는다.
 - ㄴ. B는 개인 간의 권리와 의무의 발생과 변경, 소멸 등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법(私法)에 해당한다.
 - ㄷ. A와 달리 B는 타인의 물건을 훔침으로써 그 타인에게 손해를 입게 한 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 ㄹ. A, B 모두 사회 구성원에게 행위의 기준을 제공하고, 재판 시 법원의 판단 기준이 된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230913]

(12) 민법의 기본 원칙

○○건물에는 국민 안전 보호를 위하여 ㉠소방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에 의해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다. 이 건물을 매수한 갑은 ㉡반려견 호텔 운영을 조건으로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을은 이 건물 1층에서 반려견을 위한 △△호텔을 운영하면서 부속 시설인 방화문 구역에 짐을 쌓아놓는 등 방화문의 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였다. 한편, 전자 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는 병은 을과의 계약에 따라 자신의 직원 정에게 △△호텔에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설치 과정에서 정은 ㉢벽체를 파손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벽체 일부를 파손하였다. 이후 텔레비전이 정 의 과실이 아닌 자체 결함으로 폭발하면서 A가 △△호텔에 위탁한 A의 반려견이 놀라 B(18세)의 반려견을 물었다. 이로 인해 B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고, 화가 난 B는 을을 밀어서 다치게 하였다. 또한 텔레비전 폭발로 인한 화재로 을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고, 을이 방화문 구역에 쌓아둔 짐 때문에 방화문이 닫히지 않아 건물의 다른 부분으로 화재가 번지면서 이 건물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던 C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 을은 폭발한 텔레비전의 제조업자에게 손해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소송에서 ㉣텔레비전의 제조상 결함으로 인한 제조업자의 손해 배상 책임이 인정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2. ㉠~㉣을 민법의 기본 원칙에 기반하여 판단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 기> —
- ㄱ. ㉠에는 개인의 소유권 행사라도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원칙이 적용되었다.
 - ㄴ. 개인은 스스로 자기 일을 결정해서 자유롭게 권리·의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원칙에 따라 ㉡을 할 수 있다.
 - ㄷ. 개인은 자신의 고의나 과실에 따른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는 원칙에 따라 ㉢에 대한 정 의 손해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 ㄹ. 개인 간의 법률관계의 내용이 사회 질서에 반하거나 공정성을 잃으면 안 된다는 원칙에 따라 ㉣이 인정되었다.

-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260612]

16. 민법의 기본 원칙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기 가수의 콘서트 입장권을 대량으로 선점한 자가 콘서트 입장권 구매를 원하는 자에게 웃돈을 얹어 재판매하는 압표 거래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판매업자와 구매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압표 거래 행위는,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고 건전한 공연 문화 조성을 저해하여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A에 따라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① A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형성된 계약 관계에 국가나 타인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 ② A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행위에 대해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 ③ A는 개인은 자신이 소유하는 재산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 또는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원칙이다.
- ④ 계약 내용이 한쪽 당사자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그러한 계약의 내용은 무효라는 법률의 규정은 A에 근거한다.
- ⑤ 환경 오염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환경 오염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법률의 규정은 A에 근거한다.

[251116]

11. 민법의 기본 원칙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이 자기 소유 공장에서 나온 폐기를 때문에 오염된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여 이를 모르고 산 을이 토지를 정화하기 위해 비용을 지출 하였다면, 갑의 을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이 인정될까요?

갑이 토지에 오염 물질을 누출하고 방치함으로써 토양 오염을 유발한 채 토지를 매도한 행위에 귀책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갑은 A에 따라 을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갑은 토양 오염 물질을 생산·저장·취급하여 토양을 오염 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의 사업자이기 때문에, 귀책 사유가 없어도 B에 따라 토양 오염으로 인한 을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① A에 따르면 개인 소유 재산에 대한 사적 지배가 인정되고 국가나 다른 개인은 이를 간섭하거나 제한하지 못한다.
- ② A는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법적 책임이 인정된다는 원칙이다.
- ③ B에 따르면 계약의 내용이 사회 질서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공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 ④ B는 개인의 소유권 행사라도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 ⑤ A와 B 모두 근대 자본주의의 발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불평등과 같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250911]

11. 갑의 답변에서 부각된 민법의 기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가 소유한 땅에 상가를 지으려고 건축 허가를 신청했는데 왜 반려되었나요?

민원인



□□법에 따라 수립된 ○○시 도시 관리 계획에 따르면 민원인 소유의 토지는 주거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토지에 상가를 짓도록 허가하면 주거의 안녕과 건전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법 취지에 반하여 지역 주민들의 평온한 주거 생활이라는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 ① 사회 질서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내용의 계약은 무효이다.
- ② 개인 간 자유로운 의사 표시의 합치에 의한 계약은 당사자를 구속 한다.
- ③ 개인의 재산권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 ④ 경제적 강자가 경제적 약자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 ⑤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관계되는 자가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250611]

8. 민법의 기본 원칙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소유자가 소유권의 핵심적인 내용에 속하는 사용·수익권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특정인에 대한 관계에서 계약으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임대차 기간이 영구인 임대차 계약을 인정할 실체의 필요성도 있고, 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만 사용·수익권이 제한될 뿐 임대인의 소유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임대차 기간을 영구로 정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에 의하여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 ①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개인 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 ② 제조업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근거가 된다.
- ③ 근로 계약 체결 시 최저 임금법에 근거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는 것은 A를 제한하는 것이다.
- ④ A에 따르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더라도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내용의 계약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⑤ A에 따르면 계약 상대방을 선택할 자유는 보장되지만, 누구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241108]

11. 민법의 기본 원칙 A, B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A는 당사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기초한 합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국가나 법질서가 개입하거나 간섭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소수의 독점 자본가가 소유권의 불가침성과 A를 이용하여 자신의 활동 영역을 확장함으로써 생산 수단의 소유가 소수에게 집중되어 사회가 양극화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절대적 권리로 인정되던 소유권이 시대와 사회의 경제적 질서를 반영하여 제한을 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소유권의 사회적 구속성과 그에 부과된 의무를 강조하는 B가 등장하게 되었다.

<보 기>

ㄱ. A는 법률관계 형성에 있어 당사자가 자유롭게 평등한 주체라는 것을 전제로 성립된 원칙이다.

ㄴ. 최저 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근로 계약 중 최저 임금법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라는 법률 규정은 A에 근거한다.

ㄷ. B에 따라 소유권을 제한하더라도 사유 재산제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ㄹ.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 건물 신축을 제한하는 법률 규정은 B에 근거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40911]

11. 민법의 기본 원칙 A, B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는 A는 개인의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였다. 그러나 A만 고집할 경우 타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제를 받을 수 없는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하여 오늘날 민법에는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인정하는 B가 도입되었다.

<보 기>

ㄱ. A에 기초하고 있는 우리나라 민법은 B를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는 민법 규정은 A를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

ㄷ. 환경 오염으로 인한 불법 행위 성립에 있어 B를 적용하는 경우, 환경 오염의 원인 제공자는 자신에게 고의와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면책된다.

ㄹ. B에 따르면 자신의 행위로부터 일정한 결과가 생길 것을 인식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한 채 한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40611]

18. 민법의 기본 원칙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개인의 자기 결정권을 근거로 하는 A는 거래상 법률관계의 형성을 국가의 개입 없이 당사자 간 자율적인 의사에 맡겨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거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지위에 놓인 개인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등장한 B는 국가의 적절한 개입을 통해 거래상 불균형을 시정해야 한다고 본다.

- ① A에 따르면 개인 간 자유로운 의사 표시의 합치에 의한 계약은 당사자를 구속한다.
- ② A는 국가가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적절한 임금을 보장하도록 강제하는 근거가 된다.
- ③ B에 따르면 사회 질서에 반하는 내용의 법률 행위도 유효하다.
- ④ B는 경제적 약자에 대한 경제적 강자의 부당한 대우를 정당화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 ⑤ A와 달리 B는 국가나 사회보다 개인의 자유를 우선시하는 사상에 기초한다.

[231118]

12. 민법의 기본 원칙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깨트린 자는 배상하여야 한다.’는 법언을 기초로, 허용되지 않는 위험한 행위에 대해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법적 가치 질서를 유지할 수 있으며, 책임의 예측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가) 을/를 채택하여,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만 그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하지만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위험한 시설을 갖춘 기업이 늘어났고, 이러한 기업이 이익을 얻는 과정에서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기업의 잘못을 증명하지 못하여 손해 배상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경우가 증가하였다. 이에 ‘이익을 향유하는 자는 위험도 부담한다.’는 법언에 따라 가해자에게 잘못이 없더라도 이익을 얻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그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나) 이/가 등장하였다.

- ① (가)에 의하면, 계약의 내용이 사회 질서에 반하거나 현저히 공정성을 잃는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②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공작물 점유자가 지는 특수 불법 행위 책임에는 (가)가 적용된다.
- ③ (나)에 의하면, 개인의 사유 재산권에 대한 절대적 지배가 인정되어 국가나 다른 개인이 이를 침해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
- ④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 그 동물 점유자가 지는 특수 불법 행위 책임에는 (나)가 적용된다.
- ⑤ (가)와 달리 (나)는 경제적 강자인 기업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230912]

17. 민법의 기본 원칙 A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A는 19세기 서양 근대 민법이 제정되면서 정립된 것으로서 개인이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평등한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자유롭게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원칙이다. 하지만 산업 혁명 이후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사회 질서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계약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A에 대한 수정·보완이 필요하게 되었다.

- <보 기>—
- ㄱ.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사상에 기초하고 있다.
 - ㄴ. 개인의 재산권은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 ㄷ. 경제적 강자가 경제적 약자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 ㄹ. 신의 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30617]

12. 민법의 기본 원칙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은/는 개인이 국가나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의 의사에 따라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원칙을 말한다. 이는 법률 행위의 주된 모습인 계약을 통해 발현되므로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계약의 자유는 당사자 간 힘의 균형과 자유로운 경쟁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사회적·경제적으로 불평등한 관계로 인해 경제적 강자가 경제적 약자를 지배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가) 은/는 (나) (으)로 수정·보완되고 있다.

- ① (가)는 공작물의 설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점유자가 지는 특수 불법 행위 책임에 적용된다.
- ② (가)에 따르면 손해 발생시킨 위법한 행위라도 가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 ③ (나)에 따르면 계약 내용이 사회 질서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공정성을 잃은 경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④ (나)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이 소유하는 재산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사용·수익 또는 처분하여야 한다.
- ⑤ (가), (나)는 모두 근대 자본주의 발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불평등과 같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221112]

12. 근대 민법의 수정·보완 원칙 (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화훼 농원을 운영하는 갑은 인근에 있는 을 소유의 골프장에서 살포한 농약이 농원으로 유입되어 화훼가 말라 죽었다고 주장하면서, 을을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법원은 환경오염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의 원인 제공자가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상의 (가) 을/를 적용해 을의 갑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 <보 기>—
- ㄱ. (가)에 의하면, 계약 내용이 사회 질서에 반하거나 현저히 공정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ㄴ. 반려견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반려견의 점유자가 지는 특수 불법 행위 책임에는 (가)가 적용된다.
 - ㄷ. 건물의 보존상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건물 소유자가 지는 특수 불법 행위 책임에는 (가)가 적용된다.
 - 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신체상 손해에 대하여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제조업자가 지는 손해 배상 책임에는 (가)가 적용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20912]

16. 표는 근대 민법의 수정·보완 원칙과 적용 사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근대 민법의 수정·보완 원칙	적용 사례
(가)	정부는 자연 환경 보전과 건전한 생활 환경 확보라는 공익을 목적으로 관련 법에 근거하여 개인의 토지를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하였다.
무과실 책임의 원칙	(나)

- ① (가)는 개인이 국가의 간섭 없이 자신의 의사에 기초하여 상대방과 자유롭게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 ② (가)에 따르면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로 인한 결과를 의도하거나 자신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 ③ (가)에 따라 개인의 사유 재산권에 대한 절대적 지배가 인정되어 국가나 다른 개인은 이를 함부로 간섭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 ④ (나)에는 ‘법원은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돈을 빌리는 계약에서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무효라고 판단하였다.’가 들어갈 수 있다.
- ⑤ (나)에는 ‘제조물 제조상의 결함으로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법원은 제조업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음에도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였다.’가 들어갈 수 있다.

[220616]

11. 다음 자료에서 □□위원회의 판단에 나타난 민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신 문

△△△△년 △△월 △△일

온라인 강의 해지, 보다 수월해져...

수강 기간이 1개월을 넘은 온라인 강의는 앞으로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남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 □□위원회는 최근 온라인 강의 수강 계약의 중도 해지를 제한한 온라인 강의 학원의 이용 약관 조항이 고객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학원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

- ① 개인은 자신이 소유하는 재산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 또는 처분할 권리를 가진다.
- ② 계약 내용이 사회 질서에 반하거나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으면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③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겨야 하고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
- ④ 개인은 자신이 소유하는 재산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사용·수익 또는 처분하여야 한다.
- ⑤ 타인의 손해에 대하여 직접적인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일정한 요건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211111]

10. A~C는 근대 민법의 수정 원칙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구분	관련 법규
A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B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C	헌법 제23조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보 기>

- ㄱ. A에 의하면, 계약 당사자는 자신의 법률관계를 형성할 때 국가의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
- ㄴ. 임대 건물의 하자로 인한 행인의 부상에 대하여 임차인과 달리 건물 소유자가 면책되지 않는 것은 B가 적용된 것이다.
- ㄷ. C에 의하면, 소유권은 사유 재산권의 대표적인 것이지만 경우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권리이다.
- ㄹ.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는 A, B, C로 인해 현대의 사법 관계에 적용되지 않는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10910]

11. 변호사의 조언에 나타난 민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법률 상담 게시판

2020년 ○○월 ○○일

상담 의뢰인 제 동생이 거래 경험도 전혀 없으면서 터무니없는 가격에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해 버렸어요. 매수인이 계약 이행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 매수인이 동생의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히 균형을 잃은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 ① 국가는 개인 소유의 재산에 함부로 간섭하지 못한다.
- ② 개인은 각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 ③ 개인의 소유권 행사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한다면 경우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 ④ 계약의 내용이 사회 질서에 반하거나 공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⑤ 타인의 손해에 대하여 직접적인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일정한 요건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210611]

(13) 계약

15.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학원장 갑은 외국어 학습지와 외국인 화상 수업을 주1회 제공하는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갑은 을(17세)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계약한 날부터 1년 동안 500만 원에 해당 교육 프로그램을 을에게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 갑이 미리 인쇄해 온 계약서에는 외국인 화상 수업에 관한 내용이 빠져 있었는데, 갑이 구두로 외국인 화상 수업 제공을 재차 약속하여 을은 이 계약서에 서명하였다. 계약 당일 을은 갑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후 외국어 학습지를 제공받아 개봉하고 한 달 동안 사용하였는데, 갑의 과실로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여 외국인 화상 수업은 한 차례도 제공받지 못하였다. 을의 법정 대리인 병은 을이 계약서에 서명한 다음날 이 계약 체결의 사실을 알게 되었다.

- ① 갑은 외국인 화상 수업을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계약상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② 을이 외국어 학습지를 제공받아 개봉하였을 당시 갑은 을과의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 ③ 병은 갑에게 계약을 취소할 것인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 ④ 병이 갑과 을의 계약 체결 사실을 알게 된 때 계약을 추인하더라도 을은 갑과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⑤ 병은 을의 동의를 얻어야 갑과 을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60615]

12.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갑의 부모 A, B가 이혼하면서 A가 갑의 단독 친권자로 지정되었다. 갑은 무용 공연을 위하여 을과 100만 원에 의상 제작 계약을 체결하였다. 을은 계약 당일에는 갑이 미성년자임을 몰랐으나 다음 날 갑이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다. 일주일 후 갑은 19세 생일에 친구의 공연을 보러 갔다가 을에게 제작을 맡긴 의상과 동일한 의상을 90만 원에 제작해 준다는 병을 소개받았다. 갑은 병에게 80만 원에 의상을 제작해 줄 수 있는지 물었고, 병이 알겠다고 하여 갑과 병은 80만 원에 의상 제작을 하는 데에 합의하고 다음 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을은 갑의 의상 제작을 완료한 상태에서 갑과 병의 계약 체결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제작한 의상을 갑에게 인도하였다. 한편 A, B는 갑과 을이 체결한 계약과 갑과 병이 체결한 계약에 관하여 알지 못하다가 을이 갑에게 의상을 인도한 날 이 계약들에 관하여 알게 되었다.

- ① 을은 갑이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을 당시 갑과의 의상 제작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 ② 을은 B에게 갑과의 의상 제작 계약의 취소 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 ③ 병의 청약과 갑의 승낙이 합치된 때 갑과 병의 의상 제작 계약이 성립하였다.
- ④ A는 을이 제작한 의상을 갑에게 인도한 때에 갑과 병의 의상 제작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⑤ 을이 제작한 의상을 인도받은 갑이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갑에게 계약상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251112]

갑(13세)은 △△ 스마트 위치를 사기 위해 법정 대리인의 ○○ 자전거를 50만 원에 팔기로 결심하고 중고 거래 사이트에 판매 글을 게시하였다. 게시 글을 본 을(23세)은 갑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갑과 ○○ 자전거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체결 당시 갑은 위 매매 계약에 대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이후 갑은 변심하여 돈만 챙길 생각으로 자신의 계좌에 을이 50만 원을 송금하면 1시간 후 지하철역 앞에서 만나 ○○ 자전거를 건네주겠다고 을을 속였다. 갑에게 속은 을은 50만 원을 갑의 계좌에 송금하고 약속 장소에서 기다렸지만 갑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갑은 을에게서 받은 돈으로 △△ 스마트 위치를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병(17세)으로부터 스마트 위치를 구매하였는데, 알고 보니 병이 모조품을 정품으로 속여서 판매한 것이었다. 또한 병은 갑에게서 받은 돈으로 정(35세)이 운영하는 전자 제품 매장에서 고가의 헤드폰을 사기 위해 자신이 직접 위조한 신분증을 제시하였고, 이에 병이 성인이라고 믿은 정은 이 헤드폰을 병에게 판매하였다. 한편, 을이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사를 통해 갑의 사기 혐의를 확인하였고, 그리고 돈의 사용처를 수사하던 경찰은 병의 사기 및 위조 혐의를 확인하고 병에 대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였다.

14. 위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갑은 을과 체결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② 을은 갑에게 계약 체결의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 ③ 갑과 병의 매매 계약은 무효이다.
- ④ 병의 법정 대리인은 정과의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⑤ 정은 병의 법정 대리인에게 매매 계약을 추인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250914]

14.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고등학교 2학년인 갑(17세)은 편의점을 운영하는 을이 아르바이트 직원을 구한다는 게시물을 보고, 법정 대리인 병에게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병은 갑이 편의점에서 일을 하는 것에 동의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을 용돈으로 사용하라고 허락하였다. 그 후 을과 적법한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40만 원씩 벌고 있던 갑은 귀가 중 정 의 화장품 판매점 앞에 게시된 ○○화장품을 10만 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으로 사려고 정에게 ○○화장품을 광고의 조건대로 구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은 5만 원인 □□화장품도 함께 구매해야만 ○○화장품을 1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갑이 ○○화장품뿐만 아니라 □□화장품도 구매하겠다고 하면서 15만 원을 건네자 정은 좋은 선택이라고 하였다.

- ① 갑과 을의 근로 계약은 병이 갑을 대리하여 체결할 수 있다.
- ② 갑은 을과 체결한 근로 계약을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 ③ 갑과 정이 체결한 화장품 매매 계약은 갑의 청약과 정 의 승낙으로 성립하였다.
- ④ 갑은 정과 체결한 화장품 매매 계약을 병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 ⑤ 정은 병에게 갑과 체결한 화장품 매매 계약의 취소 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250614]

11.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A(17세)는 오토바이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자신의 유일한 법정 대리인인 B의 동의 없이 갑(41세)이 운영하는 운전면허 학원에 등록하였다. A와의 계약 체결 당시 갑은 A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한편, A와 평소 친분이 있던 을(21세)은 계약을 체결할 의사로 A에게 운전면허를 취득하면 오토바이를 사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A는 그 제안을 수락하였다. 한 달 후 오토바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A는 을에게 약속대로 오토바이를 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을은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오토바이를 구매하려고 알아보던 A는 다음날 병(20세)에게 사기를 당해 중고 오토바이를 B의 동의 없이 병으로부터 구매하였다. A는 그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운전 미숙으로 정 소유 상가 건물의 출입문을 파손하여, 정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

- ① 갑은 B에게 A와 체결한 계약의 취소 여부에 대해 확답을 촉구하거나 계약 체결에 관한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 ② A의 운전면허 취득으로 A와 을 사이의 계약이 성립하였으므로, 을은 A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진다.
- ③ B는 A와 병이 체결한 계약을 A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 있지만, 병의 사기를 이유로는 취소할 수 없다.
- ④ A가 과실로 위법하게 정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정에 대해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진다.
- ⑤ 정에 대한 A의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되면 B는 정에게 법정 감독 의무자로서의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241111]

법률상 혼인한 갑과 을 사이에서 태어난 A는 중학교 1학년 여름 방학에 용돈으로 마트에서 게임기를 구매하였다. 한편 병은 사실혼 관계에서 자신이 낳은 B를 양육하고 있었다. B는 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 자전거 대리점(사장 정)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정에게 가족 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였지만, 정은 연령을 이유로 B와의 근로 계약 체결을 거부하였다. 그 자리에서 B는 평소 원했던 고가의 한정판 자전거를 보고 정에게 구매 의사를 거듭 밝혔고 정은 고민 끝에 B와 그 자전거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평소 성격 차이가 심했던 갑과 을은 이혼 속려 기간을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혼하였고, A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갑이 갖게 되었다. 얼마 후 갑과 병은 법률상 혼인을 하였고 병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A를 친양자로 입양하였다. 갑과 병의 혼인을 반대하던 B는 친권자 병으로부터 독립하기를 원하였으나 병의 반대로 독립할 수 없었다. 이후 갑과 병은 미성년자 C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친양자가 아닌 양자로 입양하였고, C는 입양된 후 고가의 자전거를 조건 없이 증정하는 정의 ○○ 자전거 대리점 경품 행사에 당첨되었다.

14. 위의 사례에 나타난 계약 관계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 ① 갑은 A가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A의 구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② C가 당첨된 고가의 자전거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갑 또는 병의 동의가 필요하다.
- ③ 정은 B의 매매 계약에 대한 병의 추인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 체결의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 ④ 갑과 병의 혼인 후 정은 갑에게 B와의 매매 계약의 취소 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 ⑤ 정과 B의 매매 계약이 유효하게 확정된 경우, 병은 정에게 자전거 매매 대금의 지급 의무를 진다.

[240914]

12.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가) 갑(16세)은 그동안 모은 용돈 10만 원으로 축구화를 사기로 마음먹었다.
(나) 다음 날 갑은 A 백화점에서 마음에 드는 축구화를 발견하였지만, 축구화의 가격이 15만 원이어서 축구화 구매를 주저하고 있었다. 갑과 친분이 있던 을(21세)은 우연히 갑의 이러한 사정을 알고 갑에게 계약 체결의 의사로 “지금 현금 5만 원을 아무런 조건 없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다) 갑은 바로 자신의 유일한 법정 대리인인 어머니 병에게 전화로 을의 제안 사실을 알렸다. 병은 갑에게 “을한테 그 돈을 받아 알아서 잘 사용하라.”라고 말하였다. 갑은 을에게 “고마워요.”라고 말하면서, 즉시 그 돈을 받았다.
(라) 일주일 후 갑은 A 백화점에서 그 축구화를 구매하였는데, 병은 갑의 축구화 구매 사실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였다.

- ① (가)에는 갑의 계약 체결을 위한 의사 표시가 존재한다.
- ② (나)에는 을의 청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 ③ (다)에는 계약 당사자로서 병의 승낙이 존재한다.
- ④ 병은 (나)와 (다)에 걸쳐 체결된 계약을 갑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 ⑤ 병은 (라)에서 체결된 축구화 구매 계약을 갑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240612]

11.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갑(17세)은 법정 대리인 을의 동의 없이 전자 대리점 사장 병(35세)과 ㉠ 고가의 노트북에 대한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병은 다음날 갑이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다. 노트북 구매로 인해 사용하던 태블릿 PC가 필요 없게 된 갑은 정(22세)에게 이를 판매하였고, 이 과정에서 정에게 을 명의의 동의를 제시하였으며, 정은 다음날 동의서가 위조된 것을 알게 되었다.

- ① 갑과 정의 계약 내용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을에게 있다.
- ② 병의 사기로 ㉠이 체결된 경우라면, 을은 사기를 이유로 ㉠을 취소할 수 없다.
- ③ 병과 달리 정은 갑에게 계약 체결의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 ④ 병이 을에게 확답을 촉구하여야 을은 갑과 병의 계약을 추인할 수 있다.
- ⑤ 갑과 달리 을은 갑의 행위 능력 제한을 이유로 갑과 정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31111]

11. 다음 자료의 (가)에 들어갈 수 있는 답변으로 옳은 것은?

교사: 다음은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와 관련된 사례입니다. 이 사례에서
가정할 수 있는 상황과 그에 따른 법적 판단에 대해 말해 보세요.

갑(17세)은 을이 운영하는 전자 대리점에서 고가의 노트북 할인
행사를 보고 법정 대리인 병의 동의 없이 노트북을 구매하는 계약을
을과 체결하면서, 노트북의 수령과 대금 지급은 다음날에 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을은 다음날이 되어서야 갑이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다.

학생: _____ (가)

- ① 갑이 을에게 사기를 당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갑은 병의 동의를 얻어야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② 갑이 신분증을 위조하여 을로 하여금 자신을 성년자로 믿게 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병은 갑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③ 갑이 노트북을 정가의 절반 가격으로 구입한 경우, 병은 갑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 ④ 병이 을에게 계약을 승인하더라도 을은 계약 체결의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⑤ 병이 을에게 계약을 승인한 후 갑이 을로부터 노트북을 수령 하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갑은 을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30911]

16.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갑(17세)은 법정 대리인 을의 동의 없이 고가의 전동 킥보드를 구입 하는 계약을 병(34세)과 체결하였다. 또한 갑은 정(40세)의 가게에서 고가의 태블릿 PC를 구입하기 위해 ㉠ 을의 이름으로 된 동의를 정에게 제시하였고, 이를 믿은 정은 갑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병은 갑에게 계약의 취소 여부에 대한 응답을 촉구할 수 없다.

② 갑은 을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병과의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③ 병이 계약 체결 시 갑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더라도 을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병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④ 갑이 ㉠을 위조한 경우라면, 을은 갑이 정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이 유효한 동의서라면, 갑은 을의 동의가 있어야 정과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30616]

15.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17세)은 서점에서 자신의 법정 대리인 을의 동의 없이 용돈으로 ㉠ 참고서를 구입했다. 며칠 후 갑은 백화점에서 고가의 한정판 ㉡ 가방을 구입했다. 또한 대학 학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방학 때 분식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하고, 분식집 사장 ㉢과 ㉣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을은 ㉤ 불법 도박 용도의 자금을 빌려주는 계약을 그 용도를 알면서도 친구와 체결하였다.

<보 기>

ㄱ. ㉠은 일단 유효하나 을에 의해 취소될 수 있다.

ㄴ. 갑이 동의서를 위조함으로써 을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여 ㉡을 하였다면 을은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ㄷ. 갑이 ㉢에 따른 임금을 청구하려면 을의 동의가 필요하다.

ㄹ. ㉤의 법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21115]

19.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의 자녀 을(17세)은 노트북 판매점을 운영하는 병으로부터 법정 대리인인 갑의 동의 없이 고가의 노트북을 구매하였다. 아래 표는 을과 병이 체결한 계약의 효력과 관련한 각각의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상황 1>	갑이 계약을 승인하지도 않고 갑과 을이 계약을 취소하지도 않은 경우
<상황 2>	갑이 병의 촉구에 응하여 계약을 승인한 경우
<상황 3>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갑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는 경우
<상황 4>	병이 계약 당시 을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던 경우

<보 기>

ㄱ. <상황 1>에서 병은 갑에게 취소 여부의 응답을 촉구할 수 없다.

ㄴ. <상황 2>에서 을은 자신의 행위 능력이 제한됨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ㄷ. 을이 신분증을 위조하여 병으로 하여금 성년자로 믿게 하였다면 <상황 3>에 해당한다.

ㄹ. <상황 4>에서 갑, 을은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220919]

15. (가) 사례를 (나)에 적용했을 경우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갑(18세)은 온라인 게임을 위하여 을(39세)로부터 거액의 돈을 빌리는 계약을 하였다. 갑의 법정 대리인은 병이다.

(나)

질문	<상황 1>	<상황 2>	<상황 3>	<상황 4>
계약 당시 병의 동의가 있었는가?	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계약 당시 을은 갑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는가?	예	예	아니요	아니요
계약 후 병이 추인하였는가?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보 기>

ㄱ. <상황 1>에서 을의 사기로 계약을 하였다면 계약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나 갑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ㄴ. <상황 2>에서 갑이 병의 동의를 위조하는 속임수로 계약을 하였다면 갑뿐만 아니라 병도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ㄷ. <상황 3>에서 을은 계약 체결의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ㄹ. <상황 4>에서 을은 미성년자인 갑에게 계약의 취소 여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20615]

12. (가) 사례를 (나)에 적용했을 경우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갑(17세)은 평소 사고 싶었던 고가의 오토바이를 을(30세)로부터 구입하는 계약을 하였다. 한편 갑의 법정 대리인은 병이다.

(나)

질문	상황
계약 당시 병의 동의가 있었는가?	㉠ 예 ㉡ 아니요
계약 당시 을은 갑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는가?	㉢ 예 ㉣ 아니요

<보 기>

ㄱ. ㉠, ㉢의 상황에서 을은 병에게 계약을 취소할 것인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ㄴ. ㉠, ㉢의 상황에서 갑이 을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을 하였다면 병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ㄷ. ㉡, ㉣의 상황에서 을은 병에게 계약 체결의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ㄹ. ㉡, ㉣의 상황에서 을은 갑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211112]

11.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전거 여행을 계획하던 갑(17세)은 법정 대리인 을에게 자전거 구매 허락을 받고 병이 운영하는 자전거 대리점에 갔다. 갑이 병에게 을의 동의를 제시하고 마음에 드는 자전거를 선택하자, 병은 브랜드를 속여 가격을 높여서 불렀고 갑은 구입하기로 하였다. 병은 갑에게 여행 출발 전날까지 자전거를 배달해 주기로 약속하였지만, 병의 실수로 자전거가 배달되지 못해 갑은 여행을 가지 못했다.

<보 기>

ㄱ. 갑은 사기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ㄴ. 갑은 병에게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ㄷ. 을은 갑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ㄹ. 병은 갑에게 매매 계약의 취소 여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10911]

12.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갑(18세)은 평소 갖고 싶었던 고가의 컴퓨터를 매수하는 계약을 법정 대리인 을의 동의 없이 병(28세)과 체결하였다. 이후 갑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이 운영하는 서점에서 자신의 용돈으로 시집을 샀다.

- ① 갑은 을의 동의를 얻어야 병과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② 을은 갑의 동의가 없어도 병과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③ 병은 미성년자인 갑에게 계약을 취소할 것인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④ 갑이 을의 동의를 위조하는 속임수로 병과의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갑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⑤ 갑이 병과의 계약 당시 법률상 혼인한 상태라면 을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210612]

(14) 손해 배상(채무 불이행, 불법 행위)

○○건물에는 국민 안전 보호를 위하여 ㉠소방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에 의해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다. 이 건물을 매수한 갑은 ㉡반려견 호텔 운영을 조건으로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을은 이 건물 1층에서 반려견을 위한 △△호텔을 운영하면서 부속 시설인 방화문 구역에 짐을 쌓아놓는 등 방화문의 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였다. 한편, 전자 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는 병은 을과의 계약에 따라 자신의 직원 정에게 △△호텔에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설치 과정에서 정은 ㉢벽체를 파손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벽체 일부를 파손하였다. 이후 텔레비전이 정 과실이 아닌 자체 결함으로 폭발하면서 A가 △△호텔에 위탁한 A의 반려견이 놀라 B(18세)의 반려견을 물었다. 이로 인해 B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고, 화가 난 B는 을을 밀어서 다치게 하였다. 또한 텔레비전 폭발로 인한 화재로 을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고, 을이 방화문 구역에 쌓아둔 짐 때문에 방화문이 닫히지 않아 건물의 다른 부분으로 화재가 번지면서 이 건물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던 C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 을은 폭발한 텔레비전의 제조업자에게 손해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소송에서 ㉣텔레비전의 제조상 결함으로 인한 제조업자의 손해 배상 책임이 인정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3. 위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 ① 갑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더라도 방화문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C에 대해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 ② 을이 개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보관에 필요한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면 A는 B에 대해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 ③ 정은 △△호텔 벽체를 손상시킨 데 대하여 을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진다.
- ④ 병이 정 의 선임 및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지 않았더라도 병은 화재로 인한 을의 손해에 대해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⑤ B가 책임 능력자인 경우 B의 법정 대리인인 부모는 을에 대하여 법정 감독 의무자로서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260613]

10.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갑은 ○○스키장을 임차하여 직접 점유하면서 운영하고 있다. ○○스키장 슬로프에는 설치상 하자로 배수관이 튀어나와 있었는데,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을은 이 배수관에 걸려 다리가 부러졌다. 갑의 직원 병은 갑의 지시에 따라 차량을 운전하여 을을 병원에 데리고 가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정이 운전하던 트럭과 충돌하였다. 이 사고로 을이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 크게 다쳐 석 달간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고,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겪었다. 한편 이 사고 당시 정은 화물칸에 폐지들을 싣고 폐지 소유자에게 운송하던 중이었는데, 사고로 트럭이 멈춘 사이 화물칸에 실려 있던 폐지들이 탈출하여 도로 인근에 있는 무가 소유한 배추밭을 마구 헤집어 무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

- ① 갑은 배수관으로 인한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였더라도 을에 대하여 공작물 점유자로서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 ② 갑이 을에게 치료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였다면 갑은 을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는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 ③ 을에 대하여 병의 사용자로서 갑의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 되더라도 병은 을에 대한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④ 정이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증명하더라도 무에 대한 정 의 손해 배상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 ⑤ 무에 대한 정 의 손해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은 무가 소유한 배추밭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251110]

12.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갑과 을은 갑이 소유한 ○○승마장 및 그곳의 말 전부를 을이 독자적으로 관리·운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승마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의 말 전부를 점유하고 있는 을은 병과 승마 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병은 을의 직원으로 승마 체험을 위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병에게 승마 체험 중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을 설명하지 않았다. 이에 안전 수칙을 몰랐던 병은 을이 진행하는 승마 체험 중 말에서 떨어지면서 흥분한 말의 뒷발굽에 치여 큰 부상을 입었다. 병의 친구 무는 승마 체험을 구경하던 중 ○○승마장 관람석의 보존·관리상 하자로 관람석 일부가 무너져 부상을 입고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겪었다.

- ① 정은 병에게 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한 책임을 진다.
- ② 을이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필요한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더라도, 을은 병에게 동물 점유자로서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 ③ 을의 무에 대한 공작물 점유자로서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갑은 무에게 공작물 소유자로서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 ④ 정 의 병에 대한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을이 정에 대한 선임 및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더라도 을은 병에게 정 의 사용자로서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 ⑤ 무가 치료비를 포함한 재산적 손해 전부를 배상받았다면, 더 이상 위자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50912]

12.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A의 부모는 여행을 떠나면서 자신의 친구 B에게 A(14세)를 돌봐 달라고 부탁했다. B는 자신의 반려견과 A를 데리고 친구 C의 생일 파티에 놀러 갔다. A가 C 소유의 어항을 실수로 깨뜨리고 밖으로 나가자 B도 반려견을 데리고 A를 쫓아 밖으로 나갔다. 한편, 골동품 판매업자 D는 C와 ○○도자기 매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D의 종업원 E가 C의 집으로 ○○도자기를 배달하던 중 A를 보지 못해 오토바이로 A를 치어 다치게 하고 배달 중인 ○○도자기도 파손되었다. A를 찾던 B가 관리상의 부주의로 반려견의 목줄을 놓치는 바람에 반려견이 옆에 있던 E를 물어서 다치게 하였다.

- ① A가 어항을 깨뜨린 행위는 고의에 의한 행위가 아니므로 A는 C에 대해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② A에게 책임 능력이 인정된다면, A의 부모는 C에 대해 법정 감독 의무자로서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 ③ B는 E에 대해 동물 점유자로서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 ④ D가 E에 대한 선임 및 감독상의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 하더라도, D는 A에 대해 사용자로서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 ⑤ E는 C에게 ○○도자기 파손에 대한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진다.

[250612]

12.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동물 병원 원장 A(35세)는 차량의 소유자로부터 공작물인 차량을 장기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 A는 고객 갑이 치료를 위해 입원시킨 반려견의 재활 운동을 위해 그 차량을 운전하여 직원 B(21세)와 함께 공원으로 갔다. A는 차량을 주차하고 B와 함께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던 중 B가 부주의로 반려견의 발을 밟아 상처를 입혔다. 놀란 반려견이 지나가던 을의 다리를 물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혔고, 을은 이로 인해 정신적 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다. 그 사이 A가 주차해 두었던 차량에서 불이 났고, 이로 인해 옆에 주차되어 있던 병 소유 차량이 파손 되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 사고 조사 결과, 화재의 원인은 차량에 대한 비전문가인 소유자가 해당 차량을 직접 수리하여 발생한 보존상의 하자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 ① A가 B에 대한 선임 및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더라도, A는 갑에 대한 B의 사용자로서의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② 을은 치료비에 대한 배상을 받기 위해 위자료를 청구해야 한다.
- ③ A가 반려견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더라도, A는 을에 대한 동물 점유자로서의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④ 병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이 원칙이다.
- ⑤ A가 병에게 발생한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한 경우, A는 병에 대한 공작물 점유자로서의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241112]

13.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갑은 을 소유의 상가를 임차하여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다. A는 면접을 위해 친구 B의 양복을 빌려 입은 후 갑에게 세탁을 맡겼다. 갑은 세탁소 내부의 수도관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이미 수개월 전 을에게 수리를 요청 하였고 을이 수리를 약속하였지만, 이후 을은 갑의 수차례 요청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수리를 계속 미뤘다. 결국 수도관 파열로 갑의 세탁 시설이 침수되어 갑이 세탁물을 옮기고 있는데, 이를 보고 갑을 도와주던 갑의 중학생 아들 병이 실수로 표백제를 쏟아 B의 양복이 변색되었다. 한편 양복을 찾으러 온 A가 파열된 수도관에서 뿜어져 나온 물에 미끄러져 큰 부상을 입었다.

- ① 갑은 B에게 양복의 변색에 따른 피해에 대해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진다.
- ② 을은 갑에게 수도관 수리 의무의 위반에 따른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③ 갑이 세탁 시설 피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 을은 갑에게 공작물 소유자로서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 ④ 병이 B에게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지는 경우, 갑은 B에게 법정 감독 의무자로서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 ⑤ A의 부상에 대해 갑이 A에게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더라도, 을이 A에게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

[240913]

8.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A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B를 고용한 상황에서, A의 업무와 관련하여 B가 불법 행위로 C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A가 C에 대해 B의 선임 및 사무 감독상의 과실에 따른 배상 책임을 부담 하는 것을 (가) 이라고 한다. 특수 불법 행위 유형 중 하나인 (가) 이/가 인정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익이 있는 곳에 손해도 귀속되어야 한다.”라는 공평의 원리에서 찾을 수 있다.

<보 기>

- ㄱ. (가)에 따른 A의 C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에도 B의 C에 대한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은 배제되지 않는다.
- ㄴ. A가 B에 대한 선임 및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더라도 (가)에 따른 A의 C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 ㄷ. (가)에 따른 A의 C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A와 C 사이의 계약이 있어야 한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40608]

7.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소유 건물을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는 을이 에어컨 실외기 교체를 위해, 갑은 설치 업체 사장 병과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병의 직원 정이 공사 중 실외기를 떨어뜨려 갑의 자동차를 파손하였다. 한편 을의 종업원 A는 B가 주문한 음식과 상한 유제품을 포장하여 배달하였고, 이를 먹고 배탈이 난 B가 을의 식당에서 항의하던 중 낡은 천장이 무너지며 을과 B가 다쳤다. 주문한 식사의 지연으로 화가 난 손님 C(17세)는 시비 끝에 A를 폭행하였고, 다친 A가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C의 법정 대리인은 D이다.

- ① 을은 B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고, 병은 갑과 을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진다.
- ② 을이 공작물 점유자로서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으면 갑은 B뿐만 아니라 을에게도 공작물 소유자로서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 ③ 병이 정에 대한 선임 및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더라도 병은 갑에게 사용자로서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 ④ C가 A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였다면 A는 C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청구할 수 없다.
- ⑤ C에게 책임 능력이 인정되더라도 D에게 법정 감독 의무 위반이 있으면 D는 A에게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231107]

18.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은 A가 운영하는 이삿짐 업체에 고용된 직원이고, 을은 B가 운영하는 피자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직원이다. A는 병으로부터 이삿짐 운반을 의뢰받았다. 갑은 A의 지시로 화물차에 병을 태우고 이삿짐을 운반하던 중, 오토바이로 피자를 배달하던 을과 도로에서 끼어들기 시비가 붙었다. 갑과 을은 서로 양보하지 않으려고 경쟁하다가,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지켜 건너던 정을 동시에 치었다. 이 사고로 병과 정은 각각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고, 병의 이삿짐이 파손되었다.

<보 기>

- ㄱ. 을의 정에 대한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이 성립하더라도 B는 정에 대하여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는다.
- ㄴ. 병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갑이 아닌 A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ㄷ. A의 병에 대한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병은 A에게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ㄹ. B의 정에 대한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을의 정에 대한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30918]

7.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갑에게는 자녀 을(18세), 병(14세)이 있다. 을은 A가 운영하는 커피 전문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부주의로 손님 B에게 뜨거운 커피를 쏟아 화상을 입혔다. 한편 갑은 장기간 여행을 간 친구 C의 부탁으로 맡고 있던 C의 반려견을 데리고 혼자 산책 하던 중, 갑의 부주의로 반려견이 행인 D를 몰아서 D가 다쳤다. 그동안 집에 혼자 있던 병의 부주의로 인해 창틀에 있던 화분이 떨어져 지나가던 행인 E가 다쳤다.

- ① 을에게 책임 능력이 있는 경우 갑은 B에게 법정 감독 의무자로서의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② 을과 A는 B에게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 ③ A가 을의 사용자로서 모든 주의 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에도 A는 B에게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 ④ D는 C가 아닌 갑에게는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⑤ 병에게 책임 능력이 있더라도 고의가 없었으므로 병은 E에게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230607]

18. (가)~(라)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가) 갑(35세)은 자신의 주택을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 하였다. 그런데 지진으로 인해 해당 주택이 파손되어 갑은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
- (나) 갑(19세)은 을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자전거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어느 날 갑은 공원에서 자신의 자전거를 타며 동호회 활동을 하던 중 회원 병을 실수로 다치게 하였다.
- (다) 갑(7세)은 법정 감독 의무자인 을과 함께 전시장에 갔다가 천장에 설치된 커다란 조명이 떨어지자 이를 피하기 위해 옆에 전시되어 있던 병 소유의 작품을 파손했다.
- (라) 갑(28세)은 을이 운영하는 컴퓨터 수리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어느 날 갑은 병의 노트북을 수리하던 중 해킹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하여 병에게 손해를 입혔다.

<보 기>

- ㄱ. (가)에서 갑은 주택 파손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기 때문에 을에 대하여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ㄴ. (나)에서 갑의 병에 대한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이 성립하고, 을의 병에 대한 특수 불법 행위 책임도 성립한다.
- ㄷ. (다)에서 갑의 파손 행위가 긴급 피난에 해당하는 경우, 을의 병에 대한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 ㄹ. (라)에서 갑의 병에 대한 채무 불이행 책임이 성립하고, 을의 병에 대한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21118]

17.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기 소유의 건물에서 미술관을 운영하는 A는 전시회를 위해 인테리어 사업자 갑에게 미술관의 내부 수리를 의뢰하였다. 이후 갑은 자신의 직원 을(23세)과 함께 수리 작업을 하고 있었다. 갑이 데려온 갑의 자녀 병(16세)이 전시된 A의 도자기를 실수로 깨뜨리자 갑이 병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그 사이에 을이 혼자 작업하던 중 공구가 떨어져 바닥이 파손되면서 공사가 중단되었고 결국 전시회가 개최되지 못하였다.

<보 기>

- ㄱ. 갑의 A에 대한 사용자 배상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을의 A에 대한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된다.
- ㄴ. 을의 A에 대한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갑은 A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는다.
- ㄷ. 병의 책임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갑은 A에게 병의 법정 감독 의무자로서의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 ㄹ. 을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갑과 을은 모두 A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진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20917]

17.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갑(19세)은 을(35세)이 운영하는 결혼 사진 촬영 업체에서 촬영 아르바이트를 하였다. 어느 날 병(30세)이 을에게 자신의 결혼식 사진 촬영을 의뢰하였고, 갑은 그 촬영을 위해 오토바이를 직접 운전하여 결혼식장으로 가던 중 운전 부주의로 정(47세)을 크게 다치게 하였다. 그리고 사고 처리 때문에 병의 결혼식 사진은 촬영되지 못했다.

- ① 갑의 병에 대한 채무 불이행 책임이 성립한다.
- ② 갑의 정에 대한 채무 불이행 책임이 성립한다.
- ③ 을의 병에 대한 채무 불이행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 ④ 을의 정에 대한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도 갑의 정에 대한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이 성립한다.
- ⑤ 정이 입은 재산적 손해는 정신적 손해와 달리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20617]

13.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A(14세)는 B(A의 법정 감독 의무자) 몰래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C를 부주의로 다치게 하였다.
○ 대학생인 갑(19세)은 학비를 벌기 위하여 을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식사를 하던 손님 병을 부주의로 다치게 하였다.

<보 기>

- ㄱ. 사고 당시 A의 책임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B가 A에 대한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더라도 B는 C에 대하여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 ㄴ. 사고 당시 A의 책임 능력이 인정되면 C의 부상이 B의 A에 대한 감독 의무 위반으로 인한 경우라도 B는 C에 대하여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 ㄷ. 을의 병에 대한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갑의 병에 대한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된다.
- ㄹ. 을의 병에 대한 사용자 배상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갑과 을의 병에 대한 공동 불법 행위자의 책임이 인정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11113]

12.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A는 출장을 가면서 자신의 애완견을 B가 운영하는 애견 호텔에 맡겼다. B가 A의 애완견과 산책하던 중 실수로 목줄을 놓친 사이에 애완견이 행인 C의 다리를 물었고 C가 애완견을 걸어서 다치게 하였다.
○ 갑(14세)이 망을 보는 사이 을(14세)과 병(16세)이 골목길에 주차된 정 소유의 수입차에 올라가 장난을 쳐 2천만 원의 수리비가 발생하였다.

<보 기>

- ㄱ. B는 애완견을 다치게 하지 않았으므로 A에게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ㄴ. C에 대한 B의 불법 행위 책임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A는 C에게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 ㄷ. 정에 대한 갑의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을과 병은 정에게 불법 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
- ㄹ. 정에 대한 을의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을의 법정 대리인은 정에게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10912]

14. (가) 사례를 (나)에 적용했을 경우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부주의로 보행자 을을 다치게 하였다.

(나)

질문	사고 당시 상황	
갑의 나이는?	㉠ 19세 이상	㉡ 19세 미만
갑의 책임 능력이 인정되는가?	㉢ 인정됨	㉣ 인정되지 않음
갑이 을을 다치게 한 때는?	㉤ 병이 운영하는 치킨 가게의 종업원으로 자전거를 타고 치킨 배달을 하던 중	㉥ 휴일에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놀던 중

<보 기>

- ㄱ. ㉠, ㉢, ㉤의 상황에서 병이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갑의 을에 대한 일반 불법 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 ㄴ. ㉠, ㉢, ㉤의 상황에서 갑은 을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ㄷ. ㉡, ㉢, ㉤의 상황에서 갑의 법정 대리인 정은 을에 대한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 ㄹ. ㉡, ㉢, ㉤의 상황에서 갑의 법정 대리인 정이 갑에 대한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을에 대해서 갑, 정은 모두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210614]

(15) 가족 관계와 법

17.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법률혼 관계에 있는 갑과 을 사이에서 A가 태어난 후 갑과 을은 재판상 이혼하면서, 갑이 A의 단독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되었다. 이후 갑은 병과 법률혼을 하였고, 자녀 B가 태어났다. 병은 갑과 만나기 전, 정과 결혼식을 마치고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 의 자녀 C를 출산하였는데 정이 C를 인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과 헤어진 후 병 혼자 C를 양육하여 왔다. B가 출생한 다음 해 병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A를 친양자 아닌 양자로 입양하였고, 1년 후 갑은 C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친양자로 입양하였다. 일주일 후 정은 유언 없이 사망하였다.

- ① 갑과 을의 이혼은 행정 기관에 이혼 신고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였다.
- ② 정 의 사망으로 C는 정 의 상속인이 된다.
- ③ 정 의 사망 당시 갑, 을과 A 사이에 친자 관계가 있다.
- ④ B의 출생 당시 A와 B는 친족이 아니다.
- ⑤ C의 출생 당시 병과 정은 친족이다.

[260617]

13.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법률혼 관계에 있는 갑과 을 사이에서 A가 태어난 후 B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갑과 을의 친양자로 입양되었다. 그 해에 갑은 유언 없이 사망하였다. 한편 병은 정과 을 사이에서 자녀 C를 낳았으나 경제적 문제로 자주 다투었다. 결국 병과 정은 법원에 이혼 의사 확인의 신청을 하여 이혼에 이르렀고, 병이 단독으로 C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되었다. 이후 병은 을과 법률혼을 하였고, 을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C를 친양자 아닌 양자로 입양하였다. 그 후 병이 갑작스런 사고로 유언 없이 사망하였고, 1년 후 C도 초등학교 입학할 앞둔 상태에서 갑작스런 사고로 사망하였다.

- ① 갑의 사망 시 을과 A는 갑의 상속인이지만 B는 갑의 상속인이 아니다.
- ② 병과 정이 법원으로부터 이혼 의사 확인을 받은 때부터 정은 C에 대하여 면접 교섭권을 갖는다.
- ③ 병의 사망 시 B는 A의 친족이지만 C는 A의 친족이 아니다.
- ④ 병의 사망 시 C는 병의 상속인이지만 A와 B는 병의 상속인이 아니다.
- ⑤ C의 사망 시 정은 C의 상속인이 아니다.

[251113]

19. 다음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영화감독 갑

뉴스 카페 동영상 이미지 블로그

얼마 전 사망한 영화감독 갑에 대한 추모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갑의 생애가 주목을 받고 있다. 소설가 A의 친생자인 갑은 B의 도움으로 영화감독이 될 수 있었다. B는 영화 제작자로 알려져 있는데, A가 남편과 사별 후 홀로 갑을 키웠다 B와 법률혼을 하였다. 한편, 갑은 을과의 이혼으로도 주목을 받았다. 갑의 작품마다 출연했던 영화배우 을은 갑과 성격 차이로 갈등을 겪다 이혼을 요구하였다고 한다. 갑의 자녀로는 병이 유일인데, 병은 을과 정 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갑에게 친양자로 입양 되었다. 을과 이혼하면서 병의 친권자로 결정된 갑은 병의 양육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을과 이혼 후 연이은 작품 실패로 힘들어 하던 갑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된 것은 A와 병의 사망 이후부터라고 전해진다. A가 지병으로 사망하고 한 달 후 8세인 병도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하였다. 지난해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했던 갑은 사망 전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

- ① A의 사망 당시 을과 병 사이에 친자 관계가 있다.
- ② 병의 사망으로 정은 병의 상속인이 된다.
- ③ 갑의 사망으로 B는 갑의 상속인이 된다.
- ④ 갑과 을의 이혼이 확정된 때부터 병은 갑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게 된다.
- ⑤ 병의 사고 당시 을은 병이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가진다.

[250919]

17.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갑과 을은 법률상 혼인을 하고, 그 사이에서 A가 태어났다. 갑이 회사 일로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는 동안 을은 친구인 병으로부터 수개월에 걸쳐 생활필수품 구매 비용으로 총 500만 원을 빌려서 사용하였다. 한편 병이 중병에 걸린 것을 알게 된 갑과 을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병의 친생자인 B를 친양자로 입양하였다. 몇 년 뒤 갑과 을이 이혼하기로 합의 하고 법원의 이혼 의사 확인을 받아 법원을 나서던 중 갑작스런 사고로 을이 유언 없이 사망하였다. 현재 병은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 ① 을의 사망 시 갑은 을의 상속인이 된다.
- ② 을의 사망 시 A와 B의 법정 상속분은 동일하지 않다.
- ③ 을의 사망 시 갑은 을이 병에게 빌린 500만 원을 갚을 의무가 없다.
- ④ 갑과 을이 B를 친양자로 입양하기 위해서는 A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⑤ 병이 유언 없이 사망한다면, B는 병의 상속인이 된다.

[250617]

17.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갑은 을과 재판상 이혼을 하고, 을과의 사이에서 혼인 중 출생한 자녀 A를 홀로 양육하게 되었다. 병은 정과 법률혼을 한 후 정이 자녀 B(12세)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친양자로 입양하였다. 2년 후 정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병은 갑과 법률혼을 하였으며, A가 19세가 되자 적법한 절차를 거쳐 A를 양자로 입양하였다. 그 후 병과 B는 해외여행을 갔다가 풍토병을 얻어 모두 사망하였는데, 병이 B보다 먼저 사망하였다.

- ① 갑과 을의 이혼은 법원의 판결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갑과 을에게 A에 대한 면접 교섭권이 인정된다.
- ② 정이 사망 당시 정이 가진 재산은 병과 B가 상속받으나, 병은 B가 상속받은 재산을 관리할 수는 없다.
- ③ 병이 A를 입양함에 따라 A는 병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게 되고, 병은 A에게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병과 B의 해외여행 출발 당시 갑, 을, 병, B는 모두 A의 친족이다.
- ⑤ 병의 사망에 따른 상속인은 갑, A, B이며, B의 사망에 따른 상속인은 갑이다.

[241117]

가족으로부터
드라마·15세 이상

등장인물 소개

갑 남자, 현재 16세 고등학생

사실혼 관계인 A(남)와 B(여) 사이에서 태어나 A와 B의 사실혼 관계 해소 후 B에 의해 양육되었다. B가 C와 법률혼을 한 이후에는 B, C와 함께 살고 있으며, 갑과 B 사이에만 친자 관계가 있다. 방학을 맞이하여 2개월 동안 사장 D가 운영하는 ○○ 대형 마트에서 일하려고 한다.

을 여자, 현재 22세 공무원

법률혼 관계인 C와 D 사이에서 태어나 C가 D와 이혼을 한 이후 C에 의해 양육되었다. C와 D는 법원에 이혼 의사의 확인을 신청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혼 의사를 확인받아 이혼하였는데, 을이 D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이 이혼의 사유였다. 1년 전 B와 C가 법률혼을 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B에게 양자로 입양되었다.

이번 회 줄거리

16세인 갑은 B의 동의를 얻어 '근무일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 소정 근로 시간은 13시부터 21시(휴게 시간: 18시~19시), 업무 내용은 ○○ 대형 마트 내 상품 정리'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 계약을 D와 체결하였다. 며칠 후 주휴일인 월요일에 쉬고 있던 갑은 D로부터 매 근무일 1시간씩 추가로 근로할 것을 제안받고 B와 의논하려 가던 중 갑작스런 B의 사고 소식을 듣게 된다.

14. 위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 ① 갑은 B와 C의 '혼인 외의 출생자'이다.
- ② C와 D의 이혼은 법원에서 이혼 판결이 확정되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 ③ B가 을을 입양함에 따라 을과 D의 친자 관계는 종료된다.
- ④ B의 사고 당시 을은 갑의 친족이다.
- ⑤ B의 사고 당시 을에 대한 친권은 B에게 있다.

[240614]

법률상 혼인한 갑과 을 사이에서 태어난 A는 중학교 1학년 여를 방학에 용돈으로 마트에서 게임기를 구매하였다. 한편 병은 사실혼 관계에서 자신이 낳은 B를 양육하고 있었다. B는 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 자전거 대리점(사장 정)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정에게 가족 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였지만, 정은 연령을 이유로 B와의 근로 계약 체결을 거부하였다. 그 자리에서 B는 평소 원했던 고가의 한정판 자전거를 보고 정에게 구매 의사를 거듭 밝혔고 정은 고민 끝에 B와 그 자전거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평소 성격 차이가 심했던 갑과 을은 이혼 속려 기간을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혼하였고, A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이 갑이 갖게 되었다. 얼마 후 갑과 병은 법률상 혼인을 하였고 병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A를 친양자로 입양하였다. 갑과 병의 혼인을 반대하던 B는 친권자 병으로부터 독립하기를 원하였으나 병의 반대로 독립할 수 없었다. 이후 갑과 병은 미성년자 C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친양자가 아닌 양자로 입양하였고, C는 입양된 후 고가의 자전거를 조건 없이 증정하는 정 ○○ 자전거 대리점 경품 행사에 당첨되었다.

15. 위의 사례에 나타난 가족 관계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갑과 을의 이혼은 법원의 이혼 의사 확인 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② 병이 A를 입양한 이후에도 을은 A에 대한 면접 교섭권을 가진다.
- ③ 갑과 병의 혼인 후 갑이 사망한 경우, B는 갑의 상속인이 될 수 없다.
- ④ C와 달리 A의 입양 시 가정 법원의 허가가 요구된다.
- ⑤ C가 경품 행사에 당첨될 당시, C와 달리 A는 병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

[240915]

[평가 문항]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이 옳으면 '예', 틀리면 '아니요'를 쓰시오.
(답란별로 채점하며 옳으면 1점, 틀리면 0점, 총점은 3점임.)

<사례> 갑(27세)과 을(28세)은 법률상 혼인하였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A를 친양자가 아닌 양자로 입양하였다. 갑과 을은 협의상 이혼하였고, A는 갑이 양육하기로 하였다. 병(27세)은 정(25세)과의 혼인 중 B를 출산하였고 정과 재판상 이혼한 뒤 B를 홀로 양육하였다. 이후 갑은 병과 혼인하였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B를 친양자로 입양하였다. 이후 갑과 병 사이에 C가 태어났고 갑과 병은 미성년자인 A, B, C와 함께 살고 있다.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		답란
(가)		아니요
B는 입양으로 인해 정과의 친자 관계가 종료된다.		(나)
갑과 을이 유언 없이 동시에 사망한다면 A는 갑의 상속인이 되고 을의 상속인이 되지 않는다.		아니요
채점 결과(점수)	(다)	

- ① (가)에 '갑과 을의 이혼은 가정 법원의 이혼 의사 확인을 받고, 이후에 이혼 속려 기간을 거쳐야 성립한다.'가 들어가고 (나)에 '예'가 들어가면, (다)에 '2점'이 들어간다.
- ② (가)에 '병과 정이 이혼은 이혼 신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가 들어가고 (나)에 '아니요'가 들어가면, (다)에 '1점'이 들어간다.
- ③ (가)에 '병이 유언 없이 사망한다면 A, B, C는 모두 병의 상속인이 된다.'가 들어가고 (나)에 '예'가 들어가면, (다)에 '3점'이 들어간다.
- ④ (다)에 '1점'이 들어가면, (나)에 '예'가 들어갈 수 있다.
- ⑤ (다)에 '3점'이 들어가고 (가)에 '갑과 병의 혼인 중 갑이 일상 가사에 관해 제3자와 법률 행위를 한 때, 병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이 있다.'가 들어가면, (나)에는 '예'가 들어간다.

[231115]

10.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갑(남)과 을(여)이 결혼식을 하고 혼인 신고 없이 함께 살던 중 갑과 을 사이에서 A가 태어났다. 그 후 갑과 을은 다툼이 잦아져서 헤어지기로 하였고, A는 갑이 양육하기로 하였다. 을은 갑과 헤어진 후 병과 법률상 혼인을 하였다. 이후 을과 병 사이에서 B가 태어났다. 또한 을과 병은 혈연관계가 없는 미성년자 C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친양자로 입양하였다. 한편, 갑도 을과 헤어진 후 정과 법률상 혼인을 하였다. 그 후 갑과 정은 혈연관계가 없는 성년자 D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양자로 입양하였다.

- ① 갑과 을 사이에서는 친족 관계가 형성되었다가 해소되었다.
- ② A는 갑과 을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B는 을과 병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각각 인정된다.
- ③ C는 입양된 이후에도 친생부모와의 친족 관계가 유지된다.
- ④ 갑, 정 모두 D의 재산에 관한 법률 행위에 대하여 D를 대리할 수 있는 친권자로서의 권한은 없다.
- ⑤ D는 자신의 친생부모가 유언 없이 사망했을 경우 친생부모가 남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230910]

13.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갑과 을은 불화가 심해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다. 이후 을은 병과 결혼을 하고 혼인 신고를 하였다. 그리고 을과 병 사이에서 A가 태어났고 5년 후 을과 병은 친구 정(남)의 자녀 B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친양자로 입양하였다. 을과 병은 A, B에 대해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였고, A가 21세, B가 17세일 때 을이 유언 없이 사망하였다.

- ① 을이 병과 결혼하기 전 갑과의 혼인 관계를 해소시키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친양자 입양 후 정과 B의 친족 관계는 종료되지 않는다.
- ③ 입양된 B는 을과 병의 혼인 중 출생자로 간주되므로 을의 사망 시 을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 ④ 을의 사망 시 갑은 을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 ⑤ 을의 사망 시 A와 B에 대한 친권은 병에게 있다.

[230613]

11. 밑줄 친 ㉠~㉣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갑과 을은 혼인 신고를 하였고, 그 사이에서 A가 태어났다. 다음 해 ㉠갑과 을은 협의 이혼하면서, 합의하에 ㉡을이 A를 양육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을은 병과 혼인 신고를 하고, ㉢병은 A를 친양자 아닌 양자로 입양하였다.

- ① ㉠에 의하여 A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된다.
- ② ㉠은 갑과 을 간에 민법상의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 ③ ㉡에 따라 갑은 가정 법원에 청구해야 A에 대한 면접 교섭권을 가진다.
- ④ ㉢에 의하여 갑과 A 사이의 친자 관계는 종료된다.
- ⑤ ㉢에 의하여 A는 태어난 때부터 을과 병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

[221111]

10.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법률상 혼인을 한 갑(남)과 을(여)은 함께 A, B, C, D를 양육하고 있었다. 갑은 을과 혼인하기 전 병(여)과 혼인 신고 없이 혼인의 의사로 공동 생활을 하였다. 을은 갑과 혼인하기 전 정(남)과 이혼하고 정과의 혼인 기간 중에 태어난 C를 양육하고 있었다. 갑의 친구인 무는 아내와 사별 후 혼인 중 출생자인 D를 갑과 을에게 양자로 보냈다. 한편 B와 C는 갑작스런 사고로 중상을 입고 사망하였는데, B와 C 모두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 갑과 병 모두 B의 사망 전 B의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었다.

< B, C의 사고 당시 A, B, C, D의 법적 지위 >

A	B	C	D
갑과 을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갑과 병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갑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입양한 친양자	갑과 을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입양한 친양자가 아닌 양자

* A~D는 모두 미성년자이고, 자녀와 배우자는 없음.

- ① B, C의 사고 당시 갑, 을과 A, C, D 사이에 친자 관계가 있고, 갑, 병과 B 사이에 친자 관계가 있다.
- ② B, C의 사고 당시 무는 갑, 을과 달리 D의 재산에 관한 법률 행위를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③ B, C의 사고 당시 C는 D와 달리 갑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
- ④ D는 C와 달리 가정 법원에 입양을 청구하고, 그 청구가 인용되어 입양의 효력이 생겼다.
- ⑤ C의 사망으로 을, 정은 C의 상속인이 될 수 없다.

[220910]

13.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갑(남)과 을(여)은 법률상 혼인하였고 그 사이에서 A와 B가 태어났다. 그 후 갑과 을은 협의 이혼하면서 A는 갑이, B는 을이 양육하기로 하였다. 한편 갑은 병과, 을은 정과 법률상 혼인하였고 을과 정 사이에서 C가 태어났다. 그 후 ㉠ 병은 A를 친양자가 아닌 양자로 입양하였고, ㉡ 정은 B를 친양자로 입양하였다.

* A~C는 모두 미성년자이고, 미혼이며 자녀가 없다.
** 갑~정의 성(姓)과 본(本)은 모두 다르다.

- ① 갑과 을의 이혼은 가정 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는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② ㉠ 이후에도 병은 A의 친권자가 될 수 없다.
- ③ ㉠ 이후 A가 유언 없이 사망하였다면 병은 을과 달리 A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 ④ ㉡ 이후 B가 유언 없이 사망하였다면 정은 갑과 달리 B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 ⑤ C가 정의 성(姓)과 본(本)을 따른 경우, ㉡으로 인해 B는 정의 성과 본을 따른다.

[220613]

16.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A를 입양하여 함께 살고 있던 갑(남)은 을(여)과 법률상 혼인을 하였고 그 사이에서 B가 태어났다. 이후 갑과 을은 이혼하고 갑은 A를, 을은 B를 양육하였다. 2년 후, 갑과 병은 법률상 혼인을 하였고 그 사이에서 C가 태어났다. 한편 을과 정은 법률상 혼인을 하였고 그 사이에서 D가 태어났으며 정은 B를 친양자로 입양하였다. 그 후 을과 정은 이혼하면서 을은 B를, 정은 D를 양육하기로 하였다.

< 보 기 >

- ㄱ. 갑이 유언 없이 사망한다면, A는 갑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으나 B는 상속받을 수 없다.
- ㄴ. 을이 유언 없이 사망한다면, D는 을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으나 B는 상속받을 수 없다.
- ㄷ. 병이 유언 없이 사망한다면, C는 병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으나 A는 상속받을 수 없다.
- ㄹ. 정이 유언 없이 사망한다면, D는 정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으나 B는 상속받을 수 없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11116]

14. (가)~(마)의 상황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가) 갑과 을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을 하고 이듬해 을이 A를 출산함.

↓

(나) 갑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갑과 을은 소송을 통하여 이혼하였고 A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을이 행사하기로 함.

↓

(다) 을은 병과 만나 혼인의 실질적 요건만 갖추고 공동생활을 하면서 B를 출산하였고, 병이 B를 인지함.

↓

(라) 가정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병이 A를 양자로 입양함.

↓

(마) 병은 출장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별도의 유언은 없음.

- ① (가)에서 갑은 을이 혼인 전에 형성한 을 소유의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 ② (나)에서의 소송은 다른 민사 소송과 달리 3심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 ③ (다)에서 B는 혼인 외의 출생자이지만, 병은 B에게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라)로 인해 갑과 A의 친자 관계는 종료된다.
- ⑤ (마)에서 A가 상속을 포기하면 을과 B가 공동 상속인이 된다.

[210914]

13.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A(남)와 B(여)는 법률상 혼인하였고 그 사이에는 혼인 중의 출생자 갑과 을이 있다. A와 B는 이혼하면서 갑은 A가, 을은 B가 양육하기로 정하였다. 한편 C는 B와 혼인 신고 후, 을을 친양자로 입양하였다. 그 후 D는 A와 혼인 신고 없이 결혼식만 올리고, 갑을 친양자가 아닌 양자로 입양하였다.

- ① A와 D 사이에서 병이 태어났다면 병은 혼인 중의 출생자이다.
- ② A가 유언 없이 사망하였다면 을은 A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 ③ B가 유언 없이 사망하였다면 갑은 B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 ④ D가 유언 없이 사망하였다면 갑은 D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 ⑤ 갑은 D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으나, 을은 C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없다.

[210613]

(16) 죄형 법정주의

11. 다음 자료의 (가)에 들어갈 수 있는 진술로 옳은 것은?

교사: A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과 그 적용 사례에 대하여 우리나라 형법에 근거하여 법적 판단을 해 보세요.

A국에서는 허위 영상물의 제작과 유포 등이 사회 문제로 등장하였지만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없었다. 이에 A국 의회는 처음으로 허위 영상물의 제작과 유포를 처벌하기 위해 2020년 6월 △△법을 제정하였다.

○ 2020년 6월 시행된 △△법 제14조 제1항은 '유포할 목적으로 사람의 신체를 대상으로 한 허위 영상물을 제작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였다.

○ 2021년 6월 △△법 제14조 제1항은 형벌 규정만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로 개정·시행되었다.

○ 2022년 7월 △△법 제14조 제2항 '사람의 신체를 대상으로 한 허위 영상물을 저장·시청한 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이 신설·시행되었다.

[△△법의 적용 사례]

○ 갑은 2020년 8월에 사람의 신체를 대상으로 한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여 유포한 사실로 2021년 9월에 기소되어 재판 중이다.

○ 을은 2021년 12월에 사람의 신체를 대상으로 한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여 유포한 사실로 2022년 2월에 기소되어 재판 중이다.

○ 병은 2022년 10월에 사람의 신체를 대상으로 한 허위 영상물을 저장하여 시청한 사실로 2023년 1월에 기소되어 재판 중이다.

학생: (가)

- ① △△법의 기능은 일반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이 아닌 사회 질서 유지에 있습니다.
- ② 법원은 갑에게 개정 전 △△법 제1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정해진 노역에 복무해야 하는 형벌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 ③ 을의 행위에 대하여 개정 전 △△법 제1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에 위배됩니다.
- ④ 병의 행위에 대하여 △△법 제14조 제2항을 적용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에 위배됩니다.
- ⑤ △△법 제14조 제2항에는 범죄 행위에 제공한 물건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는 형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51111]

16. 다음 자료의 (가)에 들어갈 수 있는 옳은 진술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교사: A국 의회에서 제정하여 시행되고 있는 형법에 대하여 죄형 법정주의에 근거하여 법적 평가를 해 보세요.

갑은 A국 형법 제○○조 및 제□□조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갑이 판사에게 "제가 무슨 죄로 재판을 받는 것입니까?"라고 묻자, 판사는 "당신은 용서받기 어려운 잘못을 저질렀소. 인생을 낭비한 죄! 게다가 남을 모욕한 죄!"라고 하였다. 갑이 태어나기 전부터 A국 형법 제○○조는 '인생을 낭비한 자는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조는 '사람을 모욕한 자는 무기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A국 형법 제△△조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생: (가)

- <보 기>
- ㄱ. A국 형법은 성문 법률주의에 위배됩니다.
 - ㄴ. 제○○조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 ㄷ. 제□□조를 적용하여 갑을 처벌하는 것은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 ㄹ. 제△△조와 비교하여 제□□조는 적정성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50616]

10. 다음 자료의 (가)에 들어갈 옳은 진술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교사: 다음과 같은 아동·청소년 범죄 처벌법이 우리나라 국회에서 제정되어 공포·시행된 경우를 상정하고, 이에 대해 죄형 법정주의에 근거하여 법적 평가를 해보세요.

○ 아동·청소년 범죄 처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청소년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아동·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아동·청소년 범죄"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죄를 말한다.

제3조(불량 행위) 불량한 행동을 한 아동·청소년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아동·청소년은 무기 징역에 처한다.

제5조(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아동·청소년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학생: (가)

- <보 기>
- ㄱ. 이 법은 성문 법률주의에 반합니다.
 - ㄴ. 제3조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합니다.
 - ㄷ. 제3조를 적용하여 이 법 시행 전에 불량 행위를 한 아동·청소년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 ㄹ. 제4조는 제5조와 비교해 볼 때 적정성의 원칙에 반합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40610]

14. (가)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형법에 의한 형사 처벌은 일반 시민의 법익 보호를 위해 범죄인의 법익을 박탈하는 강력한 제재 수단에 해당한다. 이때 일반 시민의 법익 보호라는 기능을 위해 범죄인의 인권 보장이라는 기능이 무시될 수 있어 두 기능의 균형이 요구된다. 형법은 '범죄 피해자를 위한 법'의 성격도 가지고 있지만, '범죄인을 위한 법'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법은 법정형을 넘어서는 형벌권 행사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 해석을 금지하는 등 국가의 자의적인 형벌권 남용으로부터 범죄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한 형법의 기본 원리가 (가)이다. 이 원리에 따르면 적절한 법률 없이는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 <보 기>
- ㄱ.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는 원칙이 포함된다.
 - ㄴ. 의회에서 적법한 입법 절차에 따라 제정된 형식적 의미의 형법에만 적용된다.
 - ㄷ. 형법의 보장적 기능보다 형법의 보호적 기능의 우위를 인정하는 근거가 된다.
 - ㄹ. 법관에 의한 법의 해석·적용뿐 아니라 입법자에 의한 입법권 행사에도 적용되는 원리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30614]

16. 다음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행위가 A에 해당하여야 한다. A는 형벌을 부과하는 근거가 되는 행위 유형을 법률에 기술해 놓은 것을 말한다. A는 국회에서 제정한 성문의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만약 그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경우에는 국가 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가 가능하게 되어 죄형 법정주의의 구체적 원리 중 B에 반한다. 죄형 법정주의의 다른 구체적 원리인 C는 관련 사안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는데도 유사한 사안을 규정한 법률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① A의 유형화를 통해 형법의 보장적 기능이 구현된다.
- ② A에 해당하면 심신 상실자의 행위라도 범죄는 성립한다.
- ③ B는 형벌까지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 ④ C는 B와 달리 입법자에게 적용되는 원칙이다.
- ⑤ B, C 모두 실질적 의미의 형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10916]

17. 다음 글에서 도출할 수 있는 죄형 법정주의의 구체적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를 정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형벌은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적절한 비례성이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 법률 조항은 범죄의 중대성 정도에 비하여 과도한 형벌을 규정함으로써 죄질과 그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 사이에 비례 관계가 준수되지 않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려는 법치 국가의 이념에 어긋나고, 형벌 체계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다.

- ① 범죄와 형벌은 관습법에 의해 규정할 수 없다.
- ② 범죄의 성립과 그 처벌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의해야 한다.
- ③ 범죄와 형벌이 법률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 ④ 범죄 행위의 경중과 행위자가 부담해야 할 형벌의 정도는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 ⑤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처벌해서는 안 된다.

[210617]

(17) 범죄의 성립 요건

16. 다음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이런 시간에는 범죄의 성립 요건에 대해 알아보시다.

교사

〈범죄의 성립 요건〉

범죄를 형식적으로 정의하면, '법률에 의하여 형벌이 부과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즉, 법률만이 범죄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죄형 법정주의상의 법률적 개념이다. 이에 따른 범죄 개념은 A, B, C라는 세 가지 성립 요건을 요소로 한다. A는 구체적인 행위가 법률에 규정된 추상적·법률적 구성 요건에 합치되는 것을 말하고, B는 전체 범죄사실에 비추어 보아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부정적 가치 판단을 의미하며, C는 행위자 개인에 대한 법적 비난 가능성을 의미한다.

- ① 소매치기 현장에서 도주하는 범인을 체포한 시민의 행위는 A가 인정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스톱킹 행위를 범죄로 처벌하는 법률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이루어진 스톱킹 행위는 이 규정의 A가 인정되지 않는다.
- ③ B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 선고를 받은 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면 치료 감호 처분이 가능하다.
- ④ 괴한이 흉기를 들고 생명을 위협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그를 밀친 행위는 C가 인정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⑤ 화재로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자 부득이하게 옆집에 들어간 행위는 C가 인정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60616]

17. 범죄의 성립 요건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교사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A, B, C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중 A가 인정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례에 대해 발표해 봅시다.

경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행범을 체포한 행위를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친구의 새 휴대폰을 구경하다가 그 휴대폰을 실수로 떨어뜨려 손괴한 행위를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딸의 생명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을 받아 법정에서 위중한 경우가 있습니다.

교사

범이 적절한 사례를 발표했어요. 같은 B가 인정되지 않는 사례를, 옳은 C가 인정되지 않는 사례를 말했어요.

- ① A는 전체 범죄사실에 비추어 보아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가치 판단을 의미한다.
- ② B는 행위자에 대한 법적 비난 가능성을 의미한다.
- ③ C는 구체적인 행위가 법률로 정해 놓은 범죄 행위의 유형에 합치되는 것을 의미한다.
- ④ A와 C 모두 행위자가 아닌 행위에 대한 판단을 한다.
- ⑤ C가 인정되나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B가 인정된다.

[250917]

17.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평소에 장난이 심한 갑(18세)은 친구 을(18세)의 휴대 전화를 실수로 깨뜨렸다. 그날 저녁 갑은 부모의 허락을 받아 자신이 키우던 개를 데리고 산책하던 중 을을 만났다. 갑은 장난삼아 자신의 개에게 을을 향하여 “물어!”라고 명령하였고, 목줄이 풀린 갑의 개가 을을 물어 을에게 상해를 입혔다. 을의 위급한 상황을 목격한 병은 을을 구하기 위해 갑의 개를 발로 찼다. 동물 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은 병에 대해 검사는 정당방위를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휴대 전화 손괴 및 상해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은 갑에 대해 검사는 과실에 의한 손괴는 법 규정이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불기소 처분을 하였고,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 유예 처분을 하였다.

- ① 갑에게 책임 능력이 인정되더라도 갑의 부모는 을의 상해에 대해 법정 감독 의무자로서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 ② 을은 배상 명령 제도를 통하여 갑에게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 ③ 검사는 갑이 을의 휴대 전화를 손괴한 행위에 대하여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 ④ 검사는 갑의 상해 혐의에 대하여 객관적 범죄사실 관점에서 위배되지만, 법적 비난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 ⑤ 검사는 병의 행위에 대하여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51117]

13.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갑의 자전거를 을이 빌려 갔다가 잃어버리자, 갑은 을에게 자전거를 찾아오라고 생명을 위협하며 협박하였다. 이에 공포심을 느낀 을은 병, 정과 함께 자전거를 훔쳤다. 이후 경찰은 을과 정에 대해서는 검찰로 송치하였고, 13세인 병에 대해서는 수사 중에 있다. 검사는 을이 자신의 생명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정은 절도 행위 당시에 심신 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을과 정에 대해 각각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한편, 검사는 협박 행위를 한 갑에 대해서는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 유예 처분을 하였다.

- ① 병은 책임이 조각되므로 소년법상 보호 처분이 부과될 수 없다.
- ② 검사는 을에 대하여 법적 비난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 ③ 수사 절차에서 을, 정과 달리 갑에게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④ 검사는 갑의 행위가 정당 행위로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⑤ 검사는 정은 절도 행위가 전체 범죄사실의 관점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250613]



오늘 들어온 주요 사건 소식입니다. 1년 전 태풍으로 배가 전복될 위험을 피하기 위해 A의 굴 양식장에 들어간 선장 갑(35세)을 기억하십니까? 당시 수많은 승객을 살렸음에도 굴 양식장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 손괴 혐의로 재판을 받던 갑에게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어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스토킹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 오늘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스토킹 피해자가 지난 주까지 자신을 스토킹했던 을(21세)을 오늘 고소했고 을은 현재 도주하여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고등학교 동창생을 상해한 병(25세)에 대한 구속 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술에 취해 심신 미약 상태에서 병은 우연히 만난 B(25세)를 폭행해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런데 B는 학창 시절 병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던 학교 폭력 가해자로 밝혀져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행인을 상해한 정(20세)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정은 동생 무(12세)와 함께 행인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행인에게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14. 위 자료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 ㄱ. 갑의 행위는 전체 범죄사실의 관점에 위배되나, 생명을 살리기 위한 행위로 책임이 조각되어 무죄 판결을 받았다.
- ㄴ. 을에 대한 고소가 ○○법 시행 이후 이루어졌지만, ○○법 조항의 범죄 구성 요건을 적용하여 을을 처벌할 수 없다.
- ㄷ. 병의 행위는 침해의 현재성이 없어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없으나, 병에 대한 법적 비난 가능성은 없다.
- ㄹ. 무는 형사 책임 무능력자이지만 소년법상 보호 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41114]

12. 다음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표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 (가)~(마)의 공판 과정에서 제시된 변호인의 주장이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각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사건	변호인의 주장
(가)	갑의 폭행은 적법한 체포 과정에서 도망가는 현행범을 제압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임.
(나)	을의 폭행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
(다)	병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병의 나이가 13세 11개월에 불과함.
(라)	정의 폭행은 심신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임.
(마)	무는 자신에 대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타인을 폭행한 것임.

- ① (가)에서 법원은 갑의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② (나)에서 법원은 을의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이 인정되지만 책임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였다.
- ③ (다)에서 변호인은 병의 행위가 범죄사실 전체의 관점에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 ④ (라)에서 변호인은 행위자에 대한 법적 비난 가능성이 없음을 주장하였다.
- ⑤ (마)에서 변호인은 무의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만 자구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40912]

5. A, B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긴급성은 법을 모른다.’는 법언처럼, 현재의 위난에 처한 사람의 법익 보호를 위해 타인의 법익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는 긴급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는 A에 해당한다. 한편 ‘법은 불법에 양보할 필요가 없다.’는 법언에 따라 현재의 부당한 침해 행위로부터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는 범죄사실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B에 해당한다. A와 B 모두 범죄사실 전체의 관점에서 정당화되어 처벌되지 않는 사유이지만, B는 위법한 침해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난이 위법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 A와 구별된다.

<보 기>

- ㄱ. ‘A로 인정되는 타인의 행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는 구성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B가 인정되지 않는다.
- ㄴ. B와 달리 A는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 ㄷ. A와 B 모두 형식적 의미의 형법에 규정되어 있다.
- ㄹ. A 또는 B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유추 해석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31105]

13.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형사 책임은 (가)의 성립 요건 중 하나인 구성 요건 해당성 판단에서 행위자에게 구성 요건 실현 행위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을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에서 민사 책임과 구별될 수 있다. 갑이 지나가던 을과 부딪쳐 을의 휴대 전화를 파손한 상황을 가정해 보자. 갑이 일반인이 기울여야 할 주의(注意)를 게을리하였더라도 을의 휴대 전화를 파손하는 것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면 갑의 행위는 인식과 의사를 구성 요건 요소로 하는 재물 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갑의 파손행위로 인해 을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민법상 (나) 이가 성립되어 갑은 을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 ① (가)의 성립에 따른 형사 책임은 피해자에게 생긴 손해를 보전하는 것을 고유한 목적으로 한다.
- ② (나)에 따른 책임의 성립 여부는 고의에 의한 경우이든 과실에 의한 경우이든 차이가 없다.
- ③ (나)는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 ④ (나)와 달리 (가)는 가해 행위가 법이 보호해야 할 가치 있는 이익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인정되어야 성립된다.
- ⑤ 갑의 행위가 (가)로 성립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을은 배상 명령 제도를 통해 (나)에 따른 손해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231113]

14.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범죄가 성립하려면 A, B, C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표는 각 사례의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나타낸다.	
사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
갑(12세)이 장난으로 옆집의 반려견을 발로 걷어차 다치게 하였다.	갑의 행위는 A가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경찰관 을(30세)은 범죄 현장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행범인을 체포하였다.	을의 행위는 B가 인정되나 C가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병(45세)은 자신의 생명에 대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 의해 강요된 행위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다.	(가)
(나)	정의 행위는 A, B, C가 모두 인정되어 범죄가 성립한다.

- ① A는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가치 판단을 의미한다.
- ②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는 A가 조각되는 사유이다.
- ③ B가 인정되는 행위라도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정당 행위로서 C가 조각된다.
- ④ (가)에 '병의 행위는 B가 인정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가 들어갈 수 있다.
- ⑤ (나)에 '심신 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정(19세)이 이유 없이 돌을 던져 타인의 차량을 파손시켰다.'가 들어갈 수 있다.

[230914]

14. 표는 (가)~(마) 사건에 대한 재판의 쟁점과 그 법적 판단에 근거한 판결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사건	재판의 쟁점	판결
(가)	자기 집에 침입한 도둑을 살해한 A의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법익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유죄
(나)	부부 싸움 후 배우자의 머리카락을 몰래 자른 B의 행위가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유죄
(다)	소매치기 현장에서 도주하는 범인을 추격하여 체포한 C의 행위가 법률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무죄
(라)	자신의 생명에 대한 저항할 수 없는 협박을 받아 법정에서 위증을 한 D의 행위가 범죄가 되는지 여부	무죄
(마)	악귀에 씌었다며 행인을 폭행한 E의 행위가 심신 장애로 사물을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	유죄

- ① (가)에서는 A의 행위가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 ② (나)에서는 B의 행위가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 ③ (다)에서는 C의 행위가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 ④ (다)에서는 C의 행위가 정당 행위로, (라)에서는 D의 행위가 자구 행위로 인정되었다.
- ⑤ (라)의 D와는 달리 (마)의 E에 대해서는 책임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220914]

14.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가)~(다)는 범죄 성립 요건인 구성 요건 해당성, A, B 중 어느 하나가 갖춰지지 않아 해당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례이다. 단, A와 B는 각각 위법성과 책임 중 하나이다.
(가) 갑(22세)이 장난으로 친구의 애완견을 발로 걷어찬 경우는 구성 요건 해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경찰관 을(43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행범인을 체포한 경우는 A가 인정되지 않아 체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병(51세)이 심신 상실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는 B가 인정되지 않아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① (가)는 행위자에 대한 법적 비난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례이다.
- ② (나)는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부정적으로 판단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례이다.
- ③ (다)는 법률로 정해 놓은 범죄 행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례이다.
- ④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는 A가 인정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례이다.
- ⑤ 자신의 집에 침입하여 생명을 위협하는 강도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강도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는 B가 인정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례이다.

[220614]

14.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 경찰관 갑은 절도범을 적법하게 긴급 체포하였다. ○ 을의 범죄 후 그 범죄를 가중 처벌하도록 형법이 개정되었다. ○ 병은 이를 전 자신의 물건을 파손한 A를 길거리에서 우연히 발견하고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A를 붙잡으면서 부득이하게 폭행하였다. ○ 정의 종업원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객관적 법질서에 반하지만 정에게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법적 비난 가능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 무가 전화상으로 단순히 고성을 지른 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폭행죄의 폭행 개념인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폭행죄로 기소된 무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 ① 갑의 체포는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을을 개정된 형법으로 처벌해도 소급효 금지 원칙 위반이 아니다.
- ③ 병의 폭행은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 ④ 정의 행위는 위법성이 인정되나 책임이 조각된다.
- ⑤ 무의 행위는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나 위법성이 조각된다.

[211114]

(18) 형사 절차 + 인권 보장 제도

10.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A가 운영하는 무인 편의점에서 갑(16세)과 을(12세)은 함께 10회에 걸쳐 라면과 음료수 등을 계산하지 않고 무단으로 취식하였다. 정산 과정에서 판매 수량과 매출액의 차이를 확인한 A는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을 통해 갑과 을의 범행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에 이를 신고하였다. 이후 경찰은 갑의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였고, 을에 대해서는 수사 중에 있다. 검사는 갑을 기소하였고, 1심 법원은 갑이 미성년자인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갑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다.

—<보 기>—

- ㄱ. 갑은 일정 기간 동안 취소 또는 실효되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 ㄴ. 형사 책임 무능력자인 을은 소년법상 보호 처분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 ㄷ. A는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해 국가로부터 범죄 피해자 구조금을 받을 수 없다.
- ㄹ. A는 갑의 형사 재판의 당사자로서 자신의 손해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60610]

14.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갑(22세)은 돈을 강취할 목적으로 술에 취해 걷고 있는 행인을 폭행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히고 그의 지갑을 가져갔다.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에서 도주하던 갑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갑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검사는 구속 영장을 ㉠ 청구하였고 법원은 이를 발부하였다. 이후 검사는 갑을 ㉡ 기소하였고, 1심 법원은 갑에게 ㉢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갑과 검사 모두 항소를 포기하여 그 판결이 ㉣ 확정되었다.

- ① ㉠ 이후 갑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갑의 신청을 전제로 한다.
- ② ㉡ 이후 갑의 범죄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법원에게 있다.
- ③ ㉢ 이후 갑은 구속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 ④ ㉣은 교정 시설에 수용하나 정해진 노역을 부과하지 않는 형벌이다.
- ⑤ ㉣ 이후 갑은 보석을 통해 형기 만료 전에 석방될 수 있다.

[260614]

14.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갑(18세)은 돈을 낼 의사가 없음에도 A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고 도주하였다. A는 식당 앞을 지나가던 을을 갑으로 오인하고 “계산하고 가자.”라고 하며 을의 목살을 잡고 식당으로 끌고 왔다. 경찰이 수사를 통하여 A의 식당에서 음식을 먹은 사람은 을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냈지만, 수사 과정에서 을은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다. 검사는 A에 대하여 폭행 혐의는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 유예 처분을 하였다. 이후 경찰은 동종의 범죄로 수사 대상이었던 갑을 체포하였고, 검사는 구속 상태인 갑을 기소하였다. 1심 법원이 갑에게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는 항소를 하였지만 갑은 항소를 포기하였다.

- ① 을의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는 범죄 피해자 구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 ② 검사는 A의 행위가 자구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③ 갑은 기소 전 검사에게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하여 석방될 수 있다.
- ④ 1심 법원은 갑에게 형 선고의 취소 없이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공소 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판결을 선고했다.
- ⑤ 갑이 항소를 포기하였다더라도 갑에게는 당해 사건의 항소심 계속 중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251114]

갑(13세)은 △△ 스마트 워치를 사기 위해 법정 대리인의 ○○ 자전거를 50만 원에 팔기로 결심하고 중고 거래 사이트에 판매 글을 게시하였다. 게시 글을 본 을(23세)은 갑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갑과 ○○ 자전거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체결 당시 갑은 위 매매 계약에 대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이후 갑은 번심하여 돈만 챙길 생각으로 자신의 계좌에 을이 50만 원을 송금하면 1시간 후 지하철역 앞에서 만나 ○○ 자전거를 건네주겠다고 을을 속였다. 갑에게 속은 을은 50만 원을 갑의 계좌에 송금하고 약속 장소에서 기다렸지만 갑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갑은 을에게서 받은 돈으로 △△ 스마트 워치를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병(17세)으로부터 스마트 워치를 구매하였는데, 알고 보니 병이 모조품을 정품으로 속여서 판매한 것이었다. 또한 병은 갑에게서 받은 돈으로 정(35세)이 운영하는 전자 제품 매장에서 고가의 헤드폰을 사기 위해 자신이 직접 위조한 신분증을 제시하였고, 이에 병이 성인이라고 믿은 정은 이 헤드폰을 병에게 판매하였다. 한편, 을이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사를 통해 갑의 사기 혐의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돈의 사용처를 수사하던 경찰은 병의 사기 및 위조 혐의를 확인하고 병에 대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였다.

15. 위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 ㄱ. 갑의 연령을 고려하여 검사는 갑에 대해 기소 유예 처분을 할 수 있다.
- ㄴ. 갑과 병 모두 소년법상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ㄷ. 검사가 병을 기소하여 병에 대한 공판 절차가 개시되면 갑도 재판의 당사자가 된다.
- ㄹ. 병의 갑에 대한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되면, 병의 부모는 갑에게 법정 감독 의무자로서의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이 없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50915]

18.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갑은 사고고 있던 동간내기 을에게 다른 사람이 생겼다고 의심하여 을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하는 등 수차례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에 을은 갑을 고소하였고, 수사 결과 교제 폭력 혐의가 인정되어 검사는 갑을 기소하였다. 1심 법원은 갑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하였다. 한편 병은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지하철에서 흉기를 휘둘러 승객 3명에게 상해를 입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된 병은 구속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었다. 검사는 구속된 병을 기소하였고, 1심 법원은 병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불복한 병이 항소하였고, 구금된 상태에서 병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 ① 갑에게 선고된 판결이 확정된 경우, 2년 동안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으면 갑은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 ② 을은 갑에 대한 형사 소송에서 배상 명령을 신청하여 국가로부터 범죄 피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
- ③ 병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한 법원은 검사의 구속 영장 실질 심사 청구로 병을 직접 심문한 후 병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였다.
- ④ 1심 법원은 병에게 교정 시설에 수용되거나 정해진 노역에 복무하지 않아도 되는 형을 선고하였다.
- ⑤ 병은 항소심 계속 중 보석을 통해 석방될 수 있다.

[250918]



아나운서

오늘 들어온 주요 사건 소식입니다. 1년 전 태풍으로 배가 전복될 위험을 피하기 위해 A의 굴 양식장에 들어간 선장 갑(35세)을 기억하십니까? 당시 수많은 승객을 살렸음에도 굴 양식장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 손괴 혐의로 재판을 받던 갑에게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어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스토킹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 오늘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스토킹 피해자가 지난 주까지 자신을 스토킹했던 을(21세)을 오늘 고소했고, 을은 현재 도주하여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고등학교 동창생을 상해한 병(25세)에 대한 구속 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술에 취해 심신 미약 상태에서 병은 우연히 만난 B(25세)를 폭행해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런데 B는 학창 시절 병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던 학교 폭력 가해자로 밝혀져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행인을 상해한 정(20세)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정은 동생 무(12세)와 함께 행인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행인에게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나운서

15. 위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A는 배상 명령 제도를 통해 갑으로부터 자신이 입은 굴 양식장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없다.
- ② 법원은 병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병을 직접 심문할 수 있다.
- ③ B는 피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병에게 범죄 피해자 구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정은 기소된 이후 법원에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하여 구속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
- ⑤ 정은 구속된 상태에서 공판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신청을 해야 한다.

[241115]

18.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갑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을이 병의 빵을 때리고 병을 향해 갑 소유 고가의 화분을 집어 던져 화분이 깨지면서 병이 상해를 입었다. 갑이 을과 병을 말렸으나, 흥분한 병은 갑을 폭행하였고, 갑은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을은 구속된 상태에서, 병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고, 이후 검사는 을과 병을 각각 기소하였다. 1심 법원은 을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였고, 병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을은 항소하였고, 병에 대한 판결은 확정되었다.

- ① 을은 검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해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았다.
- ② 을은 항소심에서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 ③ 병은 유예 기간 동안 일정한 범행이 없으면 공소 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 ④ 병은 형사 보상 제도를 통해 자신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⑤ 갑은 배상 명령 제도를 통해 을과 병에게서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다.

[250618]

16.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갑과 그의 아들 을은 슈퍼에서 빵을 훔친 혐의로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 1심 법원은 갑에게 배고픈 을을 위해 범행한 점, 범행을 뒤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을에게는 범행에 가담했다는 확신이 들지 않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한편, 병과 정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 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 법원은 범행을 주도한 병에게는 금고 2년을 선고한 반면, 정에게는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를 고려하여 금고 1년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하였다.

- ① 갑은 실효 없이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 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 ② 1심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을은 형사 보상 제도를 통하여 자신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③ 1심 법원은 을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범죄 예방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치료 감호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 ④ 1심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병은 판사의 지휘를 받아 교정 시설에 수용되거나 정해진 노역에 복무하지 않아도 된다.
- ⑤ 1심 법원은 정에게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41116]

7. 형사 제재 A, B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A는 범죄에 대한 법률상의 효과로서 국가가 범죄자에게 공권력을 행사하여 부과하는 처벌을 의미하며, 본질적으로 행위자가 저지른 과거의 불법에 대한 책임을 전제로 부과된다. B는 행위자의 장래 위험성에 근거하여, 범죄자의 개선을 통해 재범을 예방하고 사회 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A를 대체 또는 보완하여 부과되는 자유의 박탈과 제한 등의 처분을 뜻한다.

—<보 기>—

- ㄱ. A에 해당하는 구류는 정해진 노역을 부과하지 않는다.
- ㄴ.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써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B에 해당하는 보호 관찰이 부과될 수 있다.
- ㄷ. B와 달리 A는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부과될 수 없다.

-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40907]

17.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갑은 주차된 을의 차량 유리창을 부순 후 그 안에 있던 스마트폰을 훔쳐 달아나던 중 순찰 중인 경찰관 병에게 발각되었다. 병이 계속 쫓아오자 갑은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병에게 폭행을 가하였지만 결국 체포되었다. 이후 검사는 구속 영장을 발부받아 갑을 구금한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은 갑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소송의 당사자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다.

- ① 검사가 구속 영장 실질 심사를 청구하면 판사가 갑을 직접 대면하여 갑의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 ② 갑은 공판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 ③ 을은 갑의 범죄 행위로 인한 재산상 피해의 배상을 받기 위해 국가에 일정 한도의 구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형이 확정된 후 갑이 2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 ⑤ 병이 갑에게 배상 명령을 신청하면 별도의 민사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다.

[240917]

17.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갑(30세)은 뒷집에 이사 온 이웃 A(32세)와 층간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자 상해의 의사로 골프채를 휘둘러 A에게 16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를 입혔다. 싸우는 소리를 듣고 경비원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은 갑을 현장에서 바로 체포하였다. 체포된 갑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 이후 갑의 도주 우려로 인하여 갑에 대한 ① 구속 영장이 청구되었다.

- ① 갑이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하였으므로 공판 절차에서 갑은 무죄로 추정되지 않는다.
- ② 판사는 ①이 청구됨에 따라 갑의 신청을 받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 ③ 수사 단계에서 ①이 발부되어 갑이 구속된 경우, 갑은 구속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기소 전까지 법원에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갑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면 갑은 A에게 범죄 피해 구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 ⑤ 피해 배상을 받기 위해서 A는 갑에 대한 공소 제기를 하면서 배상 명령을 신청해야 한다.

[240617]

14.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42세)은 동창생 을(43세)에 대한 사기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공소 제기되었다. 공판 중 구속되어 재판을 받던 갑은 징역 10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해당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후 을은 온라인 단체 채팅방에서 '갑이 사기죄로 처벌을 받았으니 조심하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를 본 갑이 고소하여 을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다. 을은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공언한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를 처벌하는 ○○법 조항 위반 혐의로 공소 제기되었다. 을은 법정에서 동창생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한 일이라고 진술하였고, 법원은 을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을에게 갑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하였다.

—<보 기>—

- ㄱ. 공판 단계에서 구속된 갑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어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원은 변호인을 선정해 주어야 한다.
- ㄴ. 갑은 집행 유예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2년을 경과하면 형 선고의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 ㄷ. 갑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을의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구하는 의사 표시를 수사 기관에 하였다.
- ㄹ. 법원은 을이 글을 게시한 행위가 ○○법 조항의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31114]

16.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상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갑과 을 모두에 대해 검사는 구속 영장을 청구하였으나 판사는 을에 대해서만 구속 영장을 발부하였다. 이후 갑과 을 모두 기소되었으며, 을만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1심 법원은 갑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고, 을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사는 갑뿐만 아니라 을에 대해서도 항소하지 않았고, 을도 항소하지 않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① 갑이 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청구하여 갑에 대한 불구속 수사가 이루어졌다.
- ② 검사가 을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사전에 발부한 체포 영장이 필요하다.
- ③ 1심 재판 중 을은 법원에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1심 법원은 을에게 2년 동안 일정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면소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⑤ 판결이 확정된 후 을은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230916]

10.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갑(25세)은 을의 지갑을 절취하던 중 적발되어 사법 경찰관에게 쫓기다가 열쇠가 꽂힌 채 길거리에 주차된 병(20세)의 오토바이를 발견하였다. 갑은 체포를 면하기 위해 병의 오토바이를 절취해 타고 달아나려고 하였다. 병은 자신의 오토바이를 절취당하지 않기 위해 갑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고, 그 과정에서 갑에게 부득이하게 2주 정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갑은 현장에서 체포된 이후 구속되었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후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되었다. 갑은 1심 법원에서 징역형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갑의 고소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던 병은 죄가 안 됨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 ① 갑에 대한 구속은 판사가 사전에 발부한 구속 영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 ② 구속 영장 발부 전 갑에 대한 판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갑의 신청을 전제로 한다.
- ③ 갑에 대한 1심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후 일정한 범행 없이 유예 기간이 경과하면 공소 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 ④ 을은 갑의 범죄 행위로 인한 재산상 피해의 배상을 위해 국가에 일정 한도의 구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검사는 병의 갑에 대한 상해 행위가 객관적 법질서에 위반되지만 비난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230610]

갑(24세)과 을(14세)은 술에 만취한 병이 난동을 부리자 이를 제압하였고, 이 과정에서 병은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수사 과정에서 검사는 갑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하였고, 판사는 ㉠ 구속 영장을 발부하였다. 검사는 갑, 을 모두 범죄의 혐의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갑은 ㉡ 기소하였으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을은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법원은 "병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행하여진 피고인의 행위는 동거나 당시 상황으로 보아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며 ㉢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후 검사가 항소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갑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고, ㉣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13. 밑줄 친 ㉠~㉣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에 앞서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서면만을 통해서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② ㉡ 이후 갑의 범죄 사실 입증 책임은 판사에게 있다.
- ③ ㉢에 의해 개시된 재판에서 갑과 검사는 소송의 당사자가 된다.
- ④ ㉣으로 인해 갑에게 형사 보상 청구권이 인정된다.
- ⑤ ㉣로 인해 갑은 병에게 범죄 피해자 구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221113]

14. 위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 ① 재판 중 법률이 개정되어 형벌이 무거워진 경우에 갑은 개정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 ② 검사는 을의 행위가 구성 요건에는 해당하나 을이 형사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 ③ 을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④ 1심 법원은 갑의 행위가 구성 요건에는 해당하나 자구 행위임을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 ⑤ 2심 법원은 갑에게 교도소 내에 가두어 정역에 복무하게 하는 형벌을 부과하였다.

[221114]

13. 밑줄 친 ㉠~㉤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 A가 B를 △△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여 B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다.
수사 과정에서 검사는 B에 대해 ㉡구 영장을 청구하였고, 판사는 ㉢구속 영장을 발부하였다. 구속된 B는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하였지만 기각되었다. 이후 B는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고, 재판부는 B에게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검사는 항소를 하지 않았다.

- ① ㉠에서 A는 범죄 피해자이다.
- ② ㉡에 앞서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③ ㉢은 검찰에 청구하며 석방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한다.
- ④ ㉤이 확정된 후 유예 기간 동안 일정한 범행이 없으면 공소 제기의 효력이 상실된다.
- ⑤ ㉥으로 인해 B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

[220913]

18.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갑과 을은 병에게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히고 도주하였으나 일주일 후에 검거되었다. 갑, 을 모두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하였다. 검사는 범죄 혐의를 확인하고 갑, 을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검사는 피의 사실이 인정되지만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가담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하여 갑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하였다. 재판 결과 을에 대해 징역 6월이 선고되었다. 을은 변호사와 상의 후 항소를 제기하였다.

- ① 갑은 불기소 처분을 이유로 형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② 을이 항소를 포기하였으므로 검사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판결은 확정된다.
- ③ 을은 형 집행 도중에 보석 제도를 통하여 형기 만료 전에 석방될 수 있다.
- ④ 병은 형사 재판의 당사자이므로 형사 재판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⑤ 갑, 을 모두 형사 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220618]

17.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같은 A에 대한 중상해 혐의로, 을은 사기 혐의로 각각 도주 중 수사 기관에 긴급 체포되었고, 병은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같은 ㉠ 구속 적부 심사 절차에서 석방되었고,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하지 않았던 을은 보석으로 석방받았다. 같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을은 ㉡ 벌금형에 대해 일정 기간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병은 ㉢ 선도 조정부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

-<보 기>-

- ㄱ. ㉠의 결정과 달리 ㉡은 검사가 한다.
- ㄴ. ㉢ 확정 후 ㉣ 효력이 상실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 기간이 지나면 을에 대한 공소 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 ㄷ. 을은 형사 재판의 당사자가 된 이후에 석방되었다.
- ㄹ. A는 법원의 배상 명령을 통해 국가로부터 피해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① $\neg, \perp$ ② $\neg, \sqsubset$ ③ $\perp, \sqsubset$
④ $\neg, \sqsubset, \sqsupset$ ⑤ $\perp, \sqsubset, \sqsupset$

[211117]

8. 밑줄 친 ㉠~㉣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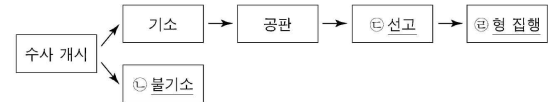
갑(28세)은 을에 대한 상해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던 중, ㉡기소되었다. 갑은 ㉢1심 재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 갑은 항소를 하였고, 2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사가 상고를 하였지만 기각되어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 ① ㉠ 단계 이전에 갑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 ② ㉡으로 인해 검사는 소송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다.
- ③ ㉢ 단계에 이르러야 비로소 갑은 진술 거부권을 가진다.
- ④ 갑이 형사 보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 시점에 구금되어 있어야만 한다.
- ⑤ ㉦ 이후 올은 배상 명령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210908]

13. 다음은 갑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형사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갑은 을과의 말다툼 끝에 을을 밀쳐서 부상을 입혔고 이에 을은 갑을 ㉠고소하였다.



- ① ㉠은 을이 법원에 갑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 표시를 의미한다.
- ② ㉡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행해질 수 있다.
- ③ ㉢ 단계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크더라도 형벌 이외의 보안 처분을 부과할 수 없다.
- ④ ㉣ 단계에서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기간이 경과한 때 형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된다.
- ⑤ ㉤ 단계에서 갑은 형기 만료 이전이라도 보석 결정에 의해 석방될 수 있다.

[210913]

16.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은 을의 사기 범죄 사실에 대해 경찰에 ㉠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을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다. 경찰은 을에 대한 ㉡ 체포를 통해 신병을 확보하여 ㉢ 피의자 신문을 하고 ㉣ 구속 영장을 발부 받아 구속하였다. 을은 수사 진행 과정에서 구속 절차의 적정성을 이유로 석방을 요구하였고 ㉤ 법원의 심사 중에 있다.

- ① ㉠은 범죄 피해자와 관련자를 제외한 제3자가 수사 기관에 수사를 요청하기 위해 제출하는 문서이다.
- ② 수사 기관이 ㉡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사전에 발부한 영장을 예의 없이 필요로 한다.
- ③ 을은 ㉢을 받음에 있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는 없다.
- ④ 수사 기관이 ㉣을 신청하면 법원은 별도의 피의자 심문 절차 없이 형식 심사만을 통해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 ⑤ ㉤을 통해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을은 석방된다.

[210616]

(19) 미성년자의 근로 + 근로자의 권리 문제

18. (가)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3점]

안녕하세요. 저는 상시 근로자 30명이 고용된 △△ 대형 마트의 사장입니다. 방학을 앞둔 17세 고등학생 갑이 갑의 법정 대리인 을과 함께 와서 갑의 아르바이트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갑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업무 내용은 제품 판매 및 진열이고, 소정 근로 시간은 10시부터 18시, 휴게 시간은 13시부터 14시까지인데 근로 시간 연장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시급 1만 원으로 하고, 근무일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이며 매주 일요일과 월요일은 주휴일입니다. 이 계약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법적 조언을 요청합니다.

(가)

상담인 담당자

○○ 근로 권익 센터

- ① 합의한 임금이 법정 최저 임금보다 적어도 갑은 법정 최저 임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② 갑과 합의하여 매 근무일에 1시간씩 연장 근무하는 것은 근로 기준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③ 갑이 근로 계약 내용대로 토요일에 근무할 경우, 갑에게 통상 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④ 갑은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니 을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⑤ 갑의 근로 계약을 을이 대리하여 체결하는 것은 근로 기준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260618]

7. 다음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근로 상담 일지>

○ 상담 사례 1 (해고 관련 문의)

갑: 상시 근로자 30명인 ○○기업에서 1년간 근무하였고, 해고 당시 ○○기업 노동조합 조합원이었음. 사용자가 근로 계약과 다르게 1시간 일찍 출근하여 업무를 준비할 것을 갑에게 지시하였으나 갑이 이에 항의하며 따르지 않자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갑에게 해고를 통보함.

○ 상담 사례 2 (근로 계약 내용 관련 문의)

을: 상시 근로자 30명이 고용된 마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17세 남자 고등학생임. 근로 계약 기간은 2개월이고, 업무 내용은 마트 내 물품 정리임. 소정 근로 시간은 12시 30분부터 20시(휴게 시간: 16시~16시 30분)임. 임금은 시간급이며 법정 최저 임금으로 하고, 근무일은 매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임. 을의 친권자가 근로 계약 체결에 동의함.

- ① 사용자가 갑에게 해고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였다면 갑은 부당 해고를 주장할 수 없다.
- ② ○○기업 노동조합은 근로 기준법에 따라 지방 노동 위원회에 갑에 대한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갑은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별도로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없다.
- ④ 을이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 계약에 따른 을의 휴게 시간은 근로 기준법에 위배된다.
- ⑤ 사용자가 을의 근로 시간을 매 근무일 2시간씩 연장하는 것은 을과의 합의가 있더라도 근로 기준법에 위배된다.

[251107]

8. (가)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3점]

○○ 고용 센터 ×

상담 신청

질문

저는 상시 근로자 10명이 근무하고 있는 마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름 방학 시즌을 맞아 물품 판매를 위해 남학생 3명을 추가로 고용했습니다. 갑(14세)은 중학생이고, 을(16세)과 병(18세)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다음은 갑, 을, 병과 각각 체결한 근로 계약의 공통된 내용 중 일부입니다. 근로 기준법에 따라 이 계약에 대한 법적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1. 기간: 2024년 7월 20일부터 2024년 8월 15일까지

2. 소정 근로 시간(휴게 시간): 13:00~20:00(16:00~17:00)

3. 근무일(주휴일): 수~일요일(월, 화요일)

4. 임금: 법정 최저 임금(시간급)

답변

(가)

- ① 갑은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니 갑의 법정 대리인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② 을을 근로자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고용 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 인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 ③ 을이 근로 계약 내용대로 일요일에 근무한다면, 을에게 통상 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④ 병의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 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 ⑤ 병과 합의하여 병이 매 근무일 22시까지 2시간 더 근무하게 하더라도 근로 기준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250908]

15.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A 회사 직원인 갑은 회사로부터 공휴일 근무를 지시받았으나 육아를 이유로 지시를 거부하였다. 이에 갑이 근무 지시를 거부했다는 사유로 A 회사는 갑에게 해고 통보를 하였다. 갑은 부당 해고를 이유로 ○○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중앙 노동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그 후 A 회사는 중앙 노동 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 해고 구제 재심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수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은, 갑이 공휴일 근무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고등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남녀 고용 평등법상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 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 ① A 회사가 갑에게 공휴일 근무를 지시한 것은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
- ② 갑이 노동조합에 소속되었다면, 노동조합은 A 회사의 해고 통보에 대해 ○○ 지방 노동 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갑이 ○○ 지방 노동 위원회를 통해 부당 해고에 대한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④ 갑은 노동 위원회를 통한 구제 절차를 거쳐야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⑤ 갑에 대한 해고가 부당 해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중앙 노동 위원회와 □□고등법원의 판단은 동일하지 않다.

[250615]

10.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 회사에서 근무하던 A는 사용자 B로부터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에 B의 해고 통보가 ○○ 회사 노동조합 소속인 자신에게 불이익을 주고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부당 해고이자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며 A는 □□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다. 한편, 이 사실을 알게 된 A의 두 아들 C(18세, 고등학생)와 D(16세, 고등학생)는 생활비를 벌고자 집 근처 대형 마트 사장 E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는 C, D가 각각 E로부터 교부받은 근로 계약서 내용의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

구분	C	D
계약 기간	2023년 1월 2일~2023년 2월 28일	
업무의 내용	마트 내 물품 판매	
소정 근로 시간 (휴게 시간)	9:00~18:00 (13:00~14:00)	9:30~17:00 (13:30~14:00)
근무일 (주휴일)	매주 5일(화~토) (일요일)	매주 5일(월~금) (일요일)

- ① B의 해고 통보에 대해 A가 소속된 노동조합은 근로 기준법에 따라 □□ 지방 노동 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 지방 노동 위원회에서 A의 구제 신청을 인용한 경우, B는 이에 불복하려면 10일 이내에 행정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 ③ C의 휴게 시간뿐만 아니라 D의 휴게 시간도 근로 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④ C의 근로 시간을 매 근무일 2시간씩 연장하는 것은 C와 E의 합의가 있어도 근로 기준법에 위배된다.
- ⑤ E는 D를 근로자로 사용하기 위해 A의 동의서와 고용 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 인허증을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241110]

10.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 기업의 직원 갑은 잦은 지각과 무단결근 등 불성실한 근무 태도를 이유로 사용자 을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에 갑은 정당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고일 뿐 아니라 자신이 소속된 △△ 기업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 참가를 이유로 자신을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다. 다음은 갑의 구제 신청에 대한 ○○ 지방 노동 위원회의 판정 요지이다.

- 갑의 불성실한 근무 태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만 해고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음.
- 갑에 대한 해고는 쟁의 행위 참가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지방 노동 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한 갑과 을은 적절한 절차를 거쳐 중앙 노동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 ① 갑과 달리 △△ 기업 노동조합은 ○○ 지방 노동 위원회의 부당 노동 행위 구제 절차에서 신청인이 될 수 없다.
- ② ○○ 지방 노동 위원회는 갑에 대한 해고가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③ 중앙 노동 위원회가 ○○ 지방 노동 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한다면, 갑에 대한 해고가 부당 해고에 해당하나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것이다.
- ④ 중앙 노동 위원회가 갑의 재심 신청을 기각한다면, 갑은 재심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⑤ 중앙 노동 위원회가 을의 재심 신청을 인용하더라도, 갑은 을을 상대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40910]

가족으로부터
드라마·15세 이상

등장인물 소개

갑 남자, 현재 16세 고등학생
사실혼 관계인 A(남)와 B(여) 사이에서 태어나 A와 B의 사실혼 관계 해소 후 B에 의해 양육되었다. B가 C와 법률혼을 한 이후에는 B, C와 함께 살고 있으며, 갑과 B 사이에만 친자 관계가 있다. 방학을 맞이하여 2개월 동안 사장 D가 운영하는 ○○ 대형 마트에서 일하려고 한다.

을 여자, 현재 22세 공무원
법률혼 관계인 C와 D 사이에서 태어나 C가 D와 이혼을 한 이후 C에 의해 양육되었다. C와 D는 법원에 이혼 의사의 확인을 신청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혼 의사를 확인받아 이혼하였는데, 을이 D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이 이혼의 사유였다. 1년 전 B와 C가 법률혼을 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B에게 양자로 입양되었다.

이번 회 줄거리

16세인 갑은 B의 동의를 얻어 '근무일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 소정 근로 시간은 13시부터 21시(휴게 시간: 18시~19시), 업무 내용은 ○○ 대형 마트 내 상품 정리'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 계약을 D와 체결하였다. 며칠 후 주휴일인 월요일에 쉬고 있던 갑은 D로부터 매 근무일 1시간씩 추가로 근로할 것을 제안받고 B와 의논하려 가던 중 갑작스런 B의 사고 소식을 듣게 된다.

15. 위 자료에 나타난 갑의 근로 계약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A가 갑의 근로 계약 체결을 대리하지 않았으므로 근로 기준법에 위배된다.

ㄴ. D는 갑과 합의한 '소정 근로 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ㄷ. D는 B의 동의서와 갑의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 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모두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ㄹ. D가 갑의 근로 시간을 매 근무일 22시까지 연장하는 것은 갑과의 합의가 있어도 근로 기준법에 위배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40615]

9. (가)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근로 권익 센터 +

법률 상담 신청 ~

Q 저는 상시 근로자 20명이 고용된 대형 마트의 사장입니다. 갑(남), 을(남)은 중학교를 졸업한 미성년자인데 이들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고용 노동부에 문의했더니, 갑과 을은 고용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취직 인허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고, 갑과 달리 을의 경우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 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제 사업장에 갖추어 두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이후 갑, 을과 각각 근로 조건에 합의한 뒤 작성하여 각자에게 교부한 근로 계약서 내용의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 계약 기간은 3개월, 업무 내용은 마트 내 물품 정리, 소정 근로 시간은 9시부터 17시(휴게 시간: 12시~13시), 임금은 시간급으로 법정 최저 임금으로 하고, 근무일은 매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입니다. 근로 기준법상 이 계약에 관한 법적 조건을 요청합니다.

(가)

- ① 갑과 주휴일에 대해 합의했다라도 주휴일을 서면으로 명시해 주어야 합니다.
- ② 갑이 일요일에 근로 계약 내용대로 근무할 경우 갑에게 통상 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③ 을의 근로 시간을 매 근무일 2시간씩 연장하는 것은 을과의 합의가 있어도 근로 기준법에 위배됩니다.
- ④ 갑과 을에게 적용되는 법정 근로 시간은 동일합니다.
- ⑤ 갑과 을 각각에 대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231109]

15.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A 식품 회사 직원인 갑은 상품 절취, 위생 관련 복무 규정 위반을 이유로 사용자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에 갑은 부당 해고를 이유로 ○○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갑의 구제 신청은 기각되었다. 한편, A 식품 회사 직원인 을은 A 식품 회사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사용자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에 A 식품 회사 노동조합은 을에 대한 해고가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으며, A 식품 회사 노동조합의 구제 신청은 인용되었다. ○○ 지방 노동 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한 갑과 사용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중앙 노동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갑과 사용자의 재심 신청은 모두 기각되었다.

- ① ○○ 지방 노동 위원회는 갑에 대한 해고가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 ② A 식품 회사 노동조합과 달리 을은 부당 노동 행위를 이유로 ○○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없다.
- ③ 중앙 노동 위원회는 을에 대한 해고가 부당 해고에 해당하나 부당 노동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 ④ 을에 대한 해고가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하든지 여부에 대한 ○○ 지방 노동 위원회와 중앙 노동 위원회의 판정은 동일하다.
- ⑤ 중앙 노동 위원회가 갑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였으므로 갑은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

[230915]

15. (가)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3점]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민원 마당

빠른 인터넷 상담

질문

저(갑)는 15세인데 얼마 전 중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2개월간 ○○ 대형 마트에서 일하기로 하고 사장 을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무일 중 하루인 토요일에 1시간 추가로 근로하는 것에 대하여 현재 을과 합의 중에 있습니다. 저는 친권자인 부모님께 근로 계약 내용에 대해 말씀드려 동의서를 받은 후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 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함께 을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을에게서 교부받은 근로 계약서 내용 일부를 보내드립니다. 저의 근로 계약에 대한 법적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 업무 내용: 마트 내 상품 정리

○ 소정 근로 시간: 11시~18시 (휴게 시간: 13시~14시)

○ 근무일: 매주 수요일~일요일 / 휴일: 매주 월, 화요일

답변

(가)

- ① 갑의 친권자가 갑의 근로 계약 체결을 대리하지 않았으므로 근로 기준법에 위배됩니다.
- ② 을이 갑을 근로자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고용 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 인허증이 필요합니다.
- ③ 갑은 연소 근로자로 일요일 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 근무일을 변경해야 합니다.
- ④ 갑은 친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을에게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⑤ 갑이 을과 합의하에 토요일에 1시간 추가 근로를 하더라도 근로 기준법상 1일 법정 근로 시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230615]

20.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다음은 갑, 을, 병이 각각 대형 마트인 ○○ 마트 사장 정과 체결한 근로 계약의 공통된 내용 중 일부이다. 단, 근로 계약 체결 시 연장 근로에 대해 어떠한 합의도 없었다.

- 1. 근로 계약 기간: 2021년 7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 2. 근무 장소: ○○ 마트
- 3. 업무의 내용: ○○ 마트 내 상품 정리
- 4. 소정 근로 시간: 9시~18시(휴게 시간: 12시~13시)
- 5. 근무일 / 휴일: 매주 월요일~금요일 근무, 주휴일 매주 토, 일요일
- 6. 임금
 - 시간급: 시간당 9,500원
 - 임금 지급일: 매월 25일
 - 지급 방법: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근로자 명의 예금 통장에 입금(✓)

* 2021년 법정 최저 임금은 시간당 8,720원임.

** 갑, 을, 병은 모두 중학교를 졸업하였음.

표는 각 질문으로 갑, 을, 병을 구분한 후, '예', '아니요' 중 같은 답변에 해당하는 사람끼리 묶은 것이다.

[질문1] 민법상 미성년자에 해당합니까?	을 갑 병
[질문2] 취직 인허증이 필요합니까?	을 갑 병
[질문3] 근로 시간이 원칙적으로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까?	을 갑 병

<보 기>

- ㄱ. 을의 근로 계약에는 근로 기준법을 위반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ㄴ. 갑뿐만 아니라 을의 근로 계약도 친권자나 후견인이 대리할 수 없다.
- ㄷ. 근로 기준법상 갑과 정이 연장 근로에 합의하더라도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ㄹ. 병이 부모의 동의 없이 정과 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병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221120]

16.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A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버스를 운전하는 갑은 교통사고, 차내 흡연 및 신호 위반 등 운행 질서 위반을 이유로 징계 해고 처분을 받았다. 갑은 ○○ 지방 노동 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해 중앙 노동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 노동 위원회는 “사용자의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라며 갑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불복한 갑은 중앙 노동 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

<보 기>

- ㄱ. 갑이 활용한 구제 신청 절차에서 노동조합은 신청인이 될 수 없다.
- ㄴ. 중앙 노동 위원회는 갑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갑의 근로 3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았다.
- ㄷ. 갑이 제기한 소송은 행정 소송이다.
- ㄹ. 갑이 제기한 소송은 노동 위원회의 재심 절차를 거쳤으므로 갑은 상소할 수 없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220916]

- 72 -

10.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고등학생 갑과 을은 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하고, ○○ 백화점 사장 병과 각각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은 갑과 을이 병과 체결한 근로 계약의 공통된 내용 중 일부이다.

- 근로 기간: 2021년 1월 6일~2021년 2월 28일
- 근로 시간: 10시~18시(휴게 시간: 13시~14시)
- 근무일: 매주 수요일~일요일 / 휴일: 매주 월, 화요일
- 임금: 시간당 8,000원

* 2021년 법정 최저 임금은 시간당 8,720원임.

표는 갑과 을이 병과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 요구되는 서류들을 비교한 것이다.

(○: 요구됨, ×: 요구되지 않음)

구분	갑	을
취직 인허증	×	×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	×	○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 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	○

- ① 을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을의 근로 계약을 대리할 수 있다.
- ② 을은 갑과 달리 주말 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 근무일을 변경해야 한다.
- ③ 근로 계약이 이미 체결되었으므로 갑은 병에게 법정 최저 임금을 요구할 수 없다.
- ④ 을과 병이 근무일의 연장 근로에 대해 추가적으로 합의하더라도 병은 을을 1일 2시간씩 더 근로하게 할 수 없다.
- ⑤ 갑은 을과 달리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 없이 병에게 단독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220610]

10. (가)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수업 자료 과제 게시판 묻고 답하기 정치와 법 E-class

○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의견을 작성해 봅시다.

같은 중학교를 졸업한 갑(남, 18세)과 을(남, 16세)은 1개월 동안 ◇◇ 대형 매장에서 물품 판매를 업무로, 주 5일(월~금)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 계약을 대표 병과 각각 체결함. 법정 최저 임금은 시간당 8,590원이며, 두 사람의 주요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갑과 을의 임금은 각각 시간당 10,000원, 근로 시간은 갑이 12시~21시(휴게 시간: 17시~18시), 을은 10시~18시(휴게 시간: 13시~14시)임.

↳ 학생1: 갑은 을과 달리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학생2: 을의 계약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학생3: (가)

↳ 교 사: 근로 기준법에 따라 옳은 의견을 제시한 학생은 2명이네요.

<보 기>

ㄱ. 갑이 계약대로 근무할 경우 갑의 1일 임금은 90,000원입니다.

ㄴ. 을의 연장 근로는 을과 병 사이의 합의가 있어도 1일 1시간, 1주일 5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ㄷ. 갑과 달리 을에게는 야간 또는 휴일 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ㄹ. 병은 갑과 을의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 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11110]

17.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 의류 회사 노동조합은 ㉠ 단체 교섭권을 행사하여 근로 조건에 관해 사용자 측과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적법하게 쟁의 행위를 하였다. 다음은 최근 사용자에게 의해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된 갑, 을, 병의 상황을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구분한 것이다.

질문	갑	을	병
적법한 쟁의 행위를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예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정 소송을 제기하였습니까?	예	아니요	아니요
지방 노동 위원회의 구제 절차를 거쳤습니까?	예	예	예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였습니까?	예	예	아니요

* 갑, 을, 병 모두 □□ 의류 회사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었음.

- ①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을 가진다.
- ② 갑의 근로관계 종료 사안은 중앙 노동 위원회의 구제 절차를 거쳤다.
- ③ 갑, 을은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지방 노동 위원회의 구제 절차를 거쳤다.
- ④ 갑, 을은 병과 달리 사용자에게 의해 정당한 근로 3권 행사가 침해되었다.
- ⑤ 갑, 을, 병의 해고에 대해 □□ 의류 회사 노동조합도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210917]

15.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기업에서 근무하던 갑은 특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는 이유로 을(○○ 기업 사장)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 이에 갑은 해고 사유가 부당할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간부인 자신을 해고하여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다. △△ 지방 노동 위원회는 갑의 비위 행위에 비해 징계의 정도가 과하여 갑의 해고는 부당 해고임을 인정하였으나, 부당 노동 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이에 불복한 갑과 을은 각각 중앙 노동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다. 이에 중앙 노동 위원회는 갑의 재심 청구를 인용하고, 을의 재심 청구는 기각하였다.

<보 기>

ㄱ. 갑과 달리 갑이 소속된 노동조합은 부당 노동 행위를 이유로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없다.

ㄴ. 갑은 △△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는 것과 별도로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ㄷ. 을의 부당 노동 행위 여부에 대해 △△ 지방 노동 위원회와 중앙 노동 위원회는 동일한 판정을 하였다.

ㄹ. 을은 중앙 노동 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 노동 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10615]

(20)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11.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집단 안보는 A에 기반한 평화 유지 방법이다. 이는 평화 질서를 파괴하는 가상의 적을 상대로 다수의 국가가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힘으로써 전쟁 발발을 막으려는 전략이다. 반면, B는 동맹 등을 활용한 균형 전략을 통해 특정한 세력이 압도적으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여 평화 질서를 유지하려는 방법을 추구한다.

- ① A는 국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개별 국가들로 이루어진 국제 사회에서 전쟁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 ② B는 국제 사회에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앙 정부가 존재한다고 본다.
- ③ A와 달리 B는 국제 사회에서 국가 간의 물리적 충돌을 보편적 선이나 윤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 ④ B와 달리 A는 국제 사회의 평화 유지를 위한 국제기구의 역할을 강조한다.
- ⑤ A와 B 모두 국제 사회 분쟁 해결을 위해 외교적 협력보다 군사력 강화를 강조한다.

[260611]

19.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제 정치 분석의 핵심 단위를 주권 국가에 두고 있는 A는 국제 사회에서 개별 국가의 최우선 목표가 자국 이익 극대화에 있고, 국제기구는 주권 국가의 행위를 억제할 수 없다고 본다. 반면 국제 관계를 인간의 이성과 도덕이 작동하는 사회로 파악하는 B는 국제기구가 국가 간 갈등의 위험성을 낮추고 평화적이고 협력적인 국제 사회 형성에 건설적인 역할을 한다고 본다.

- ① A는 국가 간 경쟁보다 상호 의존적 관계를 중시한다.
- ② B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 사회의 현실을 강조한다.
- ③ A와 달리 B는 개별 국가의 이익과 국제 사회 전체의 이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본다.
- ④ B와 달리 A는 특정 국가의 침략 행위에 모든 국가들이 공동으로 대응함으로써 국제 분쟁이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 ⑤ A와 B 모두 국제 사회의 일반적 관행과 법적 확신에 기초한 국제 규범을 통해 국제 사회의 무정부 상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251119]

13.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인간의 이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개별 국가 간 이익의 조화가 가능하다고 보는 A는 국가 간 상호 의존을 통해 국제 사회의 협력이 달성될 수 있다고 본다. 국가가 자국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행위자라고 전제하는 B는 개별 국가의 이익 추구 행위로 인한 국가 간 상호 불신 때문에 국제 사회의 협력이 달성되기 어렵다고 본다.

- ① A는 국제 사회에 강제력 있는 중앙 정부가 존재한다고 본다.
- ② A는 모든 국가들의 상호 불가침 약속과 그 약속을 위반한 국가에 대한 국제 사회의 집단적 대응을 강조한다.
- ③ B는 국제 관계에서 국제기구의 역할을 중시한다.
- ④ B는 국가가 도덕적 규범에 따라 외교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본다.
- ⑤ A와 B 모두 국제 사회에서 국가들이 지켜야 할 보편적 선(善)이 존재한다고 본다.

[250913]

19.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국이 자국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군비 지출을 늘리자 이웃 국가인 B국도 군비 지출을 늘려 군비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B국은 A국의 군사력 증강이 자국을 침략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해야 합니다. 자국의 안보를 스스로 지켜야 하는 국제 사회에서 A국과 힘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B국이 군비 지출을 늘리는 것은 당연한 대응입니다.



B국이 군비 지출을 늘리는 것은 A국의 의도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국제기구가 나서서 A국의 군사력 증강이 B국에 대한 침략이 아닌 자위의 목적임을 확인하여 B국의 의심을 해소하고, A국과 B국이 군비 경쟁을 멈추고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① 갑의 관점은 개별 국가의 이익과 국제 사회 전체의 이익이 조화될 수 있다고 본다.
- ② 을의 관점은 국제 사회의 분쟁 해결을 위해 외교적 협상보다 군사적 수단을 중요시한다.
- ③ 갑과 달리 을의 관점은 국제 사회에서 국가 간 경쟁보다 상호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국제 규범의 역할을 강조한다.
- ④ 을과 달리 갑의 관점은 국제 관계를 보편적 선(善)과 윤리의 관점으로 설명한다.
- ⑤ 갑과 을의 관점 모두 국제 사회의 무정부 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강제력 있는 중앙 정부가 존재한다고 본다.

[250619]

19.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는 어느 국가도 압도적인 힘을 갖지 못하도록 상대국을 견제하여 힘의 균형 상태를 이루어야 쉽게 상대국이 공격하지 못하기 때문에 평화가 유지된다고 본다. 반면, B는 한 국가가 전쟁을 도발한 경우, 이를 다른 모든 국가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국제 연맹과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 집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침략국을 응징해야 평화가 유지된다고 본다.

- ① A는 국제 사회에 보편적 선(善)과 사회적 공동체 의식이 존재한다고 본다.
- ② B는 국가 간 갈등을 해결하고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국제 규범의 역할을 강조한다.
- ③ A와 달리 B는 국가가 스스로 국력을 증가시켜 상대적 힘의 우위를 확보해야 생존할 수 있다고 본다.
- ④ B와 달리 A는 국가 간 공동의 이익 추구를 통해 개별 국가의 이익과 국제 사회 전체의 이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본다.
- ⑤ A와 B 모두 배타적 국익 추구로 인한 국제 사회의 갈등을 강제력 있는 중앙 정부가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241119]

18.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국제 사회에서 국가는 생존과 안보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으며, 국제 사회는 전쟁의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는 정글과 같다. 이러한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해 개별 국가는 자신을 스스로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을: 국제 사회에서 국가는 항상 생존과 안보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국가는 공동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는 합리성을 가지고 있으며, 국제 사회를 정글이 아니라 평화를 가꿀 수 있는 정원으로 만들 수 있다.

- ① 갑의 관점은 개별 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국제 규범으로 억제할 수 있다고 본다.
- ② 을의 관점은 국제 분쟁의 해결을 위해 국가 간 협력과 공동 대응을 강조한다.
- ③ 갑과 달리 을의 관점은 국제 관계를 설명할 때 힘의 논리에 초점을 맞춘다.
- ④ 을과 달리 갑의 관점은 국제 평화의 실현을 위해 국제기구의 역할을 중요시한다.
- ⑤ 갑과 을의 관점 모두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강제력 있는 중앙 정부가 국제 사회에 존재한다고 본다.

[240918]

18.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1차 세계 대전의 종식 후 국제 연맹 설립과 같은 평화 유지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차 세계 대전이 발발한 것은 세계 평화가 집단 안보 체제에 의해 보장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갈등적 국제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동맹으로 맺어진 세력 대(對) 세력 간에 힘의 균형이 요구됩니다.
을: 2차 세계 대전의 교훈을 바탕으로 창설된 국제 연합은 평화 유지, 군비 축소, 국제 협력 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세계 평화 및 안전 유지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 연맹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한 집단 안보 체제가 전쟁을 억제하고 협력적 국제 관계를 실현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① 갑의 관점은 국가 간 권력 관계보다 상호 협력 관계를 중시한다.
- ② 을의 관점은 세계 평화의 실현 방안으로 국제기구의 역할을 강조한다.
- ③ 갑과 달리 을의 관점은 힘의 불균형 상태에서 전쟁이 발발한다고 본다.
- ④ 을과 달리 갑의 관점은 개별 국가의 이익과 국제 사회 전체의 이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본다.
- ⑤ 갑과 을의 관점 모두 국제 사회 분쟁 해결을 위해 외교적 협력 보다 군사력 강화를 강조한다.

[240618]

16.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제 관계에서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 하므로 국가 간 갈등의 해소와 이해의 조화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제기구를 통한 제재의 실효성이 낮고 국제적 협력도 기대하기 힘듭니다.
국제 관계에서는 국가 간 상충되는 이해의 조화가 가능하므로 다양한 행위 주체들이 보편적 가치에 기반하여 공동의 규칙을 수립하고 준수함으로써 국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① 갑의 관점은 국가 간의 관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힘의 배분 양상을 강조한다.
- ② 갑의 관점은 모든 국가들의 상호 불가침 약속과 그 약속 위반 국가에 대한 국제 사회의 집단적 대응을 강조한다.
- ③ 을의 관점은 국제 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초국가적 행위 주체의 역할을 간과한다.
- ④ 갑의 관점과 달리 을의 관점은 국가가 타국과의 경쟁 속에서 자국의 이익을 배타적으로 추구한다고 본다.
- ⑤ 을의 관점과 달리 갑의 관점은 국가들이 국제 규범을 통해 국제 사회의 무정부 상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231116]

17.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국제 사회는 무정부 상태이며, 각 국가들은 자신의 보존을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 힘의 불균형 상태에서 전쟁이 유발되므로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힘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을: 국제 사회는 국제기구와 국제법 등을 통해 국가 간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 간 합의를 통해 공동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 ① 갑의 관점은 국가 간 권력 관계보다 협력 관계가 중요하다고 본다.
- ② 을의 관점은 국제 사회에서 보편적인 선(善)을 추구하는 국제 규범의 역할을 강조한다.
- ③ 갑과 달리 을의 관점은 각국이 자국의 이익을 배타적으로 추구한다고 본다.
- ④ 을과 달리 갑의 관점은 국제 사회에서 국가보다 초국가적 행위 주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 ⑤ 갑, 을의 관점 모두 국제 사회 분쟁 해결을 위해 외교적 설득보다 군사력 강화를 강조한다.

[230917]

12.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A는 국제 관계를 긴장과 갈등의 상태로 본다. 이에 따르면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만을 배타적으로 추구하므로 국제 사회에서 국가 간 불신과 갈등은 피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국가 간 관계는 힘의 논리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반면 B는 다양한 제도를 통하여 국제 관계에서 협력과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본다. 즉, 국가들은 이기적 욕망을 억제하고 국제 사회에서 공동의 이익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 ① A는 국제 사회에서 국가 간 갈등을 보편적 선이나 윤리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 ② B는 국제기구와 같은 국제 협력 체제를 통해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본다.
- ③ A와 달리 B는 국제 관계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본다.
- ④ B와 달리 A는 국제 협약과 국제 관습법을 통해 국가 간 분쟁 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
- ⑤ A, B 모두 국제 사회에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앙 정부가 존재한다고 본다.

[230612]

19.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국가들은 협력에서 파생된 이익이 상대방에게 더 많이 돌아가 자신의 안보를 위협하지 않을까 우려하기 때문에 국제 사회에서는 국가 간 협력이 일어나기 어렵다.
 을: 국가들은 국제 사회에 존재하는 제도와 규범을 통해 상대 국가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예측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공동의 이익을 위한 국가 간 협력이 일어난다.

- ① 갑의 관점은 개별 국가의 이익과 국제 사회 전체의 이익이 조화를 이룬다고 본다.
- ② 갑의 관점은 특정 국가의 침략 행위에 모든 국가들이 공동으로 대응함으로써 국제 평화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
- ③ 을의 관점은 국가 간 힘의 균형을 통한 안보 추구하고 전쟁 억제가 가능하다고 본다.
- ④ 을의 관점은 국제 사회의 문제 해결에 있어 국제기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다.
- ⑤ 갑, 을의 관점은 모두 국가가 도덕적 규범에 따라 외교 정책을 수립한다고 본다.

[221119]

15. 다음 자료의 (가)에 들어갈 옳은 진술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교사: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에는 현실주의와 자유주의가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토끼를 잡은 사람의 행위는 그중 하나의 관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관점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다섯 명의 배고픈 사람들이 숲속에서 우연히 만났다. 이들은 함께 사슴 한 마리를 사냥하기로 했다. 사슴 한 마리를 사냥하면 모두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다. 이들은 사슴 한 마리를 잡기 위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포위망을 구성했다. 그때 한 사람이 손을 뻗으면 확실히 잡을 수 있는 곳을 지나가는 토끼 한 마리를 발견했다. 토끼 한 마리면 그 사람의 배고픔은 해결할 수 있다. 그 사람은 사냥 성공이 불확실한 사슴을 포기하고 토끼를 잡기 위해 포위망을 이탈하여 토끼를 잡는 데 성공했다. 그때 이탈한 사람의 빈 공간으로 사슴은 포위망을 뚫고 도망을 갔다. 토끼를 잡은 한 사람은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었지만, 그 사람의 이탈로 사슴 사냥에 실패한 네 사람은 배고픔을 해결할 수 없었다.

학생: _____ (가)

<보 기>
 ㄱ. 개별 국가의 이익과 국제 사회 전체의 이익이 조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ㄴ. 국제 관계에서는 도덕적 규범보다 힘의 논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ㄷ. 국제법과 국제기구가 국가 간 갈등을 해결하고 국제 평화를 보장한다고 봅니다.
 ㄹ. 국제 사회는 무정부 상태이므로 국가 스스로 자국의 안보를 책임져야 한다고 봅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20915]

9. 다음 자료는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가), (나)를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와 B는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이다.)

(가)	(나)
■ 주요 입장 국제 사회는 국제기구나 국제법을 통해 평화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음.	■ 주요 입장 국제 사회는 힘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며 국가는 자국의 안보와 이익을 우선시함.
■ 사례 ○○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국제 연합의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된 A에서는 올림픽 기간 중 일체의 적대 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올림픽 휴전 결의안을 채택함.	■ 사례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된 B에서는 □□국의 화학 무기 공격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신속히 채택하려 했지만 상임 이사국인 △△국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됨.

- ① A는 주권 평등의 원칙이 적용되는 국제 연합의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이다.
- ② B에서 △△국은 실질 사항을 제외한 안전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 A는 B와 달리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관을 선출하는 권한을 가진다.
- ④ (가)는 (나)와 달리 국제 사회가 무정부 상태라고 본다.
- ⑤ (나)는 (가)와 달리 집단 안보 체제를 통해 국제 평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본다.

[220609]

15.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지구 온난화는 국제 사회의 상호 협력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실 가스 감축을 위한 공동의 의무와 이행 방안을 강화하는 새로운 국제 환경 협약의 도출이 필요합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가 급속도로 진행 중입니다. 이에 대해 국제 사회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강대국들이 자국의 산업 보호와 협약의 불공정성을 명분으로 국제 협약에서 탈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어떤 환경 협약도 실효성이 낮고, 새로운 국제 협약의 도출도 불가능합니다.

< 보 기 >

ㄱ. 갑의 관점은 도덕적 규범에 따른 외교 정책 수립이 가능하다고 본다.

ㄴ. 국제 연합 안전 보장 이사회의 상임 이사국이 거부권을 갖는 것은 을의 관점으로 설명될 수 있다.

ㄷ. 갑의 관점은 을과 달리 자국의 안보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본다.

ㄹ. 을의 관점은 갑과 달리 국가 간 힘의 균형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전쟁 억제가 가능하다고 본다.

- | | | |
|-----------|-----------|--------|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 ④ ㄱ, ㄴ, ㄹ | ⑤ ㄱ, ㄷ, ㄹ | |

[210915]

18.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가 간 관계는 힘의 우위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힘을 길러 자국의 안보를 지키려 하며, 자국의 이익을 배타적으로 추구합니다.

국제기구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서 국가 간 평화는 실현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가 서로 협력함으로써 공동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 ① 갑의 관점은 보편적 선이나 윤리의 관점에서 국제 관계를 설명한다.
- ② 갑의 관점은 국제법을 국제 사회의 분쟁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본다.
- ③ 을의 관점은 집단 안보 체제를 국제 평화 실현의 방안으로 본다.
- ④ 을의 관점은 세력 간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전략으로 국제 질서 유지가 가능하다고 본다.
- ⑤ 을의 관점과 달리 갑의 관점은 국제 사회에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앙 정부가 존재한다고 본다.

[211118]

(21) 국제법의 법원(法源)

20. 국제법의 법원(法源)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약속은 제3자를 이롭게도 해롭게도 하지 않는다.’는 법언이 말해 주듯이, A는 원칙적으로 당사자만을 구속하므로 분명한 동의를 없는 한 당사자가 아닌 제3국을 구속할 수 없다. ○○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의하면 A의 당사국이 제3국에 대해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A의 규정이 있어야 하고 제3국이 이를 서면으로 수락해야 한다.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제3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위 협약에 따르면, A의 규정이 법적 확신이 부여된 일반적 관행인 B로서 제3국을 구속하게 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 ①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체결·비준한 A가 헌법보다 우위에 있지 않음을 인정한다.
- ② 국제기구도 국제법 주체로 인정되더라도 A의 체결 당사자가 될 수 없다.
- ③ B를 재판 준칙으로 하는 국제 사법 재판소의 판결은 원칙적으로 국제 사회의 모든 국가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 ④ B는 A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보충적 법원(法源)으로 법적 결정의 보조 수단이다.
- ⑤ A의 규정이 B로 인정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제3국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B로서 제3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

[250920]

19. 국제법의 법원(法源)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는 국제 사회에서 일관되게 지속된 관행이 축적되고 이에 대한 법적 확신이 형성되어 성립된다. A의 성립에 있어 법적 확신이 필수적 요건이지만, 이를 밝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에 국제법 주체 상호 간의 명시적 합의인 B의 체결을 위한 교섭 과정에서 나타난 개별 국가의 입장이나 국제기구가 채택한 결의 내용 등이 법적 확신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 ① 우리나라에서 A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에 해당한다.
- ② 국제법 주체로 인정되는 개인은 B의 체결 당사자가 될 수 있다.
- ③ B를 위반한 국제기구라도 해당 국제기구의 동의를 얻어야 국제 사법 재판소가 재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A와 달리 B는 원칙적으로 국제 사회에서 모든 국가에 대해 보편적 효력을 가진다.
- ⑤ A와 B 모두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의 비준이 있어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240919]

19. 다음 자료는 서술형 평가 문항 및 답안에 대한 채점 결과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조약, 국제 관습법 중 하나임.)

[문항] A와 구별되는 B의 특징을 3가지만 서술하시오. (각 서술별로 채점하며, 옳은 서술 1개당 1점, 총 3점임.)	
[답안] ○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체결·비준권을 가진다. ○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 준거가 될 수 있다. ○ (가)	
채점 결과	2 점

- ① A는 명시적 입법 절차를 거쳐 성문화된 형식으로만 존재한다.
- ② 국내 문제 불간섭은 A가 아닌 B에 해당한다.
- ③ A와 달리 B는 국가를 초월한 입법 기관에 의해 제정된다.
- ④ B와 달리 A는 원칙적으로 국제 사회에서 포괄적 구속력을 가진다.
- ⑤ (가)에 ‘우리나라에서는 헌법과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가 들어갈 수 있다.

[230919]

19. 그림의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3점]

〈서술형 평가〉	
㉔ 국제법의 법원(法源) 중 하나인 A의 특징을 3가지 서술하시오. (각 서술별로 채점하며, 옳은 서술 1개당 1점, 총 3점)	
답안	점수
1. 우리나라에서는 국회가 비준권을 가진다. 2. 국제 사회의 반복된 관행이 법적 확신을 얻어 효력을 가지게 된 것이다. 3. (가)	2점

- ① 국제기구도 체결 주체가 될 수 있다.
- ② 우리나라에서 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 ③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 준거가 될 수 있다.
- ④ 명시적 입법 절차를 거쳐 성문화된 형식으로 존재한다.
- ⑤ 체결에 참여한 행위 주체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지닌다.

[220619]

18.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신문 ○○○○년 ○○월 ○○일
사증(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인 사전에 전자 여행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 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자 여행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우리나라와 ㉡사증 면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라 면제 대상이 되는 사람, 다른 법률에 따라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 등이다.

- ① ㉠은 강제적으로 집행할 기관이 없다.
- ② 국제 사회에서 ㉠은 포괄적 구속력을 가진다.
- ③ 우리나라에서 ㉡에 대한 체결권은 대통령이 가진다.
- ④ 우리나라에서 ㉡은 헌법과 동등한 지위와 효력을 가진다.
- ⑤ ㉠, ㉡은 모두 성문화된 형식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210618]

(22)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19.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국제 연합의 개혁 방향에 대한 논의는 주로 대표성과 실효성의 강화로 요약된다. 그 주요 내용은 창립 이후 줄곧 상임 이사국에게만 거부권이 부여되고 있는 A에 각 대륙의 대표 국가가 포함되도록 확대 개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제 연합 회원국 모두가 참여하는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인 B는 국제 연합 운영에 있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위상 제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사법 기관인 C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때 해당 국가에 이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실효적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높고 있다.

- ① A에서 절차 사항을 포함한 모든 사항에 대한 결정은 상임 이사국 전체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
- ② B는 주권 평등 원칙에 따른 표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 ③ C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국제 사회에서 발생하는 개인 간의 분쟁에 대해 관할권을 가진다.
- ④ A의 결의안과 달리 B의 결의안은 회원국 전체의 의지가 반영 되어 강제력이 있다.
- ⑤ B와 달리 A는 C의 재판관 선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260619]

18.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신문

△△△△년 △△월 △△일

○○지역에서 발생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A의 결의안 채택이 상임 이사국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거부권을 행사한 해당 상임 이사국의 대표가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된 의결 기관인 B에 출석하여 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결의안이 B에서 채택되었다. 한편, A에서의 거부권 남용으로 야기되는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주요 사법 기관인 C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대두되고 있다.

- ① A를 구성하는 15개 이사국의 임기는 동일하다.
- ② A에서 절차 사항을 포함한 모든 사항에 대한 결정은 상임 이사국 전체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
- ③ B의 결의안은 회원국의 의지가 반영되어 강제력이 있다.
- ④ C가 관할하는 법적 분쟁에는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도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다.
- ⑤ C를 구성하는 15인의 재판관에 대한 선출 권한은 A와 B가 가진다.

[251118]

20.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A, B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국은 을국과의 전쟁에서 집단 학살을 막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요 사법 기관인 A에 제소되었다. 이에 A는 '집단 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갑국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고, 자국 군인들이 전쟁 지역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한편,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관한 일차적 책임을 지는 B는 해당 전쟁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즉각 휴전과 인질 석방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그동안 B는 병국의 거부권 행사로 휴전을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지 못했었다.

< 보 기 >

- ㄱ. A는 국가와 개인 간의 국제법상 분쟁에 대한 재판 관할권을 가진다.
- ㄴ. A는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당사국을 직접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 ㄷ. 국제 연합의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B의 의결은 권고적 효력을 가진다.
- ㄹ. B는 A의 재판관 선출권을 가진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50620]

18.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임.) [3점]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기후 변화 협약'의 체결 등 다양한 노력이 국제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된 의결 기관인 A는 기후 변화 대응에 있어 국가의 구체적 의무에 관한 권고적 의견을 줄 것을 주요 사법 기관인 B에 요청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한편, 평화와 안전 유지에 관한 일차적 책임을 부여받은 C는 기후 변화로 인한 자원 배분의 갈등이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였으나, C의 상임 이사국 중 한 국가가 거부권을 행사하여 무산되었다.

- ① B에 제소된 사건의 당사자에는 국가와 개인이 모두 포함된다.
- ② B는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당사국을 직접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 ③ C의 상임 이사국은 대륙별 안배를 통해 A에서 선출되고 5개국으로 구성된다.
- ④ C와 달리 A는 B의 재판관 선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 ⑤ ㉠과 같은 국제법의 법원(法源)이 우리나라에서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국회가 이를 비준해야 한다.

[241118]

19.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국제 연합의 최고 의결 기관인 A에서 갑국의 을국 침공과 관련하여 갑국에 배상 책임을 물리는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이에 갑국은 자국이 상임 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B를 거치지 않고 A에 바로 결의안을 제출한 행위는 일부 국가들이 A를 사법 기관인 C처럼 활용하려는 의도를 반영한 결과라고 반발하였다.

- ① B의 모든 이사국은 동일한 임기를 지닌다.
- ② A와 달리 B는 주권 평등 원칙에 따른 표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 ③ B와 달리 A는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해 군사적 개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④ C의 재판관 선출권은 A와 B 모두에 있다.
- ⑤ A와 달리 C는 B의 이사국을 선출할 수 있다.

[240619]

17.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국제 연합 헌장에 따르면 A가 국제 사회의 분쟁 또는 사태와 관련하여 헌장에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B는 A의 요청이 없이는 어떤 권고도 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A가 논의를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된 B가 독자적으로 권고를 한 사례가 있다. 이에 대해 사법 기관 C는 A가 주로 국제 평화와 안전에 관한 문제에 집중하는 반면 B는 인도주의적·사회적 측면까지 포함하는 폭넓은 고려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B의 권고는 현장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C는 15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A 및 B에서 선출된다.

- ① B에서 절차 사항을 제외한 모든 사항은 상임 이사국의 동의 투표를 포함한 9개 이사국 이상의 찬성 투표로 결정한다.
- ② 국제 사회의 일반적 관행이 법적 확신을 얻은 국제 규범이라도 성문화가 되어야만 C의 재판 규범이 될 수 있다.
- ③ 국제 사회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에 이해관계가 있더라도 개인은 C의 재판에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 ④ A와 달리 B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관한 일차적 책임을 지며 군사적 제재 조치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⑤ B와 달리 A에서는 주권 평등의 원칙에 따라 표결 시 각 국가가 1표씩 투표권을 행사한다.

[231117]

18.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A의 구성
 - 각기 다른 국적을 가진 15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됨.
 - 15인의 재판관은 B 및 C에서 선출되며 양 기관 모두에서 절대 다수표를 얻어야 함.
- B의 구성
 - 5개의 상임 이사국 및 10개의 비상임 이사국으로 구성됨.
 - 임기가 2년인 비상임 이사국은 지리적 배분 등을 고려하여 C에서 매년 5개국이 선출되며, 연임은 불가함.

- ① A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국제 사회에서 발생하는 개인 간의 분쟁에 대해 관할권을 가진다.
- ② B의 상임 이사국은 실질 사항이 아닌 절차 사항에 대하여 거부권을 가진다.
- ③ C는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이다.
- ④ B와 달리 C는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해 군사적 개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⑤ C와 달리 B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는 주권 평등의 원칙이 적용된다.

[230618]

17.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모두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이다.) [3점]

국제 형사 재판소는 1998년 120개국의 찬성으로 채택되고, 2002년 발효된 ① ‘국제 형사 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에 근거하여 집단 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등을 저지른 개인을 형사 처벌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국제 형사 재판소는 국제 연합의 산하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 연합의 주요 사법 기관인 A와는 구분된다. 국제 연합에서 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일차적 책임을 부여받은 기관인 B는 국제 형사 재판소에 관련 상황을 회부할 수 있다. 현재 국제 연합의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된 의결 기관인 C는 갑국의 대규모 인권 침해 상황을 B가 국제 형사 재판소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 ① ①과 같은 국제법의 법원(法源)은 국가 간의 합의로 국가와 국제기구 간에는 체결할 수 없다.
- ② A에 제소된 사건의 당사자에는 국가와 개인이 모두 포함된다.
- ③ A는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국을 직접 제재할 수 있다.
- ④ C는 주권 평등의 원칙이 반영된 표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 ⑤ B는 C에서 선출되고 임기가 2년인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된다.

[221117]

18.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제 연합의 주요 사법 기관인 A는 판결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판결 이행을 위해서는 분쟁 당사자의 자발적 의지가 중요하다. 분쟁 당사자 일방이 A의 판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B에 호소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B가 판결의 집행을 위하여 권고하거나 취해야 할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분쟁 당사자가 B의 상임 이사국이면 이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판결 집행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국제 연합 회원국으로 구성된 C에서는 국제 연합 헌장상 A와 관련된 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① A는 문명국에 의하여 인정된 법의 일반 원칙을 재판에 적용할 수 없다.
- ② A는 15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재판관 2인 이상이 동일국의 국민일 수 없다.
- ③ 국제 사회의 법적 분쟁이라면 개인도 A에 제기되는 사건의 재판 당사자가 될 수 있다.
- ④ B는 C에서 2년의 임기로 선출되는 15개 회원국으로 구성된다.
- ⑤ C와 달리 B에서는 주권 평등의 원칙에 따라 개별 국가가 동등한 투표권을 부여받는다.

[220918]

15.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A~C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국제 연합의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된 A는 국제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논의하며,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된 B는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경제 사회 이사회는 경제, 사회, 문화 등의 국제 문제를 담당하며, C는 국제 연합의 주요 사법 기관이다.

<보 기>

- ㄱ. A에서는 분담금에 따라 의결권을 회원국에게 차등적으로 배분한다.
- ㄴ. B에서는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하면 모든 안전을 의결할 수 있다.
- ㄷ. C는 국제 관습법을 재판의 준거로 활용할 수 있다.
- ㄹ. C는 원칙적으로 분쟁 당사국들이 합의하여 분쟁 해결을 요청한 경우 관할권을 가진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11115]

19. 국제법의 법원(法源)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와 B는 각각 국제 관습법과 조약 중 하나이다.)

A와 B는 각각 별도의 경로를 통해 형성되는 별개의 법원(法源)이지만, 양자의 성립과 적용은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 이미 존재하는 B의 내용을 명문화하려는 목적으로 A가 탄생하는 경우도 있고, 형성 중이던 B가 A의 탄생을 계기로 결정적으로 확립되기도 한다. A는 이를 승인한 당사국에 대하여만 법적 구속력을 지니지만 그 내용이 국제 사회에서 절대 다수 국가의 호응을 얻는다면 B로 발전해 비당사국에게도 법적 구속력을 지니게 된다.

-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A는 우리나라에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 ② A는 국가 간의 합의이므로 국가와 국제기구 간에는 체결할 수 없다.
- ③ B는 법적 확신과 관계없이 국제 사회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일반적인 관행만 있으면 성립한다.
- ④ A는 B와 달리 국제 사법 재판소에서 재판의 준거로 활용될 수 있다.
- ⑤ B는 A와 달리 그 내용과 성립 시기가 분명하다는 특징이 있다.

[210919]

19.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A는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의 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5개의 상임 이사국과 10개의 비상임 이사국으로 구성된다.
- B는 국가 간 분쟁을 사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관으로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 ① A는 안전 보장 이사회이다.
- ② B는 국제 사법 재판소이다.
- ③ B는 국적이 모두 다른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 ④ B는 국가 간뿐만 아니라 국가와 개인 간 법적 분쟁도 다룬다.
- ⑤ A는 B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당사국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10619]

[선거구]

20.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갑국의 의회는 지역구 의원 100명과 비례 대표 의원 200명으로 구성된다. 유권자는 지역구 후보자와 정당에 각각 한 표씩 투표한다. 비례 대표 의석은 정당 투표 득표율에 비례 대표 총의석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만큼 각 정당에 배분한다. 단, t~t+2대의 의회 의원 선거에서 의회 의원 정수(定數)와 비례 대표 의원 선출 방식은 동일하다.

<자료 1>은 t~t+2대 갑국의 시기별 지역구 의원 선거 제도이다. t~t+2대의 정당 투표 득표율은 동일하며 <자료 2>와 같다. t대와 t+1대의 정당별 지역구 의석수는 <자료 3>과 같다.

<자료 1> 갑국의 시기별 지역구 의원 선거 제도

t대	소선거구 단순 다수 대표제로 선출함.
t+1대	기존 선거구 수는 유지함. 지역구 의원은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당선인으로 확정하고, 당선인이 나오지 않으면 상위 2명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실시하여 최다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함.
t+2대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기존 선거구 수를 1/4로 축소하고, 선거구별로 선출되는 의원 수는 동일하며, 득표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함. 선거구별로 각 정당은 후보자를 2인까지 공천할 수 있음.

<자료 2> 갑국의 t~t+2대 정당 투표 득표율

구분	A당	B당	C당	D당	합계
정당 투표 득표율(%)	50	10	15	25	100

* t~t+2대 정당별 비례 대표 의석수는 변함이 없음.

<자료 3> 갑국의 t대와 t+1대 지역구 의석수

구분	A당	B당	C당	D당	합계
t대(석)	20	60	10	10	100
t+1대(석)	50	35	10	5	100

- ① t+1대에 의회 총의석수 중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있다.
- ② t+1대에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동일 선거구 내 당선자 간 표의 등가성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선거구제를 채택하였다.
- ③ t+2대의 선거 결과 B당의 의회 총의석수가 50석이면,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B당의 후보자 2인이 모두 당선되는 선거구 수는 최소 5개이다.
- ④ t대의 지역구 의원 대표 결정 방식에 비해 t+1대의 지역구 의원 대표 결정 방식은 선거 비용 감소에 유리하다.
- ⑤ t대의 지역구 의원 선거구제에 비해 t+2대의 지역구 의원 선거구 제는 사표가 많이 발생하여 다양한 유권자의 의사를 반영하기 어렵다.

[260620]

20. (가)에 들어갈 수 있는 옳은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국의 의회 의원 정수(定數)는 300명으로 유권자는 지역구 의원 선출을 위해 후보자에 1표, 비례 대표 의원 선출을 위해 정당에 1표를 행사합니다. 최근 의회 의원 선거를 실시한 갑국에서는 현재의 의원 정수(定數)는 유지하면서 선거 제도 개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의회 의원의 당적 변경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자료 1>과 <자료 2>를 근거로 갑국의 선거 제도 개편안에 대해 분석해 볼까요?

<자료 1> 갑국의 현행 의회 의원 선거 제도와 최근 선거 결과

- 지역구 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구 수는 전체 지역구 의석수와 동일하며, 전체 지역구 의석수는 전체 비례 대표 의석수의 2배임.
-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는 선거구별로 최다 득표한 후보자가 당선되며, 비례 대표 의원 선거에서는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고 각 정당의 정당 투표 득표율에 비례하여 전체 비례 대표 의석수를 각 정당에 배분함.
- 현재, A당~E당이 의회 의석을 확보하고 있으며, 무소속 의원은 없음. A당~E당은 모두 지역구 의석수와 정당 투표 득표율이 일치하지 않음.

<자료 2> 갑국의 의회 의원 선거 제도 개편안

<1안>	현행에서 지역구 의원 선거 제도만 변경함.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선거구 수만 50개로 축소하고, 선거구별로 같은 수의 의회 의원을 득표순으로 선출함.
<2안>	현행에서 지역구 의원 선거 제도만 변경함.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당선을 위한 조건을 유효 투표 총수의 과반 득표로 함. 1차 투표에서 이 조건을 충족하는 후보자가 있으면 당선인으로 확정하고, 당선인이 없을 경우 1위와 2위 득표자만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최다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함.
<3안>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과 비례 대표 의원 선출 방식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함. 전체 지역구 의석수와 전체 비례 대표 의석수가 동수가 되도록 함.

(가)



< 보 기 >

- ㄱ. <1안>의 경우,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각 정당이 선거구별로 1인의 후보자만 공천하면, 특정 정당이 의회 내 과반 의석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 ㄴ. <2안>의 경우, 지역구 의원 선거 제도에는 다른 후보자들이 얻은 표를 모두 합한 것보다 더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되도록 하는 대표 결정 방식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 ㄷ. <3안>을 적용하더라도 각 정당의 정당 투표 득표율과 각 정당의 총의석률이 불일치하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51120]

10.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 단체는 t 시기와 t+1 시기에 1인의 대표자를 선출하였다. 각 시기별 후보자는 A, B, C, D로 동일하고 D가 가장 연장자이며 후보자의 연령은 D-C-B-A 순이다. ○○ 단체의 각 시기별 유권자는 100명(V1~V100)으로 변함이 없으며, 유권자는 집단별로 동일 후보자에게 투표하였다.

<자료 1>은 각 시기 유권자 집단별 투표 결과이고, <자료 2>는 각 시기별 대표 결정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자료 1>

<t 시기>

후보자	A	B	C	D
V1~V20	○			
V21~V40		○		
V41~V50		○		
V51~V80			○	
V81~V100				○

<t+1 시기>

후보자	A	B	C	D
V1~V20	○			
V21~V40		○		
V41~V50				○
V51~V80			○	
V81~V100		○		

* 유권자 1인은 1표를 행사하고, 투표율은 100%이며, 무효표는 없음.
** t+1 시기 결선 투표에 진출한 후보자를 지지한 유권자 집단은 결선 투표에서도 동일한 후보자에게 투표함.

<자료 2>

t 시기	
t 시기	가장 많은 표를 얻은 1인이 당선됨. 최다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함.
t+1 시기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득표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득표수가 많은 상위 2인에 대해 결선 투표를 실시하여 더 많은 표를 얻은 1인이 당선됨. 단, 결선 투표에서 2인의 득표수가 동수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함.

- ① t 시기 선거에서 B가 대표자로 선출되었다.
- ② t+1 시기 선거에서 결선 투표에 오르지 못한 후보자를 지지한 유권자들의 선택에 따라 C가 당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③ t 시기와 t+1 시기의 당선인이 동일하지 않다면, t+1 시기 결선 투표에서 당선인의 득표수는 최소 70표일 것이다.
- ④ t 시기 대표 결정 방식에 비해 t+1 시기 대표 결정 방식은 선거 비용 감소에 유리하다.
- ⑤ t+1 시기 대표 결정 방식에 비해 t 시기 대표 결정 방식은 당선자의 대표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250910]

갑국과 을국의 시기별 정부 형태는 전형적인 대통령제 또는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t시기 갑국과 을국의 정부 형태는 동일하지만, 을국이 정부 형태를 변경하여 t+1시기에는 갑국과 을국의 정부 형태가 동일하지 않다. 표는 갑국과 을국의 t시기와 t+1시기의 의회 의원 선거 결과와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을 나타낸다.

<갑국의 의회 의원 선거 결과와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

시기	구분	A 당	B 당	C 당	전체 의석수(석)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
t	지역구 의석수(석)	96	101	3	200	A 당
t+1	지역구 의석수(석)	88	107	5	200	A 당

<을국의 의회 의원 선거 결과와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

시기	구분	a 당	b 당	c 당	전체 의석수(석)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
t	지역구 의석수(석)	47	45	8	100	b 당
t+1	지역구 의석수(석)	52	37	11	200	a 당
	정당 투표 득표율(%)	48.8	33.7	17.5		

* 갑국과 을국 모두 각 시기의 정부 형태와 선거 제도는 해당 시기 내에서 동일하며, 각 시기 내 정당별 의회 의석수 변화와 행정부 수반의 당적 변화는 없음.
** t시기와 t+1시기 모두 갑국에는 A~C 당만, 을국에는 a~c 당만 존재하고, 갑국과 을국 모두 무소속 의원은 없음.

t시기 갑국과 을국 모두 의회 전체 의석수는 선거구 수와 동일하다. 한편, 갑국의 의회 의원 선거 제도는 t시기와 t+1시기에 동일하지만, 을국은 선거 제도를 개편하여 t시기와 t+1시기의 의회 의원 선거 제도가 동일하지 않다. 다음은 t+1시기에 적용된 을국 의회 의원 선거 제도의 내용이다.

- 유권자 1인은 지역구 의원 선출을 위해 후보자에 1표, 전국구 비례 대표 의원 선출을 위해 정당에 1표를 행사한다. 지역구 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구는 30개로 축소하고, 각 선거구별로 같은 수의 지역구 의원을 득표순으로 선출한다.
- 비례 대표 의석은 각 정당의 정당 투표 득표율에 전체 비례 대표 의석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数)만큼 각 정당의 의석으로 배분하고, 이후 잔여 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서대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10. 위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보 기>

- ㄱ. 갑국은 '동일 선거구 내 당선자 간 표의 등가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선거구제를 적용하여 지역구 의회 의원을 선출하였다.
- ㄴ. t+1시기 을국 의회에는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있다.
- ㄷ. t+1시기에 적용된 을국 의회 의원 선거 제도에는 정당 득표율과 의회 의석률 간 불일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대표 결정 방식이 포함되어 있다.
- ㄹ. t시기와 t+1시기 모두 을국의 각 정당은 지역구 의회 의원 선거에서 선거구별로 1인의 후보자만 공천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50610]

20.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국 의회는 지역구 의원 100인과 비례 대표 의원 100인으로 구성된다. 유권자는 지역구 의원 선출을 위해 후보자에 1표를 행사하며, 비례 대표 의석은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비례하여 정당별로 배분된다.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각 선거구별로 선출되는 지역구 의원 수는 같고, 각 정당은 선거구별로 1인의 후보자만 공천한다. 갑국에는 A~E당만 존재하며, 최근 의회 의원 선거 결과 B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은 비례 대표 의석률이 지역구 의석률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는 최근 의회 의원 선거 결과에 따른 지역구 의석수를 나타낸다.

구분	A당	B당	C당	D당	E당	무소속
지역구 의석수(석)	30	51	12	4	1	2

갑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회 의원 선거 제도 개편안이 검토되고 있다.

(가) 선거일에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유권자들을 위해 선거일 전 미리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투표제 도입

(나)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어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에게도 선거권을 부여

(다) 지역구 의원 선출을 위해 후보자에 1표, 비례 대표 의원 선출을 위해 정당에 1표를 행사하는 1인 2표제 도입

- <보 기>
- ㄱ. 갑국은 최근 실시한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동일 선거구 내 당선자 간 득표율 차이로 표의 등가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선거구제'를 채택하지 않았다.
- ㄴ. 최근 의회 의원 선거 결과 B당은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 ㄷ. (가)와 (나) 모두 유권자의 수를 증가시켜 보통 선거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다.
- ㄹ. (다)는 현행 의회 의원 선거에서 정당 소속 후보자에게 투표한 유권자와 무소속 후보자에게 투표한 유권자 간에 투표 가치의 불평등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241120]

20. (가)에 들어갈 수 있는 옳은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우리나라의 선거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 갑국의 선거 제도 개편안을 살펴보려 합니다. 현재 갑국 의회는 지역구 의원으로만 구성되며, 80개의 선거구에서 선거구별로 최대 득표한 후보자가 의회 의원으로 선출됩니다. 또한 갑국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선거에서 최대 득표한 후보자가 당선됩니다. 갑국에서는 의회 의석을 확보한 5개 정당 중 특정 정당이 의회 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며, 의회 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 모두에서 사표가 많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자료1>은 갑국 의회 의원 선거 제도 개편안이고, <자료2>는 갑국 대통령 선거 제도 개편안입니다. 이에 대해 분석해 볼까요?

<자료1> 갑국 의회 의원 선거 제도 개편안

- 의회 의원 정수(定數) 80명과 유권자 1인이 1표를 행사하는 방식은 유지하지만, 선거구를 20개로 축소하고 각 정당이 선거구별로 최대 2인까지 후보자로 공천할 수 있도록 함. 선거구별로 같은 수의 의회 의원을 득표순으로 선출함.
- 선거구 간 인구 편차의 허용 기준을 현재의 전국 선거구 평균 인구수 기준 '상하 33% 인구 편차'에서 '상하 20% 인구 편차'로 변경함.

<자료2> 갑국 대통령 선거 제도 개편안

당선을 위한 조건으로 유효 투표 총수의 과반 득표라는 제한을 둬, 1차 투표에서 이 조건을 충족시킨 후보자가 있으면 당선자로 확정하고, 당선자가 없을 경우 1위와 2위 득표자만을 상대로 2차 투표를 실시함.

(가)

 학생

- <보 기>
- ㄱ. 갑국의 개편안에는 의회 의원 선거에서 선거구 간 '표의 등가성'이 강화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ㄴ. 갑국의 의회 의원 선거에서 현행과 달리 개편안은 특정 정당이 의회 의석의 50%를 차지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 ㄷ. 갑국 의회 의원 선거 제도 개편안의 선거구제는 우리나라 지역구 광역 의회 의원 선거의 선거구제와 동일합니다.
- ㄹ. 갑국의 개편안 적용 시 대통령 선거에서 전체 유권자 과반의 표를 얻지 못한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240920]

20.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갑국의 초대 의회는 총 6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고, 3개의 지역에서 각각 2명씩 선출되었다. 초대 의회 의원은 임기가 6년인 의원 2명, 4년인 의원 2명, 2년인 의원 2명이고, 동일 지역에서 선출된 의원의 임기는 서로 다르다. 초대 의회 구성 이후 2년마다 갑국은 임기가 만료되는 의원이 있는 지역에서 임기 6년의 의원을 선출하고 있다.

- 각 지역을 대표하는 2명의 의원은 임기가 적게 남은 선임 의원과 임기가 많이 남은 후임 의원으로 구분된다.
- [자료 1]은 초대 의회가 구성되고 2년 후인 t년에 지역 1과 지역 3에서만 실시된 의회 의원 선거 결과를 반영한 지역별 의회 의원의 소속 정당을 나타낸다.
- [자료 2]는 t+2년과 t+4년에 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된 지역의 의회 의원 선거 결과 당선된 의원의 소속 정당을 나타낸다.

[자료 1]

구분	지역 1	지역 2	지역 3
선임 의원	A 당	A 당	C 당
후임 의원	B 당	D 당	B 당

[자료 2]

구분	지역 1	지역 2	구분	지역 2	지역 3
t+2년	B 당	A 당	t+4년	B 당	A 당

* 초대 의회 구성 이후 의회 의원 수는 6명으로 유지되었고, 의원이 임기 만료 전 도중에 교체된 적은 없으며, 의원의 당적 변경은 없음.

- ① t년 의회 의원 선거에서 선출된 의원 중 C 당 소속 의원은 1명이다.
- ② t+2년 의회 의원 선거 결과 의회에서 A 당의 의석수는 2석이다.
- ③ t+2년 의회 의원 선거 결과 지역 2에서는 선임 의원과 후임 의원의 소속 정당이 일치한다.
- ④ t+4년 의회 의원 선거 결과 B 당은 의회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 하였다.
- ⑤ t+4년 의회 의원 선거 결과 의회에서 D 당의 의석수는 1석이다.

[240620]

20.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갑국 의회는 단순 다수제로 선출되는 지역구 의원 10인, 비례 대표 의원 10인으로 구성되며, 유권자는 지역구 의원 선출을 위해 후보자에 1표, 비례 대표 의원 선출을 위해 정당에 1표를 행사한다. 비례 대표 의석은 정당 투표 득표율에 비례 대표 총의석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数)만큼 각 정당의 의석으로 배분하고, 이후 잔여 의석은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순서대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표는 최근 갑국 의회 의원 선거 결과를 나타낸다.

(단위: 표, %)

구분	A 당	B 당	C 당	D 당	E 당
선거구 1	120	150	25	45	65
선거구 2	100	125	45	65	40
선거구 3	85	75	50	20	15
선거구 4	65	45	70	35	25
선거구 5	150	80	45	65	20
선거구 6	65	95	30	25	45
선거구 7	100	80	65	30	20
선거구 8	60	75	35	15	45
선거구 9	110	65	30	45	35
선거구 10	90	105	25	75	10
정당 투표 득표율	31.6	22	15	12.4	19

* 정당은 A~E 당만 존재하고 무소속 후보자는 없으며, 투표율은 100%이고 무효표는 없음.

갑국은 다음과 같이 선거 제도 개편안을 검토 중이며 개편안 적용 시 C 당과 D 당은 합당하여 F 당으로 창당한 후 선거에 참가한다. 개편안은 최근 의회 의원 선거 결과만을 근거로 판단하며,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C 당, D 당의 후보자에게 투표했던 유권자는 모두 F 당의 후보자에게 투표하고 비례 대표 의원 선거에서 C 당, D 당에 투표했던 유권자는 모두 F 당에 투표한다고 가정한다.

<1안>	현재의 총의석수를 기준으로 현행 비례 대표 의석 배분 방식에 따라 정당별 의석수를 먼저 할당한다. 각 정당별로 할당된 의석수에서 단순 다수제로 선출된 지역구 의원 의석수를 뺀 나머지 의석수를 비례 대표 의석으로 배정한다. 만일 어떤 정당의 지역구 의원 의석수가 할당된 의석수보다 더 많다면 초과 의석을 인정하되 비례 대표 의석은 배분하지 않는다. 초과 의석으로 인해 갑국의 의회 의원 정수(定數)는 늘어날 수 있다.
<2안>	현재의 총의석수를 유지하면서, 선거구 1~선거구 10에서 득표순으로 2인의 지역구 의원을 선출한다. 각 정당은 선거구별 1명의 후보자를 공천한다.

- ① 현행에서 A 당과 B 당의 의석수 차이는 1석이다.
- ② <1안> 적용 시 B 당이 얻는 초과 의석수는 2석이다.
- ③ <1안> 적용 시 F 당은 현행에서 C 당과 D 당이 얻은 의석수의 합보다 1석을 더 얻게 된다.
- ④ <1안> 적용 시와 <2안> 적용 시 F 당의 총의석률은 동일하다.
- ⑤ <2안> 적용 시 A 당과 E 당의 의석수 차이는 <1안> 적용 시 A 당과 E 당의 의석수 차이의 4배이다.

[231120]

20.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갑국의 의회 의원 정수(定數)는 8명으로, 선거구별로 유권자 수가 동일한 8개의 선거구에서 단순 다수제로 의회 의원을 선출하고 있다. 갑국은 '가 지역'과 '나 지역'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며, 4개 선거구(가 1~가 4)는 '가 지역'에, 4개 선거구(나 1~나 4)는 '나 지역'에 있다. 표는 갑국의 최근 의회 의원 선거의 정당별 득표율을 나타낸다.

(단위: %)

선거구	정당	A당	B당	C당	D당
가 1		40	20	5	35
가 2		40	15	15	30
가 3		65	20	10	5
가 4		55	25	10	10
나 1		15	15	30	40
나 2		5	30	25	40
나 3		10	15	25	50
나 4		30	20	0	50

*정당은 A당~D당만 존재하고 무소속 후보자는 없으며, 투표율은 100%이고 무효표는 없음.

갑국은 차기 선거를 앞두고 현재의 의회 의원 정수를 유지하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선거 제도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 선거 제도 개편안 검토 시 최근 의회 의원 선거 결과만을 근거로 판단한다.

<1안>	선거구 가 1-가 2, 가 3-가 4, 나 1-나 2, 나 3-나 4를 통합하여 선거구를 4개로 축소하고, 각 선거구에서 득표순으로 2명의 의회 의원을 선출한다. 유권자는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자에게 1표를 행사한다. 정당이 후보자를 공천할 때 선거구별로 2인이 당선 가능한 경우 2인을, 그렇지 않은 경우 1인을 공천한다.
<2안>	'가 지역'과 '나 지역'을 각각 1개의 선거구로 만들고, 각 선거구에서 4명의 의회 의원을 선출한다. 유권자는 의회 의원 선출을 위해 지지하는 정당에 1표를 행사하며, 각 선거구별 의석을 해당 선거구 내 정당 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한다. 각 선거구의 정당 득표율에 해당 선거구의 의석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만큼 각 정당의 의석으로 배분하고, 이후 잔여 의석은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순서대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선거 제도 개편 전후 유권자의 지지 정당은 변함이 없으며, <2안>의 경우 유권자는 최근 의회 의원 선거에서 투표한 후보자의 소속 정당에 정당 투표함.

- ① 현행에서 A당과 D당은 모두 과대 대표되고, <2안> 적용 시 B당과 C당은 모두 과대 대표된다.
- ② <2안> 적용 시 A당의 '가 지역' 의석수는 D당의 '나 지역' 의석수보다 많다.
- ③ <2안> 적용 시 D당의 총의석률은 정당 전국 득표율과 일치한다.
- ④ A당은 <1안> 적용 시 얻을 수 있는 최대 의석수와 <2안> 적용 시 얻을 수 있는 총의석수가 동일하다.
- ⑤ B당은 <1안>보다 <2안> 적용이 유리하고, C당은 <1안>, <2안> 모두 현행보다 유리하다.

[230920]

20.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대표 선거를 앞둔 ○○ 단체는 환경 보호 정책에 대하여 논의 중이다. 이에 모든 회원 101명을 대상으로 환경 보호의 선호도(이하 '선호도'라 함)를 1~11의 점수로 구분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 그래프와 같으며 가로축은 선호도 점수, 세로축은 각 선호도 점수에 해당하는 회원 수를 나타낸다.

대표 선거에 회원 A~D가 출마를 고민 중이며 이들의 선호도 점수는 A는 4, B는 5, C는 7, D는 9이다. 한편, ○○ 단체는 대표 선거 제도로 <1안>과 <2안> 중 하나를 채택하려고 한다.

<1안> 가장 많은 표를 얻은 1인이 당선됨.

<2안>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득표한 후보자가 당선되나,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득표수가 많은 상위 2인에 대해 결선 투표를 실시하여 최다 득표자 1인이 당선됨.

모든 회원은 출마한 후보자의 선호도 점수를 알고 있다. 선호도 점수가 동일한 집단의 각 회원은 자신과 선호도 점수 차이가 가장 작은 후보자에게 1표를 행사하며, 선호도 점수 차이가 가장 작은 후보자가 2명이라면 두 후보자는 해당 집단 전체 표의 절반씩을 얻는다. 단, 후보자는 자신에게 투표하며 결선 투표에 진출하지 못한 경우 결선 투표 시 자신과 선호도 점수 차이가 가장 작은 후보자에게 투표한다. 투표율은 100%이고, 무효표는 없으며 회원들의 선호도 점수는 변경되지 않는다.

- ① <1안>에 비해 <2안>의 선거 제도는 선거 비용 감소에 유리하다.
- ② <2안>에 비해 <1안>의 선거 제도는 당선자의 대표성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
- ③ A, B, D만 출마한다면 <1안>과 <2안>에서 당선자는 동일인이다.
- ④ A, C, D만 출마한다면 <2안>에서 결선 투표에 진출한 후보자 간 결선 투표 득표수 차이는 10보다 크다.
- ⑤ A, B, C, D 모두 출마한다면 <2안>에서 A가 당선된다.

[230620]

16.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갑국 의회는 단순 다수제로 선출되는 지역구 의원 6인과 비례 대표 의원 9인으로 구성되며, 유권자는 지역구 의원 선출을 위해 후보자에 1표, 비례 대표 의원 선출을 위해 정당에 1표를 행사한다. 비례 대표 의석은 정당 투표 득표율에 비례 대표 총의석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만큼 각 정당의 의석으로 배분하고, 이후 잔여 의석은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순서대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표는 최근 갑국 의회 의원 선거 결과를 나타낸다.

(단위: 표, %)

구분	A 당	B 당	C 당	D 당	E 당
선거구 1	50	60	50	10	30
선거구 2	140	10	10	10	30
선거구 3	60	30	20	70	20
선거구 4	40	20	100	20	20
선거구 5	20	60	50	40	30
선거구 6	20	10	150	10	10
정당 투표 득표율	20	40	5	20	15

* 정당은 A~E 당만 존재하고 무소속 후보자는 없으며, 투표율은 100%이고 무효표는 없음.

갑국은 현재의 의원 정수(定數)를 유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거 제도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편안의 경우 최근 의회 의원 선거 결과만을 근거로 판단한다.

구분	A 당	B 당	C 당	D 당
지역구 의석수(석)	22	30	4	4
정당 득표율(%)	34	43	16	7

* 정당은 A~D 당만 존재하고 무소속 후보는 없으며, 투표율은 100%이고 무효표는 없음.
** 개편안의 경우 위 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유권자는 최근 선거에서 투표한 후보자의 소속 정당에 정당 투표함.

지역구 의원 선거: 선거구 1-2, 3-4, 5-6을 통합하여 선거구를 3개로 축소하고, 각 선거구에서 득표순으로 2인의 대표를 선출한다. 정당이 후보자를 공천할 때,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선거구별로 2인이 당선 가능한 경우 2인을, 그렇지 않은 경우 1인을 공천한다.

비례 대표 의원 선거: 정당 투표 득표율에 전체 의석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만큼 각 정당의 의석으로 배분하고, 이후 잔여 의석은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순서대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하여 전체 의석수를 할당한다. 정당별로 할당된 의석수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뺀 나머지 의석수를 정당별 비례 대표 의석으로 배정하되, 어떤 정당의 지역구 의석수가 할당된 의석수보다 더 많다면 초과 의석은 인정하나 비례 대표 의석은 배분하지 않는다. 초과 의석으로 인해 의원 정수는 늘어날 수 있다.

- ① 현행에서 A 당은 총의석률이 정당 투표 득표율보다 더 높다.
- ② 현행에서 D 당은 지역구 의석수가 비례 대표 의석수보다 더 많다.
- ③ 개편안 적용 시 C 당의 총의석수는 최소 2석, 최대 3석이다.
- ④ 개편안 적용 시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B 당이 최대 의석수를 확보하면 B 당은 초과 의석을 얻게 된다.
- ⑤ A 당의 경우 현행보다 개편안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고, E 당의 경우 선거 제도 개편에 따른 유불리는 없다.

[221116]

20.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소선거구 단순 다수 대표제로 60명의 지역구 의원만을 선출하는 갑국은 의회 의원 선거 제도를 개편하려고 한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의 지역구 의원 선거 제도는 유지되고 비례 대표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전체 의석수가 현재의 1.5배가 되며, 유권자는 지역구 의원 후보자와 정당에 각각 1표씩 행사하게 된다. 갑국은 지역구 의원 선거와 동시에 실시될 비례 대표 의원 선거 방안을 다음과 같이 검토하고 있다.

구분	A 당	B 당	C 당	D 당
지역구 의석수(석)	22	30	4	4
정당 득표율(%)	34	43	16	7

* 정당은 A~D 당만 존재하고 무소속 후보는 없으며, 투표율은 100%이고 무효표는 없음.
** 개편안의 경우 위 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유권자는 최근 선거에서 투표한 후보자의 소속 정당에 정당 투표함.

<1안> 정당 득표율에 비례 대표 의석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만큼 각 정당의 의석으로 배분하고, 이후 잔여 의석은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순서대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2안> 정당 득표율에 전체 의석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만큼 각 정당의 의석으로 배분하고, 이후 잔여 의석은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순서대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하여 전체 의석수를 할당한다. 정당별로 할당된 의석수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뺀 나머지 의석수를 각 정당별 비례 대표 의석으로 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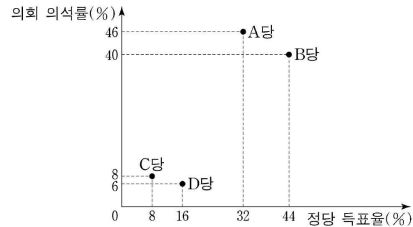
아래 표에서 지역구 의석수는 최근 선거 결과이며, 정당 득표율은 각 정당별 지역구 의원 후보자의 득표수를 합산하여 산출한 것이다.

- ① <1안> 적용 시 B 당은 의회 내 과반 의석을 확보한다.
- ② <2안>은 <1안>에 비해 정당 득표율과 비례 대표 의석률 간의 차이가 적어 비례성이 높다.
- ③ <2안> 적용 시 비례 대표 의석수는 B 당이 A 당보다 많다.
- ④ <2안> 적용 시 C 당의 총의석수는 <1안> 적용 시 B 당의 비례 대표 의석수보다 많다.
- ⑤ D 당은 <1안>보다 <2안>으로 개편하는 것이 유리하다.

[220920]

20.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를 채택하고 있는 갑국의 의회는 지역구 의원 70인과 비례 대표 의원 30인으로 구성되며, 유권자는 지역구 의원 선출을 위해 후보자에 1표, 비례 대표 의원 선출을 위해 정당에 1표를 행사한다.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각 정당은 선거구별로 1인의 후보자만 공천하며 각 선거구별로 선출되는 지역구 의원 수는 같다. 비례 대표 의석은 각 정당이 얻은 정당 득표율에 비례 대표 의원 정수(定數)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만큼 각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 의석은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순서대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갑국은 현재의 의원 선출 방식과 지역구 의원 수는 유지하되, 비례 대표 의원 수는 늘려서 전체 의원 수를 현재의 1.5배가 되도록 하는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림은 현행 선거 제도에서 실시된 갑국의 최근 의회 의원 선거 결과를 나타낸다.



*정당은 A~D당만 존재하고 무소속 후보는 없으며, 투표율은 100%이고 무효표는 없음.
**개편안 적용 시 최근 의회 의원 선거의 정당 득표율과 지역구 의원 선거 결과만을 근거로 판단함.

- ① 현재 지역구 의원 선거의 선거구 제도는 ‘선거구 내 당선자 간 표의 등가성 문제’가 발생한다.
- ② 최근 선거 결과 D당의 비례 대표 의석수는 C당의 비례 대표 의석수의 2배이다.
- ③ 개편안 적용 시 A당의 의회 의석수와 B당의 의회 의석수는 같다.
- ④ 개편안 적용 시 C당의 정당 득표율과 C당의 의회 의석률은 일치하지 않는다.
- ⑤ 최근 선거 결과에서뿐만 아니라 개편안을 적용했을 때에도 B당과 D당만으로는 연립 내각이 구성될 수 없다.

[220620]

20.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갑국의 대통령 선거에서는 각 지역에 배정된 선거인단을 가장 많이 확보한 후보자가 대통령으로 선출된다. 각 지역에는 유권자 100명당 선거인단 1명씩 배정되며 지역별 선거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는 해당 지역 선거인단을 모두 확보한다.

갑국의 의회는 4개의 선거구에서 선출된 8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각 선거구에서는 득표순으로 2인의 의원이 선출되며, 각 정당은 한 선거구에 1명의 후보자를 공천한다. 선거구는 경계선이 접한 2개의 지역을 1개로 통합하여 확정하되 대각선 방향의 통합은 고려하지 않으며, 통합 후 한 선거구 유권자 수가 다른 한 선거구 유권자 수의 2배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한다.

최근 갑국에서는 대통령 선거와 의회 의원 선거가 동시에 각각 실시되었고, 모든 유권자는 선호하는 정당의 후보자에게 투표하여 대통령과 의회 의원이 선출되었다. 단, 대통령 선거에서는 A당과 C당에서만 후보자가 출마하였으며 B당을 선호하는 유권자는 A당 후보자에게, D당을 선호하는 유권자는 C당 후보자에게 투표하였다. 다음은 갑국의 모든 지역별 위치 및 유권자 수와 모든 유권자의 정당 선호도를 나타낸다.

<지역별 위치 및 유권자 수> (단위: 명)		<지역별 유권자의 정당 선호도> (단위: %)				
지역1 (500)	지역2 (200)	구분	A당	B당	C당	D당
지역3 (500)	지역4 (300)	지역1	40	20	30	10
		지역2	30	10	40	20
		지역3	30	50	10	10
지역5 (100)	지역6 (100)	지역4	50	10	30	10
		지역5	30	10	10	50
지역7 (400)	지역8 (400)	지역6	30	10	40	20
		지역7	10	10	60	20
		지역8	10	10	60	20

* 정당은 A~D당만 존재하고 무소속 후보자는 없음.
** 유권자의 정당 선호도는 변함이 없고, 유권자는 대통령 선거에 1표, 의회 의원 선거에 1표를 행사하였으며 무효표는 없음.

- ① 의회 의원 선거의 대표 결정 방식은 절대다수 대표제이다.
- ② 전체 유권자 과반의 표를 얻은 후보자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 ③ 의회 내 가장 많은 의석을 확보한 정당은 A당이다.
- ④ 선출된 대통령의 소속 정당과 D당은 확보한 의석수가 같다.
- ⑤ 의회 의원 선거 결과 B당과 C당은 모두 득표율에 비해 의석률이 낮다.

[211120]

20.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갑국의 의회 의원 정수(定數)는 5명이다. 현재 갑국은 5개의 선거구에서 선거구마다 최대 득표자 1인을 의원으로 선출하고 있다. 그러나 차기 선거를 앞두고 의원 정수는 유지하면서 현재의 선거구제인 □(가)를 □(나)로 변경하여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하고자 한다. 개편안에 따르면 전국적 수준의 한 선거구에서 5명의 의원을 선출하며, 의석수는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여 각 정당에 배분한다. 아래 표는 현행 선거 제도에서 실시된 갑국의 의회 의원 선거 결과이다.

<정당별 득표 결과> (단위: 표)

선거구 \ 정당	A당	B당	C당	D당	합계
선거구 1	160	140	80	20	400
선거구 2	90	270	220	20	600
선거구 3	135	120	35	10	300
선거구 4	120	180	80	20	400
선거구 5	125	100	45	30	300
합계	630	810	460	100	2,000

* 유권자 1인은 1표를 행사하고, 전체 유권자 수는 2,000명임.
** 개편안의 경우 위 표를 근거로 차기 선거 결과를 판단함.
*** 개편안의 경우 각 정당 득표율에 의석수를 곱하여 산출된 정수(整數)만큼 의석을 각 정당에 배분하고, 잔여 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서대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함.

- ① (가)는 (나)에 비해 군소 정당의 난립 가능성이 높다.
- ② A당은 선거 제도가 개편되는 경우 의석수를 확보하는 데 현행 보다 유리하다.
- ③ B당은 현행 선거 제도의 의석수와 개편 이후 의석수가 동일하다.
- ④ C당은 선거 제도가 개편되면 사표가 많이 발생하여 현행보다 정당 득표율과 의석률의 불일치가 심화된다.
- ⑤ D당은 현행 선거 제도에서 과소 대표되었지만 개편 이후 과대 대표된다.

[210920]

20.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국의 의회는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선출된 200명과 비례 대표 의원 선거에서 선출된 100명으로 구성된다. 지역구 의원 선거의 대표 결정 방식은 1인을 선출하는 단순 다수 대표제이며, 비례 대표 의원 선거에서는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여,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유권자 1인은 지역구 의원 선거와 비례 대표 의원 선거에 각 1표씩 2표를 행사한다. 갑국에서는 의회 의원 선거 직후 의회 과반수를 확보한 단독 정당이 행정부 수반을 배출한다. 단독 과반수 정당이 없는 경우 복수의 정당이 연합하여 행정부 수반을 배출한다. 아래 표는 최근 실시된 갑국의 의회 의원 선거 결과이다.

<지역구 의원 선거>

구분	득표율(%)	의석률(%)
A당	50	45
B당	15	20
C당	25	20
D당	10	15

<비례 대표 의원 선거>

구분	득표율(%)	의석률(%)
A당	33	33
B당	26	26
C당	35	35
D당	6	6

* 정당은 A~D당만 존재하고 무소속 출마자는 없으며, 각 선거의 투표율은 100%, 무효표는 없다.
** 지역구 의원 선거의 득표율은 각 정당이 전국 모든 지역구 선거구에서 얻은 표를 총투표자 수 대비로 구한 비율이다.

<보 기>

- ㄱ.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득표율 20% 미만인 정당은 과대 대표 되었다.
- ㄴ. 행정부 수반을 배출하는 정당의 연합에는 A당이 반드시 포함 된다.
- ㄷ. 지역구 의원 선거 득표율과 총의석률의 격차가 가장 작은 정당은 C당이다.
- ㄹ. A당과 D당의 총의석률의 합은 B당과 C당의 총의석률의 합보다 크다.

-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210620]